

기획 — 특집

# 참깨 민주주의:

## 숙의민주주의 관점으로 보는 한살림운동

- 한살림 물품 논쟁을 돌아보며
- [난상토론] 한살림 사람들, 참깨수입과 민주주의를 말하다
- 한살림의 참깨 논의에 대한 숙의민주주의의 적용과 의미
- 숙의민주주의 딜레마와 한살림 민주주의

정기구독 안내

# 모심과 살림

생명·협동운동의 이론과 담론,  
한살림 안팎의 보다 다양한 현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해 소개합니다.

## 구독료

1년 1만 5천 원

## 구독신청

이메일 [mosim@hansalim.or.kr](mailto:mosim@hansalim.or.kr) 전화 02-6931-3608 누리집 [www.mosim.or.kr](http://www.mosim.or.kr)

연구소 누리집에서 지난 글을 보실 수 있으며, 과월호 구입도 가능합니다.



## 투고를 받습니다

지면에 수록하고 싶은 글(또는 주제와 구성안)을 보내주세요.  
편집부 검토를 거쳐 수록하며, 해당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독자모임을 지원합니다

『모심과살림』 독자 모임을 진행하실 경우 연구소로 연락주시면 『모심과살림』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모심과살림』 17호를 읽고 난 소감문을 보내주시면 더 좋은 책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짧은 의견을 적어주시거나 인상 깊었던 구절을 나누어주셔도 됩니다.

나눠주신 의견은 차기호 지면에 소개될 수 있으며, 수록된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QR코드를 통해 『모심과살림』 독자 의견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알차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모심과살림』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락주실 곳 [mosim@hansalim.or.kr](mailto:mosim@hansalim.or.kr)

# 모심과 살림

17호

---

## (사)모심과살림연구소는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과 사회, 문명을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되는  
지혜를 탐구하고자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협동운동에 대한 연구조사와 세미나 및 포럼,  
관련 연구자 및 단체와의 교류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 모심과살림 17호 2021년

**등록번호** 강남, 사00117  
**발행인** 황도근  
**편집자문위원** 신명호, 정규호, 홍덕화, 임채도  
**편집부** 조미성, 김진아, 최민영  
**디자인** 그린다  
**펴낸 날** 2021년 7월 20일  
**펴낸 곳** (사)모심과살림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81길 15 4층  
[www.mosim.or.kr](http://www.mosim.or.kr) / [mosim@hansalim.or.kr](mailto:mosim@hansalim.or.kr) / 02-6931-3608

책값은 8천원입니다.

## 모심의 눈

- 전환의 시대, 한살림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 황도근 4

## 기획의도

- 한살림, 변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사이 - 모심과살림 편집부 8

## 기획특집

### 참깨 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관점으로 보는 한살림운동

- 한살림 물품 논쟁을 돌아보며 - 임재도 14
- 〈난상토론〉 한살림 사람들, 참깨수입과 민주주의를 말하다 30
- 한살림의 참깨 논의에 대한 숙의민주주의의 적용과 의미 - 정규호 50
- 숙의민주주의 딜레마와 한살림 민주주의 - 조미성 70

## 이슈

### 산안마을 조류 ‘살처분’을 통해 던지는 생명에 대한 물음

- 〈인터뷰〉 산안 마을에 가다 94
- 지옥의 기원 - 채효정 110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생태 감수성 - 김산하 128

## 담론 연재

### 생명운동을 보는 다양한 시각

- ‘사회의 자기기술’로서 녹색전환과 한살림선언 - 박순열 140

## 시선

### 코로나 시대를 보는 다른 시선

- ‘바이러스와의 전쟁’ 은유의 의미와 한계 - 김훈기 168

## 독자기고

- 한살림운동의 정체성 논의에 대해 - 류하 184

모심의 눈

전환의  
시대,  
한살림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며칠 전 아내와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바이러스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은 온라인 화상수업이 자리를 잡았고, 모임도 대면 회의보다 온라인 회의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노동자들은 생계를 잃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는 어울려 살던 우리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동안 인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좋은 관계’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모두 혼재한 ‘새로운 관계’로 재정립될 듯합니다. 올해 말쯤 많은 분들이 백신을 접종한다 해도, 많은 것들을 코로나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관계하고 있는 조직은 대학과 한살림입니다. 지금 대학은 전환의 시대를 극복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미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은 너무 많이 변해버렸고, 그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과 고민을 교수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교재 중심의 교육은 생명력과 현장성을 잃었고 수업방식도 온라인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예상컨대 기존의 고 3 학생만을 모집해서 교육하는 구조 대신 새로운 교육 대상자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한살림은 어떨까요? 한살림은 코로나 시대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건강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집밥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한살림은 일시적으로나마 재정적자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끈끈한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역 모임이나 교육활

동이 주춤했고 생산자 농민과 조합원들이 만나 연대의 마음을 확인하는 농도 교류 활동도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한살림운동을 어떤 형태로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한살림운동에도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환경 파괴적이고 소비적인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두 차례 무위당학교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했는데, 주제가 ‘기후위기’와 ‘전환마을운동’이었습니다. 현장 대면 강의는 줄었지만 온라인으로 등록한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거의 1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수강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 이상으로 변화와 대안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살림다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통일된 고정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감하게 세대별, 지역별로 약간 다른 무지개 모습의 ‘한살림다운’ 운동의 형태가 새롭게 탄생해야 합니다. 지금 한살림은 30여 년 전 시작한 생명살림, 농업살림, 밥상살림이라는 초기 한살림 운동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직되고 위계적인 조직은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어렵습니다. 전환의 시대에는 기존 나이별 피라미드 구조에서 벗어나 세대별 조직별 순환적 역할로 변화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는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흑백의 고정틀 대신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시대 변화와 기회의 물결을 타고 제2의 한살림운동을 새롭게 꽃피웠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지면을 통해 두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6월 8일 안성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모두가 놀라고 걱정했습니다. 모든 현장 실무자가 철수하면서 물류가 정지했고, 대신 연합과 지역 실무자와 생산자분들이 투입되어 물류를 집품하고 포장했습니다. 모두 처음 하는 일이어서 실수가 있었고 손에 익지 않아 밤 12시 넘어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되었고 이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실무자가 하는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비록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토의하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실무자나 활동가 이사분들이 이런 물류현장 체험도 해보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비록 힘든 고비였지만 땀을 흘리면서 한살림 식구의 동질성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살림 식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주에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협동적 삶과 생명사상을 공부할 수 있는 ‘생명협동교육관’이 건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약 4년에 걸쳐 준비된 공간으로 18개의 숙소와 교육실, 복합문화공간, 공유주방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7-8월 준비기간을 거쳐서 9월 개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살림 운동의 본향인 원주에 오시면 편히 쉬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협동교육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괴산에 추진 중인 한살림연수원이 잘 준비되어 생명협동의 교육과 영성이 함께하며 대안운동의 산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6월  
황도근 모심

기획의도

한살림,  
변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사이

모심과살림지 17호는 어느 때보다도 한살림 내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처음 기획을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살림에서 해야 하는 이야기, 한살림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생태적 위기와 보건 위기가 초래한 사회변화 속에서 한살림이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변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이번 원고들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살림다운’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보기를 제안합니다.

변화의 시대, 모심과살림지가 기존 한살림운동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라도 툭 꺼내놓고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려운 곳이 있다면 긁어보고 고인 곳이 있다면 흐르게 했으면 합니다. 이 작은 책자는 밑줄을 긋고 공부하는 책이 될 수도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갖는 치열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우리 생활과 운동에 반영하여 실천하는 작은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획특집]은 ‘참깨와 민주주의 : 속의민주주의 관점으로 보는 한살림운동’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한살림은 협동조합 사업체의 형태로 한살림운동을 풀어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먼저 <한살림 물품논쟁을 돌아보며>에서는 그간 있었던 여러 물품 관련 논쟁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한살림에서 물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한살림 사람들, 참깨수입과 민주주의를 말하다>는 연구소에서 열었던 작은 토론회 기록입니다.

작년 50여 일간 있었던 장마는 노지 작물 생산의 어려움을 가져왔고, 특히 참깨 작황이 심각한 위기에 몰렸습니다. 결국 가공에 필요한 참기를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입을 결정하고자 조합원 설문조사를 했고 최종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다수 조합원들 사이에서 한살림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에 대한 분분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그 중에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과 새로운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소에서는 한살림 사람들 중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는 온라인 토론회 열었고, 그 안에서 오간 생산자, 조합원, 실무자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원고에 담았습니다. 토론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질문은 “한살림다운 결정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이 질문은 현재 한살림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토론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와중에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살림의 참깨 논의에 대한 숙의민주주의 적용과 의미>라는 글에서는 참깨 수입 논의의 전개과정을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되짚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숙의민주주의는 의사결정 과정에 시사점을 주는 새로운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판받는 문제점과 약점도 있습니다. <숙의민주주의 딜레마와 한살림 민주주의>에서는 숙의민주주의의 약점과 딜레마를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도들과 함께 한살림에 적합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을 던져보았습니다.

[이슈]에서는 가축 ‘살처분’을 다루었습니다. 한살림 식구들은 대량 살처분을 보며 대부분 괴롭고 속상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살처분’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행

정 명령에 의문을 던지며,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명들과 공존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현장 인터뷰 : 산안 마을에 가다>에서는 보슬비가 내리는 어느 봄날, 산안농장을 방문하여 주민 생산자님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타인, 생명, 자연을 배려하며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산안 마을 사람들의 삶이 마음을 울립니다. <지옥의 기원>은 살처분이라는 이름 하에 행해지고 있는 축산업의 폭력적 역사는 결국 자본의 법칙에서 기인한 것이며, 인간사회를 포함한 타자와의 관계설정의 문제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생태감수성>은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기준, 때로는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수성을 끌어내 보자고 말합니다.

[담론연재]는 지난 호에 이어 생명·협동 운동의 담론과 실천에 대한 색다른 시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자기기술’로서 녹색전환과 한살림선언>에서는 생태운동 진영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했던 용어와 정의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 은유의 의미와 한계>는 전쟁과 폭력의 은유 대신 평화와 공존의 은유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관점의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독자 기고글인 <한살림 운동의 정체성 논의에 대해>에서는 지난호에도 제기되었던 협동조합과 한살림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심과살림지에 귀한 글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소중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모심과살림 편집부 드림



기획 —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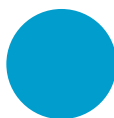
# 참깨

# 민주주의:

## 숙의민주주의

## 관점으로 보는

## 한살림운동



- ① 한살림 물품 논쟁을 돌아보며
- ② [난상토론] 한살림 사람들, 참깨수입과 민주주의를 말하다
- ③ 한살림의 참깨 논의에 대한 숙의민주주의의 적용과 의미
- ④ 숙의민주주의 딜레마와 한살림 민주주의

기획 — 특집

# 한살림 물품 논쟁을 돌아보며

임채도(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사람도 높낮이가 있어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모두가 평등하게 사람의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꿈꾸다가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씨를 보게 되었다. 그 생명의 씨앗을 통해 사람이라는  
경계를 넘어 모든 관계들의 평등과 평화가 대전제임을 깨닫는다. 결  
국 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영원한 것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일 뿐  
이라는 사실도. chedo@hansalim.or.kr

## 들어가면서 - 물품의 의미

한살림에서 ‘물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떤 조합원에게 물품은 사랑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이고, 어떤 조합원에게 물품은 ‘지구를 살리는 뜻있는 실천’이기도 하며, 또 다른 조합원에게 한살림 물품은 ‘증여와 환대, 돌봄과 협동’의 매개체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이라는 특성에 눈을 돌리면, 물품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필요와 열망(needs and aspiration)이 응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1)</sup> 협동조합의 개방적, 민주적, 자율적 성격이 조직운영의 원리라면,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물품은 협동조합의 작용과 실천을 보여주는 창(窓)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보다 앞선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물품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먼저, 근대 협동조합의 시원이라고 알려진 영국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은 “직공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무엇인가”를 놓고 숙고를 거듭하면서 출발했다. 그들은 1인당 1구좌, 주 2펜스씩 총 1파운드를 출자하여 식료품과 의류를 취급하는 매장을 열었다. 로치데일협동조합 매장이 처음 취급한 것은 밀가루와 버터, 사탕, 귀리 등 4개 식료품이 전부였다. 처음 취급한 물품은 품질이 떨어지고 심지어 가격조차 일반 시중에 비해 비쌌다. 당연히 일부 조합원들은 품질과 값을 따지며 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로치데일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신뢰하는 조합원들은 거리의 멀고 가까움, 값의 높고 낮음, 품질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의무적으로 물품을 이용했다. 그 결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가정과 사회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자신들의 목적에 느리지만 착실하게 접근해갈 수 있었다. 그후로도 로치데일협동조합은 때로 불황과 내부의 갈등을 겪었지만 조합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배척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면서도 결코 협동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

---

1)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라고 정의한바 있다.

덕적 기적'이라고 할 성과를 일구었다는 평가를 얻었다.<sup>2</sup>

두 번째 사례는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다. 이 협동조합은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으로 시작해 생산자와 소비자, 농민과 노동자 협동조합의 복합체로 발전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협동조합이다.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소매부문 협동조합은 에로스키(EROSKI, 바스크어로 '구판장'이라는 뜻)라고 하는데, 1969년에 설립되어 현재 스페인에서 소매부문 3위 규모의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취급하는 품목도 1차 농산축산물과 가공품 외에 여행업, 주유소, 안경점, 레저용품 등 다양하다. 에로스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역물품을 우선 취급한다는 점이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생각하면 특정 물품을 특정 생산자로부터 대량 구입하는 것이 좋겠지만, 에로스키는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지역 내 다수의 소규모 생산자로부터 다양한 지역물품을 공급받고 있다. 지역매장 운영에서도 지역소비자의 만족도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그 결과 에로스키의 물품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와 지역농업의 성장을 자극하는 지역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있다.<sup>3</sup>

이와 같이 협동조합의 물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협동조합조직의 활동역사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가치가 스며들어 있다. 한살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살림 물품의 특이점은 두 가지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한살림이 스스로 세운 물품개발과 취급의 기본 방향에 나타나 있다.<sup>4</sup>

- 한살림의 생명살림 사상에 바탕을 둔 자주적 기준체계 수립
- 먹거리 인식체계를 안전성에서 건강성으로 확장
- 지속가능성과 자원순환의 생산기반 형성
- 호혜적 관계

---

2) George Jacob Holyoake, 정관민 역, 2013,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그물코, pp44~61.

3) 관현용·김재겸 외, 2018, 『몬드라곤협동조합 회사법인 연수보고서』, 한살림, p28; 윌리엄 F. 화이트/캐서린 K. 화이트, 김성오 역, 1992,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나라사랑, pp216~217 참조.

4) 한살림사업연합, 2020, 『자주기준서』, 한살림, pp8~16.

위 네 가지 물품취급의 기본 방향은 한살림이 물품을 보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살림이 추구하는 생명존중, 생명살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협동과 연대의 호혜적 가치를 물품에 담아내는 것이다.

1986년 한살림 첫 매장이었던 ‘한살림농산’은 쌀, 참기름, 유정란, 메주 등 10가지 품목을 취급했다. 당시 한살림 실무자들은 쌀 한 자루, 참기름 한 병, 혹은 유정란 한 판을 들고 서울 전역에 배달을 했는데, 만약 이 물품들을 가격으로만 환산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논밭에 사는 풀벌레의 생명까지 걱정하면서 생산한 ‘가치 덩어리’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살림물품의 두 번째 특이점은 물품의 개발과 생산, 취급과 유통, 폐기, 재순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물품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다. 2021년 현재 한살림생협은 총 1,910개 품목의 물품을 취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농산물 230개 품목, 축산물 173개 품목, 수산물 231개 품목, 가공식품 615개 품목, 생활용품 624개 품목, 기타 37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sup>5</sup> 각각의 물품들은 생산자 소비자 공동회의에서 생태적 합의와 안전성(생명살림), 우리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성(농업살림), 안전성과 건강성(밥상살림), 호혜성(지역살림)의 기준에 따라 수많은 논쟁과 토론을 통해 생산, 공급되고 있다.

한살림 물품의 이러한 특이점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30여 년간 한살림물품을 둘러싼 수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형성되어온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냉해를 입어 죽어가는 깻잎에 ‘가온’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열띤 논쟁을 하고 있다. 지나온 한살림 역사에서 물품을 둘러싼 숭한 고민과 토론을 다시 돌아보는 것은 한편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물품을 만나야 하는지를 성찰하기 위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때로 고단하고 지남한 물품 논쟁 속에서 지치지 말고 서로 믿고 즐겁게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한살림운동을 하는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는 뜻이다.

---

5) 한살림연합 물품기획팀 정강우 실무자님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 유정란 사태(1990~1991)<sup>6)</sup>

유정란은 초기부터 한살림의 대표적인 공급 물품이었고, 지금도 조합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먹거리 가운데 하나다. 시중에 판매되는 무정란에 비해 비린내가 없고 맛이 고소해 한살림 매장에 공급되는 유정란은 걸품이 되기 일쑤다. 건강한 달걀은 깨어보면 노른자가 볼록하게 솟아있고 탱글한 모양이 단단하게 유지된다. 그런데 1990년 유정란을 이용한 조합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유정란 노른자가 쉽게 풀어지는 등 품질에 이상이 발견된 것이다.

생산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료도 바꾸어보고 늙은 닭이 낳은 달걀이 문제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 9월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은 이사회를 열고 개선되지 않는 유정란 품질에 관해 논의를 한 후 기존 유정란 생산자와의 공급계약을 중단하고 다른 생산자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유정란이 한살림 대표 물품인 데다 일반 조합원들의 계속되는 문제제기로 인해 조합원 대표들로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문제의 원인도 밝히지 못한 채 계속 공급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당시 한살림생산자조직에서는 아직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자를 교체하는 것은 당장 해당 생산자의 생업을 위협하는 것일뿐더러 생산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치로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이 사태의 결과는 엄중했다. 해당 생산자는 결국 교체되었고 한살림생산자조직은, 이 사태만이 이유는 아니지만, 1992년 해산하게 된 것이다.<sup>7)</sup>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품을 두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생산자는 원가와 생활비용이 반영된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소비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에 신뢰

---

6) 이하 소개하는 한살림 내부 물품 논쟁에 대하여 한살림가공생산연합회 사무국 이동숙 실무자님,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 김옥자 실무자님의 도움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분은 각각 한살림연합 농산물위원회, 가공품위원회의 간사를 역임한바 있습니다.

7) 1992년 ‘한살림생산자협의회’가 해산하고 난 뒤 생산자조직은 1994년 사단법인 한살림 체제하에서 ‘한살림생산자위원회’로 다시 조직되었다.

할 수 있는 물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한살림은 이와 같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농업을 살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믿고 돕는 관계를 만들자는 것인데, 유정란 사태는 한살림이 처음 직면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유정란 사태는 그 원인이 밝혀지면서 봉합되고 마무리되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외진 산골의 유정란 닭장을 지키는 개가 밤새 산짐승 소리에 짖어대는 바람에 닭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하지 못한 달걀을 낳았다고 한다.<sup>8)</sup> 한살림은 이 사태를 통해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동시에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 수입산 명태 취급 논쟁(2003~2004)

명태는 찬바다에 사는 물고기로 겨울철에 우리나라 동해 깊은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데 맛과 영양이 뛰어나 국민들에게 익숙한 식재료이다. 머리, 꼬리, 살, 알, 내장과 기름 등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이 생선의 어획량은 2000년 766톤에서 2002년 215톤, 2004년 64톤으로 급감해서 현재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명태 포획을 금지하고 고갈된 명태자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명태가 잡히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수온이 1~10℃ 정도 찬 바다에 사는 명태가 동해 수온상승으로 북태평양 오후츠크해, 베링해로 서식지를 옮겨간 탓이다.

한살림은 1995년경부터 우리나라 선적의 배가 북태평양에서 잡은 원양산 명태를 국내산으로 인정해 취급해왔는데 북태평양 어장을 관할하는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배당한 어획량을 줄여 국내산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말린 명태(북어)는 제사상에도 오르는 전통음식인지라 2003년경부터 명태 공급이 중단되자 조합원들은 긴급히 대책 논의를 시작했다. 옛날부터 우리 밥상에서

---

8) 윤선주. 2016. “30년을 이어 온 인기 물품.” 『한살림 첫 마음』. 한살림. pp115-118.

빠지지 않았던 식재료였지만,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것은 ‘국내산 공급’이라는 한살림의 물품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처럼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사실 같은 바다에서 잡힌 명태에게 국내산 여부를 묻는 것이 애매한 측면도 있었다. 1년여 명태 수입 논쟁이 계속되면서 명태를 원료로 하는 황태채, 어묵 등 가공식품들까지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03년 6월 19일 당시 ‘사단법인 한살림’ 이사회는 사업연합 실무추진회의에서 각 지역 한살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별로 임의대로 수입 명태 취급여부를 결정하기보다 한살림 전체가 공동의 정책적 문제로서 함께 결정을 하는 것으로 논의방향을 설정했다. 정책토론회와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2004년 3월 24일 각 지역 한살림 대표와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국내산으로 표기되었던 원양산과 동일한 해역에서 잡힌 수입산 명태에 한해 공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입산 수산물물의 취급불가 원칙은 고수하기로 해 러시아산 명태 수입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가 되었다.<sup>9)</sup>

수입산 명태 취급논쟁은 전통 식문화와 국내산 물품 취급원칙, 명태를 원부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으로의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얹혀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나 한살림은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도 경영진과 지도부가 끝까지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해 결론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물품을 둘러싼 의사결정이 어떠한 민주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잘 보여주었던 사례로 남게 되었다.

## 설탕취급논쟁(2008~2016)

설탕은 각종 먹거리 생산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원부재료이다. 그러나 사탕수수

---

9) 모심과살림연구소. 2016. 『스무살 한살림 세상을 꺼안다』. 한살림. pp267~269. ; 서형숙·윤선주. 2016.

『한살림 첫 마음』. 한살림. pp100~101.

가 자라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설탕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한살림에서 설탕을 취급할지에 대한 논쟁은 2002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음료, 과자, 빵 등에 부재료로 사용되지만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설탕에 대해서도 민중교역 차원에서 취급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수입산을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설탕 수입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sup>10</sup> 그리고 2006년~2007년 무렵 공정무역 차원에서 설탕을 취급하자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었으나 역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 후 2008년 9월 30일 개최된 「한살림운동과 공정무역 토론회」에서 설탕의 취급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되었다. 당시에도 설탕 취급의 현실적 필요성은 높았으나 몇 가지 이유로 토론회에서는 ‘한살림매장에서는 직접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즉, 생활의 필요는 인정되지만, 한살림에서 직접 나서서 설탕을 취급하는 것은 자립과 자급을 지향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취급 자체가 건강에도 유익하지 않는 설탕의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육류 소비와 마찬가지로 식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공정무역에 대해서도 ‘현재의 공정무역은 원래 추구하려던 의미와 달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대기업들조차 마케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세계 무역체제의 하위 구조로 포획되어 변질되고 있다. 따라서 자립과 자급을 지향하는 한살림이 공정무역에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임을 확인했다.

2008년 토론회 이후 잠복되어 있던 설탕취급 요구는 2013년 3월 12일 한살림연합의 생협사업추진회의에서 다시 제기되었다. 생협사업추진회의는 2008년 「한살림운동과 공정무역 토론회」 논의 결과인 ‘설탕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기조’ 자체에 대해 재검토, 재논의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한살림 회원생협 일부에서 ‘유기농+공정무역 설탕’을 직접 취급하는 것에 대해 조직 차원의 검토와 공식 논의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근거로 든 것은 1) 지역 한살림생협의 경우 지난 3년간 유기농 설탕을

---

10) 모심과살림연구소, 2016. 『스무살 한살림 세상을 껴안다』. 한살림. p269 참조.

청매실 공급기간 특별품(브라질 유기농 설탕)으로 취급해 오고 있으며, 또한 몇몇 지역 한살림생협에서는 공정무역 유기농 설탕을 특별 품목 또는 상시 품목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회의기구를 통해 논의·공유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점이다. 2) 또한 공정무역 유기농 설탕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이 넓어지고, 타 단체나 업체를 통해 공정무역 유기농 설탕을 이용하는 조합원 폭도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다. 3) 2009년부터 가공식품의 부재료로 유기농 설탕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유기농 설탕은 연간 360톤 이상에 이른다는 점, 또 가공식품 부재료로 사용되는 설탕 중에는 한국공정무역연합에서 직수입한 파라과이 아소카세농민조합의 유기농 설탕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백 설탕도 있어 통일적인 취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설탕취급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은 1) ‘자립과 자급을 지향하는 한살림의 물품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한살림 물품취급 기준의 근간을 이루는 수입산 취급 금지 정책에 배치’된다는 점, 2) 설탕을 단일 물품으로 취급할 경우 우리 조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3) 공정무역이라는 명목으로 수입농산물을 개방하면 추후 커피 등 다른 수입품도 개방해 달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4) 식교육위원회 등에서 ‘설탕’을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교육하고 홍보해 왔는데 이를 물품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찬반이 팽팽했다. 2013년 4월 한살림연합 이사회는 회원조직이 자율적으로 재검토, 재논의하기로 하고 논의 추이를 보면서 연합 수준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그해 9월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합원의 대부분(85.8%)이 설탕 취급이 필요하며 ‘특별품(22.1%)’ 보다 ‘일상적 취급(77.9%)’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인 것을 확인했다. 2013년 11월에는 7개 회원생협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전체 한살림의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렇게 몇 해를 넘기고, 2016년 2월 한살림서울 등 일부 회원생협이 매실 공급기간에 설탕을 특별품으로 한시적으로 취급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고, 그해 3월 14일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다.

2016년 3월 14일 정책간담회에서 찬성측 입장은 앞서의 논거 외 1) ‘한살림의 사업과 활동에 임하는 관점과 방식이 배제성의 원칙과 기준이 아닌 수용적 포용적 원칙과 기준으로 개방되어 다양성이 공존’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2) 85%의 조합원 찬성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반대 측은 1) ‘일부 예외적인 경우 외에 국내산 물품 취급 원칙의 변경은 정체성에 대한 합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 2) 공정무역 자체가 생산지 국가의 농업 단작화 등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 3) 한살림의 기준과 원칙을 지킬 때, 또 그런 노력을 보일 때 오히려 신뢰성을 높이고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한살림의 정체성이 강화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열린 한살림연합 이사회(2016.3.24.)에서는 가공식품 원료로 설탕이 불가피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과 조합원들이 매실청을 담기 위해 외부 판매처를 찾아다니지 않고 한살림이 취급한 설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매실 공급 기간에 한시적 특별품으로 수입산 유기농 설탕을 공정무역, 민중교역을 통해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2016년 4월 이사회에서는 매실 공급시기에 한시적 특별품으로 공급하는 설탕에 대해 1kg당 100원을 제3세계 민중교류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결의했다.

한살림 설탕 취급논쟁은 2008년경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해 2016년까지 무려 8년여에 걸쳐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핵심적인 논쟁 지점은 한살림의 지향과 수입산 취급 금지 원칙, 조합원들의 현실적 필요와 요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인가라는 문제, 공정무역(민중교역)에 대한 입장 등이었다. 우리는 이 논의과정을 보면서 설탕 취급 여부의 결론보다는 스스로 세운 물품원칙에 대한 자긍심과 지키려는 열정, 공정무역과 같은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논박, 한살림 이념과 조합원 주권 사이의 현실적 갈등 등 차원 높은 쟁점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설탕이라는 단일 물품을 둘러싸고 한살림의 역사와 가치, 조합 민주주의, 농업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 등 한살림 전체가 몰입되는 이 과정은 한살림다운 물품 원칙이 어떻게 수립되고 유지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 카카오 등 수입 가공원료를 둘러싼 논쟁(2018~2020)

설탕과 함께 일반 가공식품에서 주요 원부재료로 사용되지만 한살림에서 그동안 취급하지 않았던 카카오 등 수입 가공원료에 대한 취급 요구도 2011년경부터 있었다. 한살림의 우리밀제과 이사회는 2018년 7월 26일 ‘우리밀 빵 이용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초콜릿, 커피, 아몬드 등의 가공원료를 허용해 물품개발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가공원료들을 민중교역 차원에서 논의해 줄 것을 한살림연합에 공식 요청했다. 또 2019년 6월과 7월 한살림 생협사업추진회의는 수입 가공원료로 카카오, 커피, 아몬드, 올리브유 등 4가지를 확정하고 한살림연합 이사회에 공식 논의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그해 9월 우리밀 가공식품 원료 4가지의 수입 사용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들의 67.1%가 취급 찬성, 19.1%가 일부(품목) 찬성, 13.8%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한살림에서 취급하면 신뢰할 수 있기 때문’(61.1%, 복수응답)과 ‘물품 구색이 다양해져 이용 선택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서’(59.2%,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내산 취급이라는 한살림의 차별성이 약해지기 때문’(78.4%, 복수응답)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원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 에너지와 자원 낭비가 크기 때문’(32.5%, 복수응답), ‘기준과 원칙 없이 시대변화를 뒤따라가는 것 같아서’(31.7%,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2019년 11월 4일 개최된 「한살림 물품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 직접 방청하는 조합원들의 열띤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수입 가공원료 4종만 사용하면 우리밀 사용량이 증가될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빵의 다양화에 기여하여 우리밀 소비 활성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양측 의견이 대립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수입 찬성이 의견이 많았으나 현장 토론회에서는 수입 반대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 이후에도 각 지역 회원생협 단위로 토론은 계속 이어졌으며, 핵심 질문과 의견들은 일반 조합원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한살

림연합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2020년 2월 11일 한살림연합 이사회는 그동안의 토론을 총괄하면서 우리밀 가공원료에 한해 '카카오, 커피, 아몬드, 올리브유 등 4가지 수입 원료에 대한 사용을 승인하고 민중교역이나 공정무역 물품 또는 유기인증 물품에 한해 취급하되, 민중교역이나 공정무역 물품을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수입원료를 허용하면 우리밀 사용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1) 향후 수입원료 사용에 따른 우리밀 사용량 변동 추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 2) 물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가공품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 3) 해당 수입원료 4종에 대한 승인과 관련하여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현재 물품취급 현황과 향후 물품정책·물품취급기준 개정 논의 계획을 제공할 것 등을 결정사항에 첨부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카카오 등 수입원료 취급에 대한 논쟁은 이로써 일단락되었다.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커피, 초콜릿과 같은 소비자들의 변화된 기호와 취향을 한살림으로서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과 함께 꼭 필요한 수입원부재료라면 민중교역을 통해 한살림의 호혜적 관계를 국제적으로 넓혀 나가는 것도 유의미하다는 판단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카카오 등 수입 원료 취급 결정은 우리밀 제품의 이용확대를 통해 취약한 국내 우리밀 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한다는 농업살림의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살림은 이 논쟁을 통해 원칙과 현실이라는 이분법적 대립뿐만 아니라 한살림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물품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과 논쟁이 더욱 다양하고 치열하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이 어려움은 조합원 75만 명 시대의 한살림이 지탱해야 하는 무거운 모자의 무게이기도 하다.

## 참깨 수입 논쟁(2020)

참깨와 같은 잡곡농사는 기계화가 어렵고 일일이 허리를 굽혀 일해야 하는 등 노동강도가 높는데 비해 수익은 낮아 해마다 산지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참깨는 한살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피작물 중에 하나이며 한살림도 자체 산지에서 필요량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이나 지역의 유통상을 통해 원료를 구입하고 있다. 2020년 한살림에서는 43명의 생산자가 22,000평에 4.6톤의 참깨를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9명의 생산자가 약정량의 10% 수준인 460kg을 출하하는데 그쳤다. 특히, 2020년은 냉해와 폭우, 태풍피해가 겹치면서 국내산 참깨의 작황이 매우 부진했다. 조합원 공급용 참기름과 볶은참깨는 물론 가공식품에 사용할 참기름과 볶은참깨의 공급도 어려워 살림농산과 천지인 등 참기름 생산지와 18개 참기름류 가공생산업체에까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었다.

2020년 11월 23일 한살림연합 이사회는 참깨 부족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참기름과 볶은참깨는 한시적으로 수입산 유기농 참깨를 가공하여 사용하되, 조합원 공급용 참기름과 볶은참깨에 대한 수입산 허용 여부는 조합원들의 의견조사를 거쳐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국산 농산물을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한살림 원칙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가공산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각각 제출되었다. 또 해마다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 국내 참깨 생산지의 감소 현황, 가공업체의 예상되는 피해, 참깨 장기 수급대책 등 여러 가지 사안을 함께 검토했다.

이어 긴급하게 진행된 수입참깨 허용 여부에 대한 조합원 조사에서는 한시적 수입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찬성, 45%가 반대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24일 한살림연합 이사회는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설문조사 결과가 물품 정책이나 기준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합원

공급용 참기름과 볶은참깨 원료에 대한 한시적 수입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참깨 수입에 찬성한 이유 중 상당수가 가공산지의 경영악화를 우려한 것에 유의하고 가공산지의 손실에 대해서는 연합조직, 소비조직, 생산조직 등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운영자금 대출과 내년도 물품가격에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 조합원 성금 모금을 통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피해가 예상되는 산지별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최소자금을 파악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참깨 재배가 가능한 1,000여명의 생산자들이 참깨 재배를 결의하기로 했다. 생산자들이 생산의 책임성과 소비자들의 마음에 함께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생산자들의 결의와 함께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국내산 참깨 조달에 대한 방안을 한살림연합과 생산조직이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살림연합 이사회는 이사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조합원들에게도 이사회 결정사항 뿐 아니라 논의과정에서의 고민들과 결정 이유, 가공산지 손실에 대해 한살림 전체조직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지기로 한 것,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자세히 알리기로 했다.

참깨 수입 논쟁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의 위기 상황과 고령화와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날로 악화되는 잠곡농사의 현실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주요 작물의 수입논쟁이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이 논쟁과정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는 단순한 찬반 비율보다는 조합원들이 한살림에 보여준 깊은 신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컸다. 조합원들은 소비의 편의성보다 한살림 생산지와 생산업체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있었고, 일시적 수입이 불가피하더라도 가공산지를 살리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내산 참깨를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살림연합 이사회의 숙의과정도 매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무자들의 신속한 단기·장기 대책마련, 한살림생산자연합회의 적극적인 생산 결의도 이번 참깨 수입논쟁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 나오며

한살림 물품 30년사에서 위의 5가지 논쟁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1989년 돼지고기 취급 논쟁, 2007년경 우유 취급논쟁, 2019년 러시아산 대두 수입 논쟁도 있었고, 크고 작은 물품사건, 사고도 많았다. 굵직한 사건만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1991년 우리밀 살리기 운동

2000년 북한산 조선고사리 취급

2004년 더불어식품 수입 팔 사용 사건

2005년 친환경농산물 과잉생산과 이용촉진운동

2008년 생협 진영 재사용병 공동규격화 실패 (이후 한살림 단독 추진)

2010년 예산당진 쌀 농업용수 문제로 환경인증 취소사태와

한살림의 8천 가마 전량 소비운동

2011년 가공식품 생활용품에서 일본산 원재료 제외 결의

2012년 참기름 들기름 벤조피렌 검출사건

2013년 표고버섯 방사능검출 사건, 자주인증제도(저농약 자체인증) 도입

2015년 매실청 산야초 청 사건과 홍천 고추 애호박 농약검출사건

2016년 무항생제 한우 취급

2018년 ‘DDT’ 유정란 사건과 유정란 이용촉진 운동

돌아보면 그동안 뼈아픈 물품사고도 있었고,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물품 기준과 취급체계를 만들어가는 성숙의 과정을 가졌다. 2015년 홍천지역 고추, 애호박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비의도적인 비산 농약으로 추정된 농약 검출사건을 겪으면서 한살림은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2016년 농약검출사건 처리지침과 「자주기준서」를 마련했다. 또 여러 차례 물품논쟁에서 먹거리의 안전성이 부각되면서, ‘자연과 사람’, ‘생산자와 소비자’라

는 관계를 중시하는 한살림 물품에 대한 인식이 열어지고 물품자체의 안전성만 강조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수입산 원부재료의 취급은 한살림의 국내산 물품 원칙에서 일정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앞서 논쟁의 내용과 흐름에서 보듯이, 이는 특정 물품의 취급 여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이라는 한살림 사명(mission), 물품을 통해 한살림과 세상의 호혜적 관계를 넓혀 나가는 한살림운동의 비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살림 물품 취급기준과 원칙 등이 새로운 도전과 과제 영역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살림은 처음 쌀가게를 낼 때 무농약, 유기농 쌀과 함께 관행농업으로 생산한 쌀도 함께 취급한 역사가 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도 틈날 때마다 우리 생산자들이 지역의 관행 농업 생산자들과 어울리고 늘 함께하기를 권했고, 조합원들에게는 우리가 한살림을 하는 이유가 저 홀로 몸에 좋은 음식, 안전한 음식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한바 있다.

한살림의 선구자들은 ‘한살림 물품에는 영혼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는 물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려는 상생의 마음을 한살림 물품에 담고자 했다. 30년 한살림 물품논쟁도 겉으로 가치와 원칙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생명살림의 연장에 서 있었다.

기획 — 특집

- 난상토론 -

# 한살림 사람들, 참깨수입과 민주주의를 말하다



2020년, 50여 일간의 장마로 참깨 생산량이 90% 급감하여 참기름 생산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살림에서는 한시적으로 가공원료로서 참깨를 수입할 것인지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한시적이라는 전제 아래 수입산이더라도 한살림이 믿을 수 있게 만든 참기름을 먹고 싶다’는 의견이 55.5%, ‘한살림은 원칙과 기준을 우직하게 지켜 수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44.5%로 팽팽하게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로 다시 이사회에서 논의하면서 ‘절대다수의 조합원이 동의한다 해도 결정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찬반 의견이 비등하다면 국산 취급에 대한 조합원의 바람을 무겁게 듣고’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이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살림 구성원들이 가지고 계신 낱것의 생각들과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살림 운동의 방향성을 돌아보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자원한 참여자들과 함께 이틀에 걸쳐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고, 이 원고에는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발췌한 후 내용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지면상의 한계로 논의 내용을 그대로 담지 못하여 일부 누락된 의견이 있는 점에 대해 참가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진행 및 원고 정리: 조미성

## 토론회 취지와 방식 소개

**조미성(연구소):**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익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통의 토론회는 전문가나 패널들이 발표를 하고 청중들은 남는 시간에 질문을 하거나 약간 수동적으로 참석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는 별도의 패널이 없고 사전에 보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수다 떨

듯,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익명 토론회입니다. 평조합원들이나 비직책실무자, 생산자님들 위주로 토론회 참석 신청을 권고 드렸습니다. 익명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참석자의 위치나 배경이 주는 영향을 줄이고 의견 그 자체를 편견없이 듣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정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토론회입니다. 감정과 비합리성은 다릅니다. 감정을 눌러 놓지 말고 솔직하게, 그러면서도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강한 감정이 든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며, 그것은 중요한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가능한 것은 솔직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 등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상대방과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비방, 인격적 모독,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셋째는 존중과 배려의 대화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방법으로 ‘나-전달법(I-message)’이 있습니다. 사실과 그로 인해 느낀 자신의 감정,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을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 1부- 한시적 참깨 수입 논의

**조미성(연구소):** 먼저 논의가 시작되었던 이유인 기후위기와 참깨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작년 말 한시적 참깨 수입과 관련한 설문조사와 논의가 있었을 때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1) 기후위기와 참깨 생산**

**중(생산자):** 저는 생산 현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4년 전부터 기

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참깨뿐 아니라 노지 작물 전반에 걸쳐 심각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참깨가 거의 뭉 직격탄이었죠.

**단아(실무자):** 생산지에서 참깨 생산의 애로가 매우 크다고 들었습니다. 참깨는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실질적으로 형성되는 가격대가 훨씬 낮아서 생산자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 일차적인 큰 문제입니다. 올해 약정 수량이 100톤이라면 한 살림 생산자분들은 20-30톤 밖에 약정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깨를 물품으로 유지하려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중(생산자):** 농부 한 사람이 참깨 12kg을 생산하려면 50평은 심어야 해요. 우리 생산 공동체는 여덟 농가인데, 올해 여러 명이 관리해서 함께 생산할 것인지, 개인농가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작은 면적이라도 신경 써서 각자 50평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걱정되는 것은 시설이 아닌 노지에서 참깨농사를 지을 때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작년에도 54일 정도, 재작년에도 63일 정도 비가 왔는데 하릴 때 비가 오기 시작하면 참깨를 베어도 말릴 수가 없어서 다 썩어버립니다. 생산현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무사탕(실무자):** 저는 산지를 많이 가는 편인데, 올해도 따듯했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과수 냉해 피해가 심합니다. 산지에서는 생산자님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우리는 돈만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산지에서는 약속을 지키면서 생산을 해야 하니까, 생산자님들께 희생을 강요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의 희생으로 혜택을 보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간집(실무자):** 올해 생산자님들이 참깨 농사를 함께 나눠서 하기로 결의를 해 주셨어요. 한살림 생산자가 아니면 그런 결의를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생산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힘든 것에 비해 실제 생산량은 적고 생산을 하셔도 출하기준에 맞추기 어렵거나 품위가 안되고, 들인 노력에 비해 가격이 안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려운 농사를 의무적으로 하시게 될 상황이 걱정되고, 조직의 결정으로 애써 주신 만큼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 봐 걱정되어요.

**종(생산자):** 저희도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기후 재앙 안으로 들어왔어요. 올해도 벌써 마늘종이 한 달 가까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기현상들이죠. 매실나무가 매실을 단 채 새잎이 나고 있는데 최근 차유리에 얼음이 얼 정도로 꽃샘추위가 와 버렸어요. 낮에 23-24도 올라가고 밤에 얼음이 생겨요. 생태계 균형이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결국 생산량과 연결되어요. 참깨는 몇 사람이 기를 쓰고 생산하던 것을 한살림 전체 농가가 짐을 나눠보자는 것인데, 운동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기준에 맞는 높은 사양의 원물을 생산할 수 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 2) 생산자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나무사탕(실무자):** 참깨 수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힌 것이 많습니다. 저는 수입을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가공용으로 일부 원부재료를 수입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참깨도 전체 참기름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조직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이 없다고 생산을 중단하면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조합원):** 저는 참깨수입에 반대했는데, 기후위기가 원인이라면 근본 원인을 같이

알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맞지 일시적 대체품을 바로 제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늦기 전에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위험을 깨닫고 대처해야 합니다.

**보라보라(조합원):** 저는 참기름을 잘 사지는 않지만, 수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기후위기로 다른 작물의 국내 작황이 안 좋으면 그것도 수입을 할 것인가요?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농업주권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참깨는 솔직히 안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작물이라서 수입을 해야만 한다면 지속가능한 먹거리가 가능할지 걱정돼요. 수입에 대한 논의보다 생산자를 늘리고 땅을 살리고 기후를 살리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방법을 조합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효(조합원):** 생산자분이 힘드시다는데, 한살림이니까 쉽게 이런 결정을 하진 않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기후위기가 올해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수입에) 찬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주위에 실무자, 조합원, 생산자분들이 SNS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만큼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1차 생산자님들, 2차 생산자님들 그분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했어요.

**바로봄(조합원):** 만약 참깨를 수입하기 시작하면 생산자분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농사 짓는 입장에서 앞으로 참깨는 가망이 없다고 재배를 포기하시지 않을까, 일시적인 작은 시도가 생산자분들께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수입에 반대했습니다. 한살림 생산자분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묵묵히 유기농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고요, 고맙고 그분들을 대할 때면 따스함을 느끼곤 해요. 가격과 경쟁, 기후 조건 등 힘든데, 수입을 하게 되면 생산자분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중간쫄(실무자):** 이번 한시적 참깨 수입 건에서는 만약 수입을 해서 1차 생산자님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매장에는 참깨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을 해도 1차 생산자님들에게는 문제가 안되었죠. 그리고 2차 생산자님들도 저희 생산자님들이시니까 그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OO농산과 OOO분들은 초창기부터 외부에는 공급하지 않고 한살림에만 참기름을 공급하시던 분들이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지켜낼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매장에 공급하는 참깨가 아니라, 참기름에 사용하는 가공용 참깨만 수입하자고 한 데에는 한살림 가공생산지를 유지해야만 하는 입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조미성(연구소):** 생산자님들 얘기를 가장 듣고 싶었어요. 정말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우리밀 소비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작년 초에 네가지 가공원부재료 수입을 허용했어요. 생산자 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면 수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생산자 입장에서는 참깨 수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시골내기(생산자):** 수입 참깨와 수입 참기름은 한살림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동네 방앗간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수입에 반대합니다.

**종(생산자):** 저는 때로는 수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지작물 쪽에는 공급용 잡곡이 굉장히 부족해요. 잡곡은 특히 착즙용 유류 작물의 경우에 가공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기농뿐 아니라 국내산으로 확대해서 가공용으로 쓰면서 필요한 양을 어렵사리 채우고 있지만 결국 충분한 공급이 안되고 있어요. 이 상기후로 병해충 번식이 왕성해지고 다른 잡곡들도 타격이 있어요. 한살림 안에서 1차 생산자를 보호하는 측면은 충분히 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작물이 필요하니까.

한살림 율타리 안에서만 이것을 한다는 것이 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살림밖의 다른 생산자 단체와 함께,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도 좀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컬푸드라고는 하지만 5분 거리, 30km 안쪽으로 공급하다가 필요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면 50-80km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되면 다른 지역이더라도 국내산으로 하고, 그것도 안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당연하죠.

### 3) 한살림다운 결정이란 무엇인가

**농부(조합원):** 작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참깨를 대신할 수 있는 들깨도 있는데 왜 굳이 수입하려 하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한살림답지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미성(연구소):** 그렇다면 한살림다운 결정은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한살림의 운동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효(조합원):** 새내기 조합원일 때 한살림이 공정무역을 보는 시선이 다른 생협들과 달라서 충격적이었고, 그때 조직활동가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잊히지 않고 늘 머리속에 남아있어요. 한살림은 농업의 단일화를 우려하고 국산 위주로 공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생협은 물품 구입에서 끝나는데 한살림은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사회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같이 일구어 가려고 하더라고요.

**중간쫄(실무자):** 한살림 가치 중에 국내산 원칙과 안전성·신뢰성에 대한 가치가 충돌하는 것 같아요. 수입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국내산 원칙과 1차 생산자님들 보호, 농업살림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신 것 같고, 수입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한살림에 대

한 신뢰가 있으신 것 같아요. 투명하게 생산과정을 확인해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개해주기 때문에 혹시 수입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과정을 확인할 테니 이왕 수입해야 한다면 한살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태(조합원):** 한살림은 여전히 매출 성장에 기대 사업을 해야 하는 형편인 것으로 압니다. 결정과정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당장 가공공장이 돌아가야 하고 경영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짐작합니다. 가공품 원료를 일부 수입하는 것이 한살림 생산자의 지속가능한 농사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그동안 정체성이나 다름없었던 가까운 먹을거리와 제철 먹을거리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는 결정처럼 보입니다. 원칙이 흔들리고 생명살림의 논거가 약해질 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원칙만 고수하면 조합원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를 저버리는 것 같아 역시나 결정이 어렵습니다.

**중(생산자):** 참깨 결정을 보고 한살림은 역시 보수적이고 기준에 충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산자들을 위해 수입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지속가능한 생산자 조직을 위해 의사결정 구조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운동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 충분히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새날다(조합원):** 한살림다운 것은 밥상살림, 생명살림, 농업살림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크고 거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협동조합이니까 실제로는 지향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조합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한살림이 대체 왜 그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정신들을 조금 더 살리면 좋겠어요. 현실에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오늘처럼 조합원들에게 다가가는 시간이 많이 있다면 조금 더 한살림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2부- 민주적 의사결정

**조미성(연구소):** 참깨 논의는 참깨를 수입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살림이라는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솔직히 말씀해주시고 다음으로 한살림에 필요한 의사결정 방식은 어떤 것인지도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 1)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들

**중간ظم(실무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결정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무엇인가 결정할 때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여러 단위에서 논의를 해요. 실제 상당히 많은 단위를 거쳐 결정하지만 조합원들 중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밀 가공원부재료 4가지 수입에 대한 설문을 할 때도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 외에는 ‘내가 한살림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느낀 조합원들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워낙 한살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합원들 기초조직부터 의견을 모아내는 데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결정하면서도 조합원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도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효(조합원):** 참깨 수입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죠.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닐까?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서 당황하신 분들이 계셨고 급하게 가다 보니 본인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하지 못했던 분들이 반발하신 것 같아요.

**보라보라(조합원):** 표본 추출하실 때 기준을 보니 참기름을 구입하신 조합원들이 다수 설문대상으로 포함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표본 추출되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조합원들 의견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물품만 이용하시는 조합원들이 한살림 협동조합 전체를 고려해서 답변했을지 확신이 없어요. 저는 참기름을 잘 안 사긴 하지만 참깨 수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의원들의 의견이 빠져 있는 것도 아쉬웠어요. 대의원들은 지역 조합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선출되었고 한살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인데, 의견조사가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참새날다(조합원):** 참깨 논의의 경우, 조합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하는 고민이 있었고,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했어요. 일반 조합원 모두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원활동가들에게는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각 지부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어야 했지만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표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화가 났고,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희미해졌다고 느껴졌어요. 이사들의 주관적 결정인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사회를 믿지 못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논쟁이 많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때의 흥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여러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심이 된 것 같아요.

**나무사탕(실무자):** 기간이 촉박해서 의견수렴 기간이 짧아서 아쉬웠어요. 참깨로 국한 짓지 말고 1년이든 2년이든 조합원들,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단계로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후위기를 극복할 장기 토론을 통해 한살림의 길을 다시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아(실무자):** 아쉬운 것은, 참깨수입 관련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운동으로 연결하고 확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 2) 한살림에서 필요한 의사결정 방식은 어떤 것인가

**조미성(연구소):** 외부 전문가님들이 함께 논의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부에서는 골치가 아프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한살림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느낌도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래도 민주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인다고 격려를 해 주셨어요. 어쨌든 한살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쫄(실무자):** 일부에서 ‘한살림에서 이런 설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협동조합이라면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설문조사 주관식 의견에서 ‘물어봐 줘서 고맙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 덕분에 상처가 조금은 치유되었어요.

**바바(조합원):** 한살림의 힘은 원칙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에서 드러난 의견이 과반에 가깝다 해서 그 의견이 공동체의 뜻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드러내는 일은 그 공동체의 정신을 대내외적으로 훼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겁게 고민하고 다뤄져야 합니다. 한살림의 원칙과 태동 정신이 다치지 않는 범위를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더 중요한 지침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조합원):** 흑백논리로 찬/반 더 많은 쪽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적은 쪽의 의견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성급한 결론은 내지 않았으면 해요. 이번 결정이 한동안 한살림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효(조합원):** 대부분이 기후위기가 올 한 해만의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후재난이 피부로 느껴지는데 장기적으로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견들을 놓쳤기 때문에 한살림답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협에서

는 한살림을 협동조합의 큰 형님뻘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정하게 한 표씩 행사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모두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생산자):** 저희 지역 생산 공동체에서는 매월 월례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제안하고 건의하고 이견이 있으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기록이 생산자연합회 이사회까지 올라가서 정책이 될 수 있고 제도화된 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참깨 경우에 분명히 생산자 단체와 지역의 의견수렴을 했을 거고 가공생산자 단위들도 다 논의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논의 속에서 어렵사리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수입을 허용하려 했다고 생각해요.

기후위기를 직면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조합원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결국 생산자가 농사짓는 품목도 지키고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요. 단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면이 결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다른 면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죠. 한살림이 수입을 결정한다면 무분별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어요. 한살림은 쉽게 멀리서 오는 것을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니까, 그런 구조 때문에 의사결정에 신뢰가 생기고, 내가 보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결정한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호(조합원):** 정보가 조합원들에게 잘 전달되거나 소통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활동조합원으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활동을 내려놓으면 한살림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없어요. 설문도 사실 표본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유기농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만 한살림을 이용하는 조합원들 의견이 한살림 전체 조합원 의견인 것처럼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우려스러워요. 한살림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미성(연구소):** 만약 한살림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의 의견을 더 반영한다면 그런 분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활동 연차가 높으면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인가, 선별의 기준은 무엇이며, 선별되지 않은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보라보라(조합원):** 조합원이 굉장히 다양해졌으니까, 조합원을 거르지 않고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조합원의 의견을 다 듣고 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쫄(실무자):** 저도 가끔은 한살림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분들만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과거의 꿈인거죠. 이해가 높지 않은 조합원들이라고 다 빠져나가면 동료들도 몇 사람은 같이 일을 못하게 되고 생산자들도 몇 분은 농사를 못 짓게 되니, ‘의견이 맞는 사람들이 잘 모이면 되지’하는 판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하나씩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견이든 반대의견이라도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치열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살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사탕(실무자):** 조합원이든 생산자든 실무자든 어느 정도 자격이 되어야만 한살림 생산자나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살림다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발을 디뎌 들어오고 나서 한살림 사람으로 바뀌고, 그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든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고,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내치는 것보다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소위 진상조합원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애정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 덕분에 저희가 계속 바뀌고 변화하죠. 한살림은 누구나 다같이 함께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3) 위기를 기회로

**단아(실무자):** 이번 참깨 설문조사는 한살림 조합원의 성향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에 대한 분석과 공감이 이루어져야 향후 한살림 운동이 그 바탕 위에서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참새날다(조합원):** 참깨 덕분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급박한 상황에서 지부운영위원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들의 결정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때문에 이사회와 의사결정 과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급박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이 올 텐데, 이번을 경험삼아 평소에 각 지역 의견을 잘 수렴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나무사탕(실무자):** 조합원으로서 조직활동도 해보고 여러 고민들을 해 봤는데, 직접 의견을 내고 내 의견으로 조합이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수에 의해 한살림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이 그만큼 성장을 하면서 모두가 1인 1표로 운영한다고 하는 취지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내가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전체 의견에 내 의견이 포함되고 관심을 가지고 같이 만들어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아쉽고요. 코로나로 바뀐 상황에서 한살림이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성장할 기회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새날다(조합원):** 최근 줌이나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대표 민주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로 모습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구글 설문이나 줌을 이용해서 일반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여쭙

볼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미성(연구소):** 코로나가 위기를 가져왔지만 기회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온라인 회의로 바꿀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방분들은 특히 참여가 더 쉬워지는 상황도 생기고 있어요. 디지털 민주주의가 가져온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김진아(연구소):** 한살림운동이 협동조합이라는 틀 안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실무자, 생산자, 조합원 세 주체가 어떻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협동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의견을 좁혀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실무 생산 등 서로의 입장에 대해 알기만 하더라도 고민의 폭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의 민주주의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과 서로의 상황을 넘어 만날 수 있는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민주적 소통 문화를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 3부- 대책과 대안, 그리고 소소한 아이디어들

**조미성(연구소):** 그렇다면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기후위기는 계속 심각해질 거고, 생산량은 계속 줄어드는 것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생산자를 보호하고 장기적인 생산기반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이 아닌, 가벼운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중간쯤(실무자):** 참깨 같은 경우 대안은 생산물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참기름을 만들면 가격이 엄청 비싸지겠죠. 과연 그것을 조합원들이 사 주실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한살림 운동성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조합원들도 많아진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높은 가격에도 충분히 소화가 될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농부(조합원):** 저는 전업농은 아니고,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어요. 한살림이 로컬푸드를 강조하는데, 참깨가 기후변화로 한국에서 잘 자라지 않는다면 잘 자라는 작물 위주로 심고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깨를 확인해보니까 작물 원산지 자체가 인도와 아프리카라서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기가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조합원):** 한살림의 중장기 의제로 밥상위기의 근본 원인인 기후위기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함께 살아갈 것을 전제로, 한살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원칙을 재정립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장재를 덜 쓰고, 다품종 소량생산 소농을 더욱 북돋는 제도를 만들고, 국내 가공원료가 조달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수입을 결정한다면, 그리고 어떤 속의 과정을 거쳐 누가 결정하고 경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조합원들이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효(조합원):** 기후위기가 재앙 수준으로 갈 텐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힘을 써야 하는지 고민해야 해요. 장기적으로 이 땅에서 참깨 농사가 어려워지면 대안 작물을 생각하고 대안 소비, 대안 생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워내는 소비생활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채식 운동도 하고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소비자들과 이런 부분을 치열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우리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기후재앙 속에서 지속가능한 삶, 인간적인 삶까지도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물품을 계속 고수하고 가공품

을 늘려가면서 이런 생활이 가능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과감하게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생산자):** 줄여쓰고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기름의 경우 대체 품으로 유채나 청광배추, 해바라기 이런 것들을 노는 땅 언덕배기에 많이 심어 잘 연구를 하면 가공용, 식용기름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통일이 되고 북쪽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연해주 쪽에 한살림 기준에 맞는 생산지를 하는 것도 어떤가, 우리가 기후 때문에 38선 이남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북쪽에서 생산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요. 기후 변화로 생태계가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한살림 2,200 농가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은 다른 생산자 단체, 북쪽 생산자들과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보라보라(조합원):** 며칠 전 학교급식 non-GMO 토론회에서 한 생산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콩을 10% 자급하고 나머지를 수입하는데, 그 10%로는 국내의 non-GMO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입산은 다 GMO니까요. 그런데 연해주에 우리나라 농부들이 가서 유기농 콩을 재배했는데, 국내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작 중국은 non-GMO 콩을 싸그리 구매하고요. 그분들은 정작 애국심으로 콩을 키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을 안하고 중국은 현금을 들고 와서 팔라고 해서 난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연해주에서 재배되는 양이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충분히 non-GMO 콩으로 급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눈을 돌리면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정작 소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열심히 알아보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효(조합원):**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지만 생산자분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작물을

바꾼다는 게 당장 수십년간 유지해 왔던 삶의 터전을 바꾸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서 더 염려가 되죠. 공동체에서 작물 변화를 고민하고 돕는 역할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조합원):** 한살림 안에서라도 기피 작물을 책임 생산하는 경우, 그 활동만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해드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라보라(조합원):** 이번에는 참깨였지만 다음에는 어떤 작물이 될지 모르고 그럴 때마다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예요. 한살림은 협동조합이기는 하지만 생산자가 안 계시면 유지가 안되는 조직이죠. 조직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같이 공론장에서 이야기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물품의 작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수입을 논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칙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작황이 안 좋을 때 생산자가 다른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분들에게 불안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물품 대금에서 생산안정기금을 대폭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하고, 공론화해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설득을 해야 해요.

**조미성(연구소):** 이야기를 듣다보니, 생산자님은 조합원을 걱정하고 조합원과 실무자는 생산자를 걱정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서로를 위하는 한살림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후기- 토론을 마무리하며

참가자들 다수는 좀더 규모가 크고 전문적인 발제가 있는 토론회를 기대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여자가 적어서 약간 실망했다고 하셨다. 그러나 토론을

마칠 즈음에는 오히려 참가자 숫자가 적어 깊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생각이 더 깊어질 수 있었다는 소감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생산자, 실무자, 조합원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많지 않아 정보를 간접적으로 듣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연히 알고 있던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앞으로 이런 크고 작은 수다의 장을 자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난상토론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말은 ‘한살림다운’이다. 한살림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일까? 생명살림과 협동운동이 실현되는 의사결정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한살림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깊으셨고 특히 생산자님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크셨다. 이 마음들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살림을 지켜왔고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한다. 한살림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한 조합원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다.

“항상 한살림에 감사하고 있고요, 특히 생산자분들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이렇게 좋은 먹거리를 먹고 있구나 싶어요.  
가끔 행사 때 그분들을 뵈면 존경스럽고요.  
막연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장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힘든 면도 있고  
생산자분들이 기후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싶어 숙연해집니다.  
저는 한살림이 좋아요.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한살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별 준비 없이 참석했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건강한 고민을 갖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같이 잘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기획 — 특집

# 한살림의 참깨 논의에 대한 속의민주주의의 적용과 의미

정규호(한살림연합 대외협력실장)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한살림연합 정책기획본부장 역할을 맡았었고, 현재 한살림연합의 대외협력 업무에 함께 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적경제, 녹색 전환 등 대안 사회 모델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다. [ecosociety@hansalim.or.kr](mailto:ecosociety@hansalim.or.kr)

## 1. 전환의 시대, 속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 복합적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변화 즉 '전환'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생활양식 전환에서 문명 전환까지 전환의 차원은 다양하며, 근래에는 생태적 전환, 디지털 전환 등 국가 운영의 기조로까지 전환이 거론되기도 한다.

문제는 전환의 방법인데, 어떤 강제적 수단이나 일방적 희생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이면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필자는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모든 전환의 시작이자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소위 전환의 시대를 맞아 운동의 방향 모색은 물론이고 제도나 시스템의 역할을 평가함에 있어 그것이 인식의 전환을 매개하고 촉진하는지 아니면 가로막고 위축시키는지가 기준이 되었으면 한다. 민주주의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기후위기 문제를 놓고 현실 민주주의의 역할을 살펴보면 물음이 점점 커지게 된다. 기후위기라는 예견된 재난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현실의 대응 속도는 너무나 더디다. 4~5년 임기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지금의 선거 민주주의로 과연 가까운 미래인 30년 후의 지속가능성이라도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sup>1</sup>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선거 정치는 눈앞의 이익과 욕망을 자극해 표를 모으려는 낡은 행태를 기후위기 시대에 여전히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녹색평론 발행인이자 생태사상가였던 김종철 선생은 기후변화 등 오늘날의 숭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난제들을 현행의 민주주의로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만큼, 지금보다 질적으로 다른 21세기형 민주주의로서 속의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2</sup>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공적인 방

---

1) 정부는 2050년을 탄소 순배출 제로(Net-Zero)인 탄소중립국가 실현의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2) 김종철. 2019.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녹색평론사. pp127-128.

향으로 전환시켜내는 데 있어 숙의민주주의가 가진 특성에 주목한데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사실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현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능성 측면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대리인을 선출해 역할을 위임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개인의 선호가 고정되고 주어진 것으로 보고, 투표 등을 통해 선호를 모아 의사결정 하는데 효과적이긴 하나, ‘대의의 실패’와 ‘참여의 약화’에 대한 지적도 많이 받게 되었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가 대안으로 등장했는데, 민주주의 원리상 참여 확대가 가진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의사결정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의 확대와 참여의 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낯것 그대로의 여론(輿論)을 성숙한 공론(公論)으로 전환시켜 내기 위한 역할로서 숙의민주주의가 주목받게 되었다.<sup>3</sup>

숙의민주주의는 사리분별(事理分別)식 토론 보다는 심사숙고(深思熟考)식 토의를 통해 참여자들의 인식의 전환과 확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특징이다.<sup>4</sup> 따라서 숙의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수단으로써 보다는 의사형성 과정 전반에서 그 역할이 강조된다. 다양한 의견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공동의 성찰과 학습으로 이어지고, 사려 깊은 판단과 통찰력으로 공동의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숙의민주주의에 기대하는 주요 역할이라 할 수 있다.<sup>5</sup>

---

3) Rossi, J. 1997. "Participation run amok: the costs of mass participation for deliberative agency decision-making."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92(1) pp173-249.

4) Cohen, J. and Sabel, C. 1997. "Directly-deliberative polyarchy." *European Law Journal* 3(4). pp313-342.

5) Dryzek, J. S. 2000.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 한살림과 숙의민주주의의 적용 모색

### 1) 한살림과 숙의민주주의의 연계

인식의 전환을 매개하고 촉진시키는 숙의민주주의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 조합원이 주인으로서 출자자, 소유자, 이용자라는 다중적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은 결사체와 사업체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결사체와 사업체는 각각의 운영논리 특성이 있는데, 결사체 영역에서는 과정과 합의를 더 강조한다면 사업체 영역은 효율성과 결과의 책임성이 더 강조된다. 결국 결사체와 사업체 영역 각각이 가진 특성들을 조화롭게 연결시켜 협동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야 말로 협동조합의 성공을 위한 열쇠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의(熟議) 과정을 통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서로 다름이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고 차이를 존중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협동의 영역들을 찾고 확장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한살림은 사업체와 결사체는 물론 생산과 소비까지 서로 성격이 다른 영역들을 함께 아울러 생명협동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숙의민주주의의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숙의민주주의가 강조하는 인식의 전환과 대안의 창조는 일찍이 <한살림선언>에서도 강조했던 바이기도 하다. 한살림선언은 ‘생명의 세계관 확립’을 통한 ‘생활양식의 창조’를 핵심 내용으로 밝히면서, ‘생명에 대한 인식의 지평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숙의민주주의의 적용 필요성은 민주적 의사결정 방안 모색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한살림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 정책이나 의제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조직 규모의 확대와 복잡화 과정에서 대의 제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 방식의 개선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숙의민주주의가 가진 특성들도 적극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숙의민주주의의 역할은 의사결정 방식의 개선을 넘어서 대안을 모색

하고 창조해 나가는 데로 확장된다. 특히 기후위기 문제는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더욱 심한 영향을 줄 전망이어서, 기존의 인식과 접근 방식을 넘어선 과감하고 새로운 모색을 해나가는 데 있어 숙의민주주의가 가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숙의민주주의의 특성과 의미를 설명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현실에 적용한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2017년 신고리 원전 5, 6호기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활동이 대표적인데,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sup>6</sup>

한살림의 경우 숙의민주주의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사례로는 한살림수원의 방사능 논의단 운영 경험 정도가 있다. 2017년에 한살림경기남부 조직으로부터 분화·창립한 한살림수원은 매우 민감하면서도 판단과 결정이 쉽지 않은 방사성물질에 대한 취급기준 설정 문제를 논의단<sup>7</sup>을 구성해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적용해 풀어가고자 했다.<sup>8</sup>

따라서 전환의 시대를 맞아 조합원 민주주의를 확대, 심화시켜나가는 차원에서 한살림에서도 숙의민주주의의 적용 가능성과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작년 말에 한살림에서 진행된 ‘참깨’와 관련한 논의 과정들을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깨 문제는 기후위기와도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고, 한살림에서 특별한 역사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다, 생산과 가공, 소비 전반에 연결된 부분들이 커서, 사업체와 결사체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었다. 숙의민주주의는 공적인 공동의 이슈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뚜렷한 경우에 장점을 발휘할 수 있

---

6) 민희·민태은. 2020. “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 그리고 공론: 의미와 적용.” 『비교민주주의연구』 16(1) pp. 5-31. /박종간. 2020. “민주적 숙의를 통한 담론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공론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논의단에는 9명이 참여해 2018년 4월부터 4개월 간 조합원 의견청취, 워크숍, 집담회, 보고서 작성 등의 역할을 하였다.

8) 한살림은 연합 공동의 방사성물질 취급 기준(성인 8Bq/kg, 영·유아물품 4Bq/kg)을 설정하고 있는데, 경기남부 생협은 연합 보다 더 높게 불검출 기준을 자체 설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어서, 새로 창립된 수원 생협 차원에서도 기준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논의 결과 한살림연합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는데, 이점에서 한살림의 참깨 논의에 대한 숙의민주주의의 적용은 의미가 있다.<sup>9)</sup>

물론 한살림의 참깨 논의 과정 자체가 숙의민주주의 차원에서 사전에 기획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후적으로 논의의 과정들을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데, 기존 의사결정 논리로서 놓칠 수 있는 다양한 지점과 시사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

## 2) 숙의민주주의의 성공 조건

숙의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숙의의 ‘시간’과 의사결정의 ‘속도’ 사이의 딜레마를 잘 해결해야 한다.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성급한 합의와 결론으로 끌고 갈 경우 부작용과 후유증도 커지게 되고, 그렇다고 무한정 길어지는 숙의 과정으로 의사결정 자체를 표류시키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이다.<sup>10)</sup> 사업체와 결사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 조직의 경우 이런 딜레마의 해결은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숙의민주주의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한살림의 참깨 논의처럼 숙의민주주의를 현실에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기도 한다.<sup>11)</sup>

### (1) ‘신뢰’는 숙의의 기본

숙의 과정 참여자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소중하다는 신뢰,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로 부딪히더라도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동료라는 신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숙의 과정에

---

9)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인식의 전환은 개인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이익갈등 영역 보다 공적 이슈를 둘러싼 가치갈등 영역에서 더 생산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10) Pellizzoni, L. 1999. “Reflexive modernization and beyond.” *Theory, Culture and Society* 16(4), pp99-125. / Dryzek, J. & Braithwaite, V. 2000. “On the prospects for democratic deliberation: values analysis applied to Australian politics.” *Political Psychology* 21(2), pp241-266.

11) 숙의민주주의의 성공 조건은 관련 논자들의 논의(Fung and Wright, 1999: 34-42; Knight and Johnson, 1994; Weeks, 2000: 361-362; Fishkin, 2020: 78-87; 정규호, 2005)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리하였다.

대한 신뢰가 바로 그것이다.

## (2) '시간'과 '정보'는 중요한 숙의의 자원

깊은 숙의를 위해서는 충분하고 밀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의제의 성격에 맞게 의사결정 전 단계에서 숙의의 시간을 가급적 충분히 마련하는 노력과 함께, 의사결정 이후에도 학습과 대안 탐색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숙의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양질의 '정보'야 말로 숙의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종합적 판단을 바탕으로 인식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들이 숙의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충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 (3) '다양성'과 '공정성'은 숙의 과정 운영의 원칙

다양성은 숙의의 출발점이자 긍정적 자원이다. 다양성은 확증편향의 오류를 극복하고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토대이자 대안 탐색의 기반이다. 따라서 배경과 경험, 관점이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과 배제 없이 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의견이든 동등하게 존중받으면서 안정되고 공정한 분위기에서 숙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원칙은 숙의 과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

## (4) 숙의 참여자 '자세'와 '역량' 향상 노력

숙의의 원칙이나 제도가 잘 작동하려면 결국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숙의는 서로 다른 주장들을 마주하는 결코 편치만은 않은 과정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식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근거에 기반해서 주장을 펼치고 경청의 자세로 성실하게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찾아가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숙의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참여자 교육과 안내자 양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3. 한살림의 참깨 논의와 속의민주주의의 적용

#### 1) 참깨 논의의 등장 배경

한살림이 참깨 문제를 고민하게 된 배경에는 기후위기 문제가 있다. 이미 전 세계 공통의 문제가 된 기후위기는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핵심가치로 삼아 온 한살림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한살림 조합원의 우려도 매우 크다.<sup>12</sup>

실제로 기후위기로 인한 한살림 생산지 피해는 매년 겪는 일이 되었고, 2020년도 예외가 아니어서, 참깨 문제가 한살림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던 시기와 맞물려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한 생산지 피해가 과제로 등장했다. 9월 생산자연합회 이사회(9/16)와 연합이사회(9/24)를 통해 생산지 피해가 보고되었고, 10월 연합이사회(10/22)에서는 생산지 폭우피해를 돕기 위한 조직적 모금 방안을 논의해, 총 2억 2천4백여만 원을 모금해 288개 피해 생산지에 1억 7천8백5십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0년 생산안정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sup>13</sup>

주목할 부분은 논의 과정을 통해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산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품질도 높여야 하는 생산자들의 고충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한살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고민과 더욱 빈번해질 생산지 재해에 대해 모금 외 재해기금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 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기후위기가 생산과정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참깨’ 문제가 조직적 논의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여기에는 참깨라는 물품이 한살림에서 가지는 특성도 영향을 주었다. 참깨를 원료로 한 참기름은 한살림을 처음 시작했을 때

---

12) 2020년 8월 한살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6천7백 명 참여)에서 조합원 대다수는 코로나19보다도 기후위기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고(84.6%), 기존의 생각과 접근방식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87.2%).

13) 조합원 모금 5천7백4십만 원, 기관 모금 1억1천만 원, 한살림서울 별도모금 4천8백만 원, 기타 8백6십만 원이 모금되었다.

부터 함께했던 상징적 물품인데,<sup>14</sup> 수확기에 연이은 폭우로 국내 생산지 전체가 타격을 받음으로써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조합원들에게 참깨와 참기름을 공급할 수 없게 되고, 참기름을 생산·이용하는 가공산지들은 경영적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 문제는 한살림의 상징적인 물품인 참깨를 비록 한시적이거나 수입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 2) 참깨 논의 전개 과정과 쟁점들

### (1) 참깨 생산 현황 확인과 대책 논의

기후위기로 인한 지역 생산지별 참깨 피해 상황은 10월 연합이사회에 보고되기 시작했고,<sup>15</sup> 11월부터 한살림의 각종 회의 단위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 보고와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sup>16</sup>

시간 순서로 보면 먼저, 11월 농산물위원회(11/3)에서 참깨 작황 및 수급 상황이 구두로 보고되었고, 소식지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 안내와 조합원 의견 수렴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 11월 가공품위원회(11/5)에서는 20년산 참깨 작황 부진으로 필요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보고하고, 주원료의 구입처를 외부업체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공용 참기름, 참깨 주원료 구입처 변경 건’이 논의되었다.

11월 생협사업추진회의(11/10)에서는 참기름류(공급·가공용) 원료의 한시적 취급기준 변경 제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취급기준 변경의 한시적 허용을 가공용과 조합원 공급용 모두로 하는 방안(1안)과 가공용에만 적용하는 방안(2안) 모두를 지

---

14) 참기름을 처음 공급했던 원주소비자협동조합은 한살림 운동의 출발지였고, 기계를 구입해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한 것이 한살림 가공사업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한살림에서 참기름이 가지는 특별한 역사와 의미가 강조되었다. (황도근. 2020. “기후위기와 한살림운동.” 『모심과살림』 제16호. pp5-11.)

15) 충주 참깨 250평 토사유입, 원주 참깨 500평 침수, 홍천 참깨 304평 썩음, 전남 참깨 노지400평 수확 포기 등 생산지 피해 상황이 보고되었다.

16) 수확기 피해로 11월까지 2020년산 참깨 확보량은 20톤 정도로 필요량 210톤에 절대 부족한 상태였고, 국내산 참깨 수매 가격도 평년대비 59% 상승한 데다 이마저 수급이 여의치 않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2021년 1월 이후 참기름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역 이사회와 연합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제안 내용은 11월 23개의 지역생협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지역별 의견들은 매우 다양했다.<sup>17</sup> 이처럼 참깨 수급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은 11월 연합이사회(11/26)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연합이사회 논의 과정은 매우 역동적이었다. 먼저, 20년산 참깨의 작황부진에 따라 참기름과 볶은참깨 원료로 수입산 참깨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재적 26명 중 찬성 19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하였다.<sup>18</sup> 이후 수입산 참깨의 허용 범위를 놓고 제안된 1안(조합원 공급용과 가공식품용 모두)과 2안(가공식품용만)을 놓고 긴 시간 논의를 거쳐 표결한 결과, 재적 26명 중 1안 11명, 2안 11명, 기권 4명으로 1, 2안이 각각 동수로 나왔다.

결국 추가 논의를 이어간 결과,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참기름과 볶은참깨는 수입산 참깨 원료 사용을 한시적으로 승인하되, 조합원 공급용 참기름과 볶은참깨의 수입산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조합원 의식조사를 먼저 거친 후 다음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sup>19</sup>

## (2) 수입산 참깨 취급 여부에 대한 조합원 의식조사와 의사결정

이사회 결정에 따라 수입산 참깨를 원료로 한 참기름과 볶은참깨 2종에 대한 한시적 취급 허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의식조사가 2020년 12월 7일부터 9일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지난 1년간의 참기름 이용 조합원 중 1만 5천 명과 일반 이용 조합원 중 1만 5천 명 등 총 3만 명을 층화표집해 진행했고, 7천3백 명(응답률 24.3%)의 조합원이 설문에 참여했다.

---

17) 1안에 찬성한 지역(대전, 경기동부, 강원영동, 경기서남부 등)과 2안에 찬성한 지역(서울, 부산, 광주, 울산, 전북 등)이 있는가 하면, 1, 2안 모두 부결 의견을 준 지역들(제주, 고양파주 등)도 있었다.

18) 20년산 국산 참깨의 수급이 어려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를 말하며, 그 이후는 21년산 국산 참깨가 수급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19) 한살림 가공식품 중 참기름류를 사용하는 품목은 53개로, 18개 가공업체에서 약 130억 원에 달하는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어, 가공품별 참기름 사용량은 비록 적으나 공급 중단 시 경영적 피해는 물론 신규물품 개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수입산 참깨의 한시적 허용에 동의하는 조합원이 55.5%,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이 44.5%로 나타났다.<sup>20</sup> 연령대가 높을수록, 한살림 가입기간이 길수록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물품 이용횟수나 이용액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sup>21</sup>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연합이사회(12/24)에서는 긴 시간 논의를 통해 조합원 공급용 참기름과 볶은참깨 원료의 한시적 수입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일정기간 조합원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국내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의미한다. 의사결정 당시 재적 이사 30명 중 수입산 참깨 취급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18명, 기권 6명으로 결론이 날 정도로, 논의는 마지막까지 치열했다. 반대 의견이 다수 나오게 된 데는 수입산 물품 취급과 관련한 기존의 조합원 의식 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이번 수입산 참깨 취급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 의견 차이가 (55:44) 크지 않았던 점도 작용하였다.<sup>22</sup>

다만 수입산 참깨 사용을 놓고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문제의식들을 조합원에게 잘 알려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인식을 함께 했다. 물론 조합원 가운데는 설문조사 결과와 연합이사회 결정을 놓고, ‘한살림에서 어떻게 수입에 동의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는지 의아하다’, ‘찬성 의견이 더 많았는데 왜 다른 결정을 내렸느냐’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다.

### (3) 의사결정 이후 후속 조치와 대안 모색

국내산 취급의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수입산 참깨의 한시적 취급을 하지 않기

20) 동의한 조합원들은 ‘수입산 참깨 원료라도 생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한살림에서 구입하고 싶다’(60.2%)는 것이 주된 이유로 밝혔다면,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한살림은 국산취급 기준을 지켜갔으면 한다’(71.0%)가 주된 이유였다.

21) 23개 지역생협 중 수입산 참깨의 한시적 허용에 ‘동의’하는 의견이 높은 지역이 17개, ‘비동의’ 의견이 높은 지역은 6곳이었다.

22) 2013년 설탕 취급에 대한 7개 지역생협의 조합원 의식조사에서는 86%가 설탕 취급에 찬성했으며, 2019년 우리밀 가공식품 원료 일부(카카오류, 커피, 아몬드, 올리브유) 수입 사용에 대한 조합원 의식조사에서는 찬성 67.1%, 일부 찬성 19.1%, 반대 13.8%로 나타났다.

로 한 연합이사회 결정이 있는 후, 재고 소진 후 조합원 공급용 참기름과 볶은참깨는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한살림 소식지(640호)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전달되었다.

중요한 것은 결정 내용의 전달을 넘어 후속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의사결정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단기적 대응에서 중장기적 대책까지 다양한 차원의 대안들을 모색해가는 것은 숙의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 ① 가공산지 대책 논의

참깨 수급의 어려움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가공산지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산지간 품목조정 조치를 취했다. 가공시설 특성상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안되기에 마련한 조치다.<sup>23</sup> 이와 함께 해당 가공산지 지원 대책들도 논의되었다. 원부재료 구입 자금과 일시적 운영자금 등 가공산지 긴급 자금 지원에 대한 방안과 함께, 산지가격 조정을 통한 경영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가공산지의 사기 진작을 위한 위로와 지원금 전달 방안도 함께 이야기되었다.

또한 직접적인 지원책은 아니지만 생산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가공을 위해 펀딩 등을 통해 참깨 원료를 6개월 정도 비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 ② 참깨 생산기반 확대 방안 논의

참깨 농사는 손이 많이 가고 습도 등 기후변화에 민감한데다 병충해에 취약해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다. 2020년 경우 한살림에서 43명의 생산자가 2만 2천 평에 4.6톤의 참깨 생산을 약정했으나, 실제 수확은 9명이 약정량의 10% 수준인 460kg을 출하하는데 그쳤다.

그래서 이번 참깨 논란을 거치면서 생산자연합회를 중심으로 참깨 생산기반

---

23) 살림농산은 들기름과 조합원공급용 참기름을 최소 제한수량으로 공급하고, 천지인은 수입 원료로 생산한 가공용 참기름을 전담 배치하는 내용이다.

확대를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생산자들로부터 2021년 참깨 생산계획을 취합했다. 4월 10일 기준으로 취합된 결과를 보면, 친환경 참기름용 참깨 신청 면적은 5만 7천7백 평, 일반 국내산 참기름용 참깨 신청 면적은 4만 2천7백 평으로, 전년 보다 크게 늘어난 총 10만여 평의 참깨 생산 계획이 신청되었다.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그 면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자들의 이런 움직임은 현안으로 등장한 참깨 생산 문제를 조합원과 함께 해결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생산면적 확대 외에도 기피작물인 참깨 생산이 지속되도록 가격 인상은 물론, 참깨농사 후작으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약정, 자투리땅에 참깨를 생산할 경우 인증문제 해결 등 다양한 대책들이 제안되었다.

### ③ 잡곡생산 전반에 대한 대책 모색

참깨를 포함해 잡곡은 농사는 어렵는데 농가소득은 낮아 기피작물이 되었고, 그 결과 잡곡 자급률은 매우 낮아, 대부분의 잡곡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sup>24</sup> 잡곡의 이런 상황은 한살림도 예외가 아니어서, 21년산 잡곡생산관련회의를 통해 확인된 잡곡 품목별 신청량은 소비계획량에 미달해서 부족분을 수급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생산자들이 잡곡농사를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참깨를 둘러싼 논의 과정이 한살림 잡곡 전반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로 이어진 점은 의미가 있다. 생산자연합회를 중심으로 잡곡생산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잡곡 생산지 단지화, 소규모 생산자 참여 독려,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마진율 조정 및 기금사용 등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고, 문제해결 과정에 조합원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농산물 위원회에서는 한살림 잡곡의 방향성과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2021년 상반기 연수 주제로 설정하는 등 잡곡생산 확대 방안에 대한 조직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24) 쌀 이외 밀, 보리, 콩, 옥수수 등의 우리나라 잡곡류 자급률은 5%에 불과하다.

### 3)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시사점과 과제

숙의민주주의는 수입산 참깨를 취급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의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긴장을 만들어 내고 대안을 모색해가는 ‘의사형성’의 영역에 주목해 봄으로써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찬반 입장을 넘어선 공동의 인식 형성

수입산 참깨 취급에 ‘찬성’ 의견을 밝힌 사람들은 밥상에 꼭 필요한 양념인 참기름의 공급 중단에 따른 조합원의 불편과 참기름 가공 생산지의 경영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수입산 참깨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살림에 거의 전량 공급하는 참깨 가공산지가 가동이 어려워질 경우 국산 참깨의 주요 수요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런 입장을 뒷받침했다. 다만 수입산 참깨를 취급하더라도 자주기준서 등 기존의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 엄격한 검사 및 관리와 취급 기간의 최대 단축을 함께 주문했다.<sup>25</sup>

한편,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 주장의 핵심은 한살림으로서 상징성이 큰 참깨를 수입한다는 것은 한살림이 지켜온 국내산 취급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며, 이번 결정이 다른 품목에도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참깨 수급을 못해 입게 될 가공산지의 피해는 수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처럼 동일한 사안을 두고 서로 입장이 나뉘듯이 보이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공통된 인식의 기반들이 확인된다. 즉 수입산 참깨를 취급하든 안 하든 이것은 약 8~9개월 기간의 ‘한시적’ 대응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는 논의 참여자들 대부분이 인식을 함께 하고

25) 한살림물품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리한 <한살림 자주기준서>에는 가공원료 허용기준으로 농수산물료는 한살림 참여인중 및 국내산 친환경 원료를 우선 사용하고, 수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며, 국내산으로 조달이 어려운 경우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되 자주기준서 부속서에 정한 허용품목과 금지품목 목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있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기후위기는 앞으로 얼마든지 반복, 확대되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한살림의 가치를 담아내면서도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두가 힘을 모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이번 한살림의 참깨 논의는 숙의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대안 모색의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큰데, 수입산 참깨 허용 여부를 넘어 참깨 가공산지의 경영 지원을 위한 단기 대책은 물론이고, 참깨를 포함해 잡곡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과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정책 방향 등 대안 모색의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 (2) 신증론에 대한 재해석과 과제

한편, 이번 참깨 수입 허용 건과 관련해 찬반 입장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신증론도 주요하게 등장했다. 신증론의 이면에는 두 가지 차원이 확인되는데, 하나는 이번에 참깨 수입을 결정하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sup>26</sup> 이것은 한살림이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 및 원칙과는 다른 ‘예외적’ 조치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진행될 경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숙의의 과정이 자리할 수 없도록 만든다. 불신은 계기를 제공한 특정 사례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이전,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 과정과 방식에 대한 것으로, 이번 참깨 수입 허용에 대한 ‘한시적 조치’처럼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을 놓고 숙의의 과정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다. 구체적으로 당장 눈앞에 놓인 공급 중단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 시간이 넉넉치 않다는 의견과,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성급한 결정 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이에서 문제 해결의 과정과 방식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물론 현실에서 서로 다른 양쪽의 요구를 모두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하지

---

26) “국내 작황이 안 좋다고 참깨를 수입하면 다른 작물도 작황이 안 좋으면 그것도 수입할 것이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만 비록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숙의 과정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다는 신뢰를 놓치지 않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한살림의 참깨 논의 과정 살펴보면, 조합원 설문조사를 거쳐 한 달 후 재논의 하는 과정을 통해 숙의의 시간을 추가로 마련한 점은 숙의민주주의 차원에서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다.<sup>27)</sup>

### (3) 소통의 문제와 숙의 과정의 적용 효과

참여의 한계와 소통에 대한 불신의 해소에 있어 숙의 과정이 가지는 효과는 분명하다. 사실 한살림이 참깨 논의를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숙의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특히 소통의 문제는 조합원이 참여하는 두 물품위원회(농산물, 가공품)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11월 말 농산물위원회(11/30)에서는 참깨 관련 논의가 위원회의 사전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바로 설문조사로 진행되는데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12월 가공품위원회(12/11)에서도 보고 내용이 충분치 않고 의견수렴 과정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 달 회의에서는 국내 외부업체로 참깨 수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갑자기 수입산 취급 여부로 논의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산 수급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불가피하게 수입산 취급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상황이 긴박할수록 사전 소통이 중요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통 문제는 올 해 초 진행된 물품위원회(농산물, 가공품)와 연합 상임대표와의 간담회(1/13)에서도 나와, 물품과 관련한 시의성 있고 명확한 정보가 위원회와 소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소통의 문제는 한살림 전 조직이 함께 하기로 한 ‘2020년 한살림공동물품이용행사’의 준비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물품위원회와 함께 7월부터 공동물품이용행사를 준비하면서 행사 대표 물품 중 하나로 참기름을 선정해 11월부터 진행하고자 했는데, 참깨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뒤늦게야 확인할 수 있었다.<sup>28)</sup>

---

27) 설문조사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깨 수입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과 함께 기후위기에 따른 한살림 농사 상황을 알려내고자 한 목적도 함께 두고 있었다.

28) 한살림물품의 역사성과 확장성을 알려내고자 1986년 한살림농산을 통해 시작한 대표 물품 4가지(쌀, 두부, 유정란, 참기름)를 선정했다.

생산영역에서도 잡곡 생산관련회의 등을 통해 소통의 아쉬움이 이야기되었는데, 참깨 생산과 관련해 생산공동체 간에 사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추가 수매 등의 수급 대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참깨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수확되고 10월에 수매하는데, 이때는 이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국내산 확보가 쉽지 않게 되었는데, 생산조직 현장을 가지고 있는 한살림으로서 작목별 상황 변화를 좀 더 일찍 파악해 대책을 세워나갔으면 좋았었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통에 대한 아쉬움은 연합이사회 차원에서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고 의견수렴과 숙의의 시간을 더 가지게 됨에 따라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연합이사회 결정 이후 21년에 처음 열린 농산물위원회(1/6)에서는 참깨 논의 시작 단계에서 소통의 아쉬움이 있었으나 진행 과정에서 설문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매장을 통한 설문 진행 안내 등 과정을 함께 밟아 가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설문 결과와 이사회 결정 내용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들도 나왔다.

특히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주목할 부분은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를 넘어 대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의 의견들이 나왔다는 점이다. ‘매장 내 참깨, 참기름 자리는 비워두고 왜 없는지를 계속 이야기해 나가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자’, ‘이번 기회에 참깨를 포함해 잡곡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 나가자’, ‘잡곡 농사를 기피하니 한 품목이라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자’에서부터 ‘이번 참깨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정리해서 이후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때 매뉴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이처럼 참깨 수급 문제처럼 중요하면서도 긴박한 의제의 경우 이사회를 중심으로 보고되고 활발하게 논의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들이 한살림 내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신속히 공유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요 의제의 다층적 소통 채널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견전달은 물론이고 숙의 과정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학습과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4. 결론 및 제언

숙의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의 결과보다는 의사형성의 맥락과 과정에 주목한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오간 다양한 의견들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낸 인식의 전환과 대안에 대한 탐색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살림에서 참깨 수급에 대한 문제를 놓고 약 3개월간 진행된 논의 과정들을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되짚어 보고자 했다. 한살림에서 참깨 문제는 이미 의사결정이 끝난 지나간 일로 볼 수만은 없으며, 현재와 미래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장기적인 대책과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성찰과 학습을 통한 참여 주체들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가능한 일로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번 참깨 문제는 한살림의 핵심가치와 연결된 데다, 생산과 소비, 사업체와 결사체 영역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된 것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사전에 기획하지는 않았으나, 숙의의 과정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비교적 갖춰진 채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자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논의 참여자들은 사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동의 발전 방안을 찾으려 한다는 기본적 ‘신뢰’가 있었고, 조합원 물품공급과 가공산지 대책 등 사안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충분치는 않으나 의사결정을 미루고 숙의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자료 전달 시점에 일부 아쉬움은 있으나 상황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자 하였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약 없이 나올 수 있도록 논의 과정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참깨 논의는 수급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가공생산지 대책, 잡곡생산 기반 마련, 기후위기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문제 등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물론 숙의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으며, 특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적용되고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논의하고 의사결정해야 할 다양한 의제들 가운데서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적용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숙의의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참여자들에게도 깊은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이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숙의민주주의는 정체성 및 핵심가치와 연결된 문제를 다룰 때 특히 의미가 있다. 논의 참여자들 각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이나 주장으로부터 자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런 성격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숙의민주주의는 그 어떤 가치나 원칙도 주어지고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핵심가치 영역도 계몽과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하고 지속적인 검토와 창조적인 해석을 통해 공감하고 합의해 나가는 것으로 본다. 이런 인식과 접근은 조직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핵심가치가 화석화되지 않고 살아 있게 해주는 것으로, 한살림이 숙의민주주의를 다룰 때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지점이다.

숙의민주주의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숙의의 과정 자체에 대한 조직적 신뢰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숙의 과정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특히 양질의 정보 전달과 적극적인 의견 수렴 노력은 숙의의 질은 물론이고 숙의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를 높여준다. 시점을 놓치거나 제한적인 정보의 소통은 오히려 오해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한살림의 경우 의사결정 단위(연합이사회, 지역생협 이사회)는 물론이고, 각종 위원회(운영위원회, 물품위원회 등), 대의원 모임, 조합원 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밀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수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계를 넘나드는 온라인 모임 공간도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숙의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끝난 이후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의사결정까지의 많은 논의 과정들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실종되지 않고 구체화 과정을 통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까지 숙의 과정에 함께 하여 인식의 전환과 공감과 합의의 기반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숙의민주주의는 의미 있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물품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2020년 제10차 연합 농산물위원회(11/3), 제11차 연합 농산물위원회(11/30), 제11차 연합 가공품위원회(11/5), 제12차 연합 가공품위원회(12/11), 2021년 제1차 연합 농산물위원회(1/6), 제2차 연합 농산물위원회(2/2)

생협사업추진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 2020년 제9차 생협사업추진회의(9/8), 제11차 생협사업추진회의(11/10), 제12차 생협사업추진회의(12/8), 2021년 제2차 생협사업추진회의(2/10)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2020년 9월 이사회(9/16), 12월 이사회(12/16), 2021년 1월 이사회(1/20), 4월 이사회(4/21)

한살림연합 회의자료 및 회의록: 2020년 제8차 정기이사회(9/24), 제9차 정기이사회(10/22), 제10차 정기이사회(11/26), 제11차 정기이사회(12/24), 2021년 제1차 정기이사회(1/28), 제2차 정기이사회(2/18)

기획 — 특집

# 숙의민주주의 딜레마와 한살림 민주주의

조미성(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원)



기후변화교육, 과학기술시민성 등을 공부하며 활동하다 현재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와 생명들이 평화롭게 공생하기 위해 필요한 관점과 방식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 요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구름에 떠 있는 꿈을 땅으로 끌어내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jomiso@hansalim.or.kr](mailto:jomiso@hansalim.or.kr)

한살림에서는 거의 매년 다양한 주제로 크고 작은 토론회가 열린다.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토론회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얻는가? 가끔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급하게 봉합되었거나 뭔가 빠뜨린 것 같은 찝찝함이 남을 때가 있다. 때로는 그 결과에 대해 누군가 다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우리의 토론 방식, 혹은 우리가 토론을 보는 관점을 다시 짚어봐야 하지는 않을까?

한살림에서도 ‘숙의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이유는 아마도 새로운 토론 방식과 관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숙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어떤 장점과 딜레마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한살림에 적용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질문하고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 1. 숙의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한살림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기본원리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그런데 평범한 국민인 우리에게 정말 권력이 주어지고 있다고 느끼는지, 협동조합을 비롯한 경제와 삶의 영역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묻는다면 쉽게 ‘그렇다’고 대답하지는 못할 것 같다.

왜 그럴까? 먼저 정치적으로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는 투표할 때뿐이다. 그마저도 내가 지지한 인물이 당선되지 못하면 좌절감을 느끼고, 내가 지지한 인물이 당선된다 해도 그가 나의 바람을 대변하거나 실현시켜주지 못할 때가 더 많다. 한살림으로 따지면, ‘조합원 대표들이 다수 조합원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의사결정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투표를 열심히 하지만 현실에서 바뀌는 것이 없을 때 무

력감을 느끼고 냉소주의에 빠지기 쉽다.

그런데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는 민주주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여러 방식 중 하나를 택함으로써 발생한 현상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어쩌면 문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닐까? ‘진정한’ 민주주의를 찾으려는 노력은 대의제가 아닌 다른 민주주의의 형태를 모색하게 한다. 직접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추천민주주의 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숙의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시장과 소수 엘리트 관료의 지배하게 되는 대의적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199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주목받은 정치이념이다. 숙의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절차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특정 이슈에 대해 심화된 정보를 학습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토론회나 여론조사에 비해 사전학습과 ‘숙의’가 전제되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숙의민주주의에서 ‘숙의’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 개인들 사이의 깊이 있는 대화’이며 다른 하나는 ‘한 개인의 내적 성찰’을 의미한다.<sup>1</sup> 요약하면 숙의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개방적이고 폭넓게 참여하여 반성적이고 자기성찰적으로 숙의하여 집합적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 공통의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sup>2</sup>

숙의민주주의는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관심을 받았고, 시민사회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활용한 몇 차례의 합의회의와 공론회를 실험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sup>3</sup> 2017년에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호기와 6호기 건

1) 김명식, 2009. 『숙의민주주의와 환경』, 철학과현실.

2) 정규호, 2005.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안: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논리의 특성과 함의.” 『시민사회와 NGO』 3(1), pp29-57.

3) 1998년 당시 과학기술민주화모임이 주최한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합의회의와 1999년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시민과학센터가 주최한 2004년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합의회의, 2007년 ‘동물장기이식’ 합의회의 등이 대표적인 숙의민주주의 실험이다. 2011년에는 스탠포드 대학 숙의민주주의센터와 서울대학교 주최로, ‘통일’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공론조사를 실시하여 토론 과정을 KBS에서 방송했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2018년에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도 진행되었다. 그 외 울산, 김해, 대구 등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한 소규모 공론화 사례도 있다.

설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약 3개월간의 공론회를 진행했다.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표집된 500명의 시민들 중 471명이 참여해 공부하고 토론하여 정책권고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일시 중단되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장기적으로는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sup>4</sup>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정부 주도하에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고 관심이 집중되었던 속의민주주의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속의민주주의가 보완하거나 넘어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선출된 엘리트 집단이 의사결정을 대신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속의민주주의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포괄적 참여를 지향하고, 소수 엘리트의 선택이 아닌 다수 대중의 사회적 합의로 의사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선호총합적 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이다. 서구 자유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선호의 총합’이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sup>5</sup> 선호총합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의 선호는 변하지 않으며, 각 개인은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인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한다.<sup>6</sup>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시민들은 현재 상태에서 마음에 드는 정당이나 사람에게 투표할 뿐 의무적으로 토론하거나 공부하지는 않는다. 반면 속의민주주의는 속의 과정을 통해 개인의 선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실제로 사람들의 선호는 타인의 선택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구성되며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 사람들이 선호와 견해를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며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수의 심사숙고와 학습을 거쳐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보고서』.

5) 선호의 총합(preference aggregation), Dryzek, J. S. 1995. “Political and ecological communication.” *Environmental politics* 4(4). pp13-30.

6) 김명식. 2009. 위의 책.

있다는 것이 숙의민주주의의 궁극적 믿음이다.

## 2.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딜레마

일견 숙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 모델로 보인다. 그러나 그 원리와 실천적 측면에서 딜레마를 가지고 있으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여기서는 숙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에 대해 살펴본다.

### 1) 실천적 측면: 참여의 양과 숙의의 질 사이 줄타기

역사적 시행착오는 숙의민주주의를 현실에 적용할 때 어떤 딜레마가 발생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그간 논자들 사이에 있었던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일말의 환상이 깨지는 계기였다. 혹자는 이제 한국에서 숙의민주주의를 편안하게 꺼내 놓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말한다. 신고리 공론화에 대한 평가에는 시민이 주체가 되었던 역사적인 실험이라는 긍정론과, 준비되지 않은 숙의민주주의의 형식적 도입으로 인해 민의가 도구적으로 이용당했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1990년대부터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숙의민주주의 실험을 해왔던 피시킨은 숙의민주주의의 딜레마를 한마디로 ‘거울’과 ‘필터’에 비유한다. ‘거울’은 다소 조악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반영된 여론을 보여주는데 반해, ‘필터’는 말 그대로 한번 걸러져서 성찰적이고 숙의적인 의견을 만들어내지만 대중들의 의견과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다.<sup>7)</sup> 필터가 잘 작동하여 매우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면 엘리트 정치가 될 위험성이 있는 반면, 거울처럼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참여자의 수

---

7) Fishkin, James S. 2009. *When the People Speak: Deliberative Democracy and Public Consultation*. / 박정원 역. 2020. 『숙의민주주의』, 한국문화사. p49.

를 크게 늘리면 숙의의 수준이 낮아질 위험성이 있다. 거울과 필터의 은유는 숙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의견과 대중들의 낱것의 의견 사이에 차이가 있고 결국 참여(양)와 숙의(질)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토론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체 구성원을 대표하지 못하는 현상을 ‘참여왜곡’이라고 한다.<sup>8)</sup> 참여왜곡은 여러 이유로 발생하는데, 우선 사회 경제적 차별이 참여과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의 토론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시민들은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고 지식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30대 이상의 연변이 뛰어나고 교육 수준이 높은 백인 남자들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up>9)</sup> 실제로 먹고 살기 바쁜 일용직 노동자나 저소득층이 시간을 내어 토론회에 참가하기가 쉽지 않다.

참여왜곡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자발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이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더 큰 이해관계나 동기를 가지기 때문이다. 한 살림에서도 토론 참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다수 구성원들의 의견과 약간 다를 때가 있다. 이때 다른 구성원들이 토론 참여자들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토론결과로 합의된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를 때 결정에 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공론장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교환의 장이 아니라 이미 확신을 갖고 타인을 설득하려는 이들의 싸움터로 변한다면,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 사안에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참가자들은 거리감과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된다.

숙의가 만병통치약처럼 늘 합의를 이루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환상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숙의를 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그 사안에 얽힌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숙의가 갈등을 완화시켜 주거나 합의에 도달하

---

8) 피시킨, 2020. 위의 책, p100.

9) Van Reybrouck, D. 2013. *Tegen verkiezingen*. / 양영란 역, 2016.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갈라파고스.

기 어렵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가 대표적인데, 공론화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대표성이나 과정, 공정성, 숙의비용 등 여러 이유로 이의가 있었고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각 이해관계자들은 합의내용에 승복하기 어려워했다.

참여자의 대표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 구성원들의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 하루 일을 쉬어야 하는 노동자에게 참가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고, 이외에도 더 긴 시간을 들여 토론회를 운영하고 더 많은 토론장을 만들어야 하는 등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숙의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숙의과정 자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 2) 원리적 측면: 더 정교한 엘리트주의인가?

숙의민주주의에 다양한 갈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이상적 대화상황’이 펼쳐지는 ‘공론장’을 그 핵심 원리로 삼는다.<sup>10</sup> 이 공론장에서 의사소통 행위가 비판을 받는 지점은 그것이 ‘이성적’인 ‘언어’에 의해 매개된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성과 감정을 철저히 구분하고 대립하는 개념으로 본 서양 철학의 이원론적 전통에서 비롯되었다.<sup>11</sup> 이원론적 전통에서 감정은 이성과 대립하고 자연(동물)은 인간과, 육체는 정신과, 여성은 남성과,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과 대립하며 전자는 열등하고 미성숙하여 후자의 지배를 받는 구도에 놓여있다. 특히 ‘감정’은 ‘비합리성’과 동등한 것으로 여겨지며 공적인 영역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미성숙하거나 부정적인 일로 간주된다.

감정을 배제한 채 이성만을 중심으로 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생활세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로막는다

10) 이는 주로 하버마스(Habermas)의 입장인데, 숙의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다수의 논자들이 하버마스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11) 이강형·김상호, 2014. “감정과 공론장: 비이성적 형식으로서의 감정에 대한 비판적 재고.” 『언론과사회』 22(1). pp79-113.

는 것이다.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는 하버마스의 용어는 삶의 작은 영역까지 자본과 시장이 침투하여 의미와 방향성을 상실하고, 시민으로서 자기 권력과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그저 파편화된 소비자와 고객이 되어버린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강력한 은유다.<sup>12</sup> 하버마스는 애초에 체계에 대항하여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세계를 상호주관적으로 이해하고 복원하는 수단으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비판하는 이들은 오히려 하버마스가 생활세계를 이성의 틀에 가둠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소박하고 사실적이며 생동적인 생활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한다.<sup>13</sup> 생활세계는 이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합리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회적 권력관계를 재생산하여 약자를 배제하고 다양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공론장에 참여하는 과정이 현실의 차별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일단 공론장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시 차별이 작용한다. 영(Young)은 공론장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누락되는 것은 ‘외적 배제’,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의 관점이 고려되지 않는 것을 ‘내적 배제’라 부르며, 미묘하게 은폐되어 있는 내적 배제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sup>14</sup> 특정한 집단은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할 기회가 있다해도 타인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 가령 저소득층의 한부모 어머니는 의견과 관점을 가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기 보다는 논의의 ‘대상’이자 ‘문제’로 간주된다. 그의 경험과 관점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은 문제상황에 처한 불쌍한 사람이자 시혜의 대상이라는 프레임으로 제시될 뿐이다.

숙의의 과정이 이성적 논변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공론장에서 지적 배경이 있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는 엘리트들의 이데올로기가 대중들에게 그대로 설득될 가능성이 크다. 흔히들 소위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12) Welton, M. R. 1995. *In defense of the lifeworld: Critical perspectives on adult learning*. SUNY Press.

13) 이는 주로 현상학자들의 입장이다. 참고: 이강형·김상호. 2014. 위의 글.

14) Young, I.M. 2000. *Inclusion and Democracy*, pp52-62.

시작하기도 전에 권위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다.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 입은 이와 행색이 초라한 이, 유려한 어조로 말하는 이와 어눌하게 말하는 이, 나이가 지긋한 남성 교수와 어린 여성이 각각의 상황에서 서로 대립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평범한 대중들이 (말의 내용을 검증해보기도 전에)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지 상상할 수 있다. 실제로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은 인종, 계급, 성별, 연령과 같은 특성을 무시한 균일한 사람들이 아니며, 현실의 무의식적인 편견과 차별이 은폐되어 작용한다.<sup>15</sup> 한마디로 이성과 언어 중심의 의사소통 합리성은 지적·사회적·경제적 소수자와 약자를 배제하거나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을 낮춘다.

결국 숙의민주주의가 처한 최대의 딜레마는 참여과정과 의사소통 모두의 측면에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할 수 없으며, 원래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그 권력관계를 은폐하고 정당화하며 재생산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 3. 숙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숙의민주주의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다는 권력관계를 반영하기 쉽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제대로 된 숙의는 평등한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숙의민주주의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숙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묻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숙의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딜레마를 보완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지 살펴본다.

---

15) Sanders, L. M. 1997. "Against deliberation." *Political theory* 25(3), pp347-376.

## 1)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_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

현실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은 보통 다수결을 채택한다. 그러나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기보다는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려야할 때 사용하는 차악에 불과하며, 간혹 소수자를 억압하거나 다양성을 배척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 의견을 묵살하는 기계적 민주주의가 답이 아님은 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필자는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이 “다양성과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것’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유지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sup>16</sup> 다양성은 합의와 논의를 어렵게 하는 골치 아픈 장애가 아니라, 관점의 지평을 확장해 주는 소중한 자원으로 간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하지 않은 사회는 위험하고 위기에 대한 회복력도 떨어진다. 위기의 시대에는 다양성이 높고 돌연변이가 많은 집단이 생존에 유리하다. 또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감정은 집단에 대한 자부심과 연대감으로 연결되어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숙의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으로 인해 누락되기 쉬운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여 숙의의 질을 높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 숙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이 부족하면 그 자체로 숙의의 질이 낮아진다.<sup>17</sup> 다양한 입장에 처해 있는 이들의 여러 경험과 관점이 반영되어야 현실의 문제를 다각도로 다룰 수 있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가 반영되기 위한 조건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해당 의사결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집단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전체 모집단

---

16) 여기서 다양한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람뿐 아니라 생물도 이 민주주의의 영역 안에 포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철학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신의 신념과 방식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태도는 인간만이 아니라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게도 그대로 전이된다. 만약 민주주의의 핵심을 다양성의 존중이라고 한다면 생태주의와 매우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게 된다.

17) 피시킨. 2020. 위의 책. p61.

의 비율(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대로 숙의참여자의 비율을 조정하되, 그 의사결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의 비율, 혹은 그동안 논의에 참여가 어려웠던 집단의 비율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있다.<sup>18</sup>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공동체는 해당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보며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소수자의 참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이성 중심의 이야기 방식으로 ‘내적 배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영은 내적 배제를 완화할 수 있는 세 가지 의사소통 양식을 제안한다.<sup>19</sup> 그중 ‘환대(greeting)’는 상대방을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고 공적 신뢰를 보낸다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반갑게 인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수사(rhetoric)’는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르게 수용되거나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성적 언어뿐 아니라 감정과 정서, 비유와 은유, 유머, 태도 등도 유용한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 수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자칫하면 타인을 조정하고 대중여론을 조작하는 화려한 언술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반면 이성적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집단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sup>20</sup> 마지막으로 ‘이야기(narrative)’는 소외된 구성원의 경험, 가치, 관점을 이야기함으로써 논의 참가자들이 기존의 편견을 거두고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성원 다수는 그들에게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집단에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야기’는 지배적 담론에서 배제된 그룹에게 이야기를 허락하는 방식이므로 이성적 논변보다 더 평등하고

18) 2001년 호주에서 원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전국적 숙의를 진행했을 때, 호주 인구 대비 호주 원주민의 비율은 2.5%에 불과하여 전국적 무작위표본을 통해서는 숙의 그룹당 원주민 대표를 포함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원주민을 과대표집(oversampling)하여 각 소그룹당 2-3명을 배치하여 숙의를 거쳤을 때, 숙의 이후 큰 변화가 있었다. 원주민과의 화해가 호주의 중요한 이슈라고 믿는 비율이 숙의 이전에는 31%였으나, 숙의 이후에는 63%로 증가했다. 또한 호주가 원주민의 동의없이 정복되었다는 데 동의하는 이들의 비율은 68%에서 81%로 증가했다(피시킨. 2020. 위의 책, pp273-276).

19) Young, 2000. 위의 책, p53.

20) 이러한 거짓되고 조작된 수사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다 (Young, 2000. 위의 책, p79).

더 민주적일 가능성이 있다.<sup>21</sup>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생활세계의 목소리가 전면  
에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생활세계가 있는 그대로 소통되는 과정은  
그동안 열등한 위치(이등 시민)에 있다고 느껴졌던, 그래서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  
기 어려웠던 시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감 있게 소통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2) 추첨을 통한 참여

토론 참여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이슈에 대해 다른 속의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 자원자만을 토론 참여자로 선발하는 경우는 이해관계자와 관심있  
는 이들의 의견이 과하게 왜곡되어 반영되는 참여왜곡이 일어난다.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소우주 속의’ 모형은 무작위추출로 선발된 일반 시민의 대표집단들이 면대  
면 속의를 하는 방식이다.<sup>22</sup> 이때 표본의 크기는 대표성을 통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동시에 각 참가자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이 이  
상적이다.

추첨을 통해 대표를 선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다. 신고리 공론화  
당시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다. 만약 추첨을 한 번만 하여 여기서 중요한 의사결정  
을 한다면 추첨식 대표선발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합의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속의가 이루어지고 추첨이 일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평범한 이들이 언제라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는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대중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문제를 바꿀 수

---

21) Sanders, L. M. (1997). Against deliberation. *Political theory*, 25(3), pp347-376.

22) 피시킨. 2020. 위의 책. p108, 149.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정치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sup>23</sup> 그리고 이는 전체 구성원들의 정치적 역량 향상으로 이어진다. 추천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 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제비뽑기로 대표자를 뽑는다는 생각에 조롱과 멸시를 보낸다.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과 여성과 흑인이 투표를 한다는 생각에 조롱과 멸시를 보냈었다. 머지않아 선거만으로 대표를 뽑자는 생각에 조롱과 멸시를 보내게 될 것이다.’<sup>24</sup> 추천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 3) 숙의를 보는 관점의 전환\_주체 역량의 향상

현실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큰, 이른바 ‘값비싼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신고리 공론화의 경우 공론화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만 천억원 남짓, 그리고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다시 천억원 정도에 이른다는 추산이 있다.<sup>25</sup> 그러나 이 손익계산에는 고려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회 구성원들이 미래에 지불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미래 세대가 지불해야 하는 핵폐기물 처리 비용, 핵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습에 소요되는 비용,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의료비용, 지역공동체 파괴로 인한 비용 등)은 계산에 빠져 있다. 만약 발전소 건설의 매몰비용만 아니라 건설 후의 경제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고려되었다면 공론화의 의사결정 조차도 조금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 많은 경우 현재 지불하는 경제사회적 비용과 미래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놓고 저울질했을 때, 미래 지불 가능성이 큰 비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된다.

경제적 비용 논란은 우리 사회가 숙의를 보는 결과론적 근시안을 보여준다. 숙

23) 손우정. 2012. “추천, 선거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경제와사회』, pp374-381.

24) 판 레이브라우크. 2016.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25) 정혜윤. 2017. “신고리 공론화 3개월에 직접 비용만 1050억원.” 『머니투데이』 2017.10.20.

의 비용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게 경제적 시각에 치우쳐져 있으면, 숙의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그 진정한 효과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다.<sup>26</sup> 숙의를 통해 내려진 의사결정이 반드시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숙의민주주의는 적어도 소수의 의해 급하게 이루어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전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숙의를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로만 받아들일 경우 숙의민주주의는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sup>27</sup> 숙의의 진정한 효과는 시민 역량의 향상이다. 학습하고 성찰하며 자유로운, ‘정치적’ 시민을 키워내는 일은 숙의민주주의의 지향이면서 동시에 숙의민주주의의 딜레마를 보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숙의 경험을 한 시민은 이전과 다른 태도를 갖게 된다. 이 학습 경험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적 효과로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이 효과는 전체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 의지와 성찰성을 높이고, 정치적 냉소주의를 극복하며, 사회(집단)의 의사결정 구조와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도움을 준다.

숙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운영 주체의 전문적 역량 향상도 필요하다. 현실 숙의민주주의 실험들 중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숙의에 필요한 조건들이 제대로 정의되거나 합의되지 않고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성공을 위해 숙의에 필요한 조건들을 나열한 다음의 표를 참고해보면 여러 연구자들과 사례들이 큰 틀에서 대체로 유사한 조건을 제시함을 알 수 있다.

---

26) 이규홍. 2018. “숙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 분석과 대안 모색.” 『희망이슈』 54.

27) 홍성구. 2019. “숙의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자유주의 급진화와 정치참여 확대.” 『한국언론정보학보』 96. pp140-164.

<표 1> 속의의 기본필요 조건<sup>28</sup>

| 저자/사례                     | 조건                                                                   |
|---------------------------|----------------------------------------------------------------------|
| Fishkin (2009)            | 다수의 횡포 방지, 대중적 참여, 정치적 평등, 충분한 속의 과정                                 |
| 김정인(2017)                 | 참여집단의 대표성, 충분한 속의,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 지지                                    |
| 은재호(2017)                 | 참여의 포괄성과 대표성, 속의의 평등성과 성찰성,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
| 신고리 5·6호기<br>공론화위원회(2017) | 참여의 포괄성과 대표성,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객관성, 참여자의 평등성과 성찰성, 속의성, 공론화 주관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
| 홍성구(2019)                 | 대표성, 속의성, 충분성, 공정성                                                   |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을 크게 분류해보면 ① 포괄적 참여를 통한 정치적 평등, ② 충분한 속의와 성찰, ③ 절차의 투명함과 공정함으로 나눌 수 있다. 속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운영주체들의 육성이 먼저 필요하다.

#### 4. 한살림에 필요한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일까?

그렇다면 한살림이 민주주의라는 도구를 이용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한살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민주주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살림의 민주주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기고 귀하게 여기는, 벌레 한 마리, 나락 한 알도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죽음의 문화, 갈등의 문화를 넘어서 생명의 문화를 추구하는 상생과 협동의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이 글에서 한살림 민주주의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으려 한다. 답을 제시할 역량이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다만 이 글에서 다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28) 이규홍. 2018. “속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 분석과 대안 모색.” 『희망이슈』 (54). p18. 표 일부 참고하여 필자가공.

다양한 관점과 방식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란다. 한살림에서 반드시 숙의민주주의를 기계적으로 채택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대의민주주의가 더 적합할 때도 있고 특히 큰 규모의 조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의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논의와 질문을 통해 한살림의 특성에 보다 적합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찾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1) 질문 하나: 민주적 방식이 생명살림의 가치와 늘 부합하는가?

한살림과 같은 가치 지향적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 가치 실현은 종종 민주적 의사결정과 충돌을 빚기도 한다. 특정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살림에서 오랫동안 조합원 활동을 한 사람의 의견과 이제 막 신입조합원이 된 사람의 의견을 동등하게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만약 다수 조합원의 의견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극단적으로 조합원 다수가 ‘농업살림’을 포기하자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인가? 물론 기본적으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지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은 언제나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혹자는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을 할 때 한살림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가중치를 주거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살림이 처한 딜레마는 한살림운동, 생명살림이라는 내용물을 민주주의라는 그릇에 담을 때 발생한다. 민주적 방식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장할 수 없는데, 이는 생태민주주의가 처한 딜레마와 유사하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생명살림의 가치를 민주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은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짚어본다.

쟁반에 사과가 여러 개 있는데, 보기에 좀 못한 사과부터 자기가 집고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줘야 하잖아요. 좋은 건 제가 집어먹으면서 민

주주의를 하겠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민주주의가 되겠어요? 민주주의는 상대에 대한 존경과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데서 오는 거지.<sup>29</sup>

서구적인 민주주의란 것에 대해서 회의가 좀 있어. 서양애들이 써먹던 민주주의가 전세계에 평화를 가져왔느냐는 말이야. 서양의 민주주의란 게 산업혁명에 기초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뭘 가져왔어? 제국주의 가져오지 않았어? ... 그래서 난 서구적인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어. 누가 해도 좋아, 돌아가면서, 모자라면 도와주란 말이야. 그럴려면 정직해야 돼.<sup>30</sup>

무위당은 갈등과 투쟁의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존중과 협력, 상생의 민주주의를 말한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는 방식은 한살림에서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한살림에서 이루어졌던 토론회들을 돌아보면 어땠을까? 혹여 나와 다른 의견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하는 이들은 없었을까? 아니면 참석자 대다수가 서로 존중하며 성찰하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공론장을 갈등과 투쟁의 장에서 상생과 협력의 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흑백논리와 이분법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져가서는 해결책을 얻기 어렵다.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옳음’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며 ‘옳음’에 대한 개인의 관점은 자신이 일생동안 쌓아온 세계관으로부터 도출되므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흔히들 어떤 이슈에 대한 찬성측 의견과 반대측 의견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토론을 잘 기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논의의 형식을 찬성/반대의 틀로 가져가면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

---

29) 장일순 이야기모음. 1997.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pp74-75.

30) 위의 책. p272.

기 쉽다. 단순히 찬반이 아니라,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늘어놓고 생각의 지도를 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의 지도를 통해 다양하면서도 정교한 입장의 차이를 알게 된다. 동일한 이유로 누군가는 찬성하고 또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 결과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며 서로 다른 주장들 속에서 공통의 방향성을 확인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토론회의 역할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는 긴급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 긴급한 의사결정을 위해 토론회를 하다 보면 제한된 시간내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하므로 충분히 논의하기보다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압박감을 가지게 된다. 토론회는 두 갈래로 나뉘어 내 입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배우며 제3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관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그래서 토론회는 평소에 학습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을 위한 사전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숙의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지점은 바로 열린 마음으로 학습하고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공간의 확장이다.

## 2) 질문 둘: 다양성이 보장되며, 소수자들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초창기 소규모 공동체로 시작했던 한살림은 이제 거대한 조직이 되었다. 조직이 커질수록 구성원의 다양성이 커지고 소외되는 집단과 개인들이 생긴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누군가의 목소리는 과대하게 반영되기도 한다. 때로는 대표자들이 조합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개인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경우도 있다.

한살림은 단일한 조직이 아니고 지역생협들의 연합이며 조합원, 생산자,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다. 한살림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지역생협들에 고루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구성비는 전체 조합원 숫자의 비율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인원이 많은 수도권 지역 조합원들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다. 반면 공개 토론회에서 여론을 형성한다면 수도권 구성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게 되므로 때로는 소규모 지역생협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생협으로의 정체성이 강하여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생산자와 실무자의 입장이 조합원의 의견에 비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위험성도 있다. 특히 생산자들은 독특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특유의 ‘위치 지워진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숙가 능한 농업생산기반 유지는 한살림의 존재의의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농업살림을 지향하는 조직에서 생산자들의 소중한 경험과 관점은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그리고 실무자 그룹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집행하는 하위 단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실무자들이 어떻게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한편 청년 조합원의 비율은 매우 낮는데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유의미하게 반영하여 나이 들어가는 한살림에 활력을 부여하고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 성소수자의 목소리는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가?

한편으로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감정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앞서 숙의민주주의가 이성적 언어만을 매개로 함으로써 의도와 다르게 엘리트들의 헤게모니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토론을 할수록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관계가 거의 없는데도 갈등이 깊어질 때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가 많다. 만약 어떤 사안에 대해 격렬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중요한 일이거나 오랫동안 억압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다. 가치지향 조직인 한살림에서는 특히 가치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격렬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것을 통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왜 그런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는지 집단적으로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지점을 포착하게 할 수 있다. 이 감정 드러내기는 특히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소수자의 입장이 주목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 누구든 타인을 비난하지 않

으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생명운동은 다양한 존재들이 생긴 그대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한 생태계는 다양하며, 생태민주주의는 ‘입이 없는 것들이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sup>31</sup> 생명운동을 추구하는 조직이 지향하는 속의민주주의는 더욱 더 다양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 3) 질문 셋: 효율적이며 적당한 속도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

2020년 한살림은 기후위기로 참깨를 생산하지 못해 한시적으로 수입을 할지 말지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만 했다.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있었다. 나에게 왜 물어보지 않았냐는 농담 섞인 투정부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기후위기는 모든 것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코로나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 확대시켰다. 미래는 점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며, 급박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더 자주 올 것이다. 그때마다 장기적인 대규모 토론회를 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설문조사의 한계도 있다. 위기가 닥쳐온 다음 논의하면 시간에 쫓겨 급하게 결정하게 된다.

유독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한살림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피라미드식 위계구조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하려 하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의사결정에 적절한 책임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려면 신속하면서도 다수

---

31) 윤형근. 2016. “[좌담]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현실과 이슈.” 『모심과살림』 8호, p24.

가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상시적 숙의구조나 공론장이 필요하다. ‘소우주 숙의’와 같은 오프라인 공론장도 좋고, 코로나 시대가 가속화시킨 온라인 공론장을 활용해도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sup>32</sup> 원하면 누구나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시적인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마무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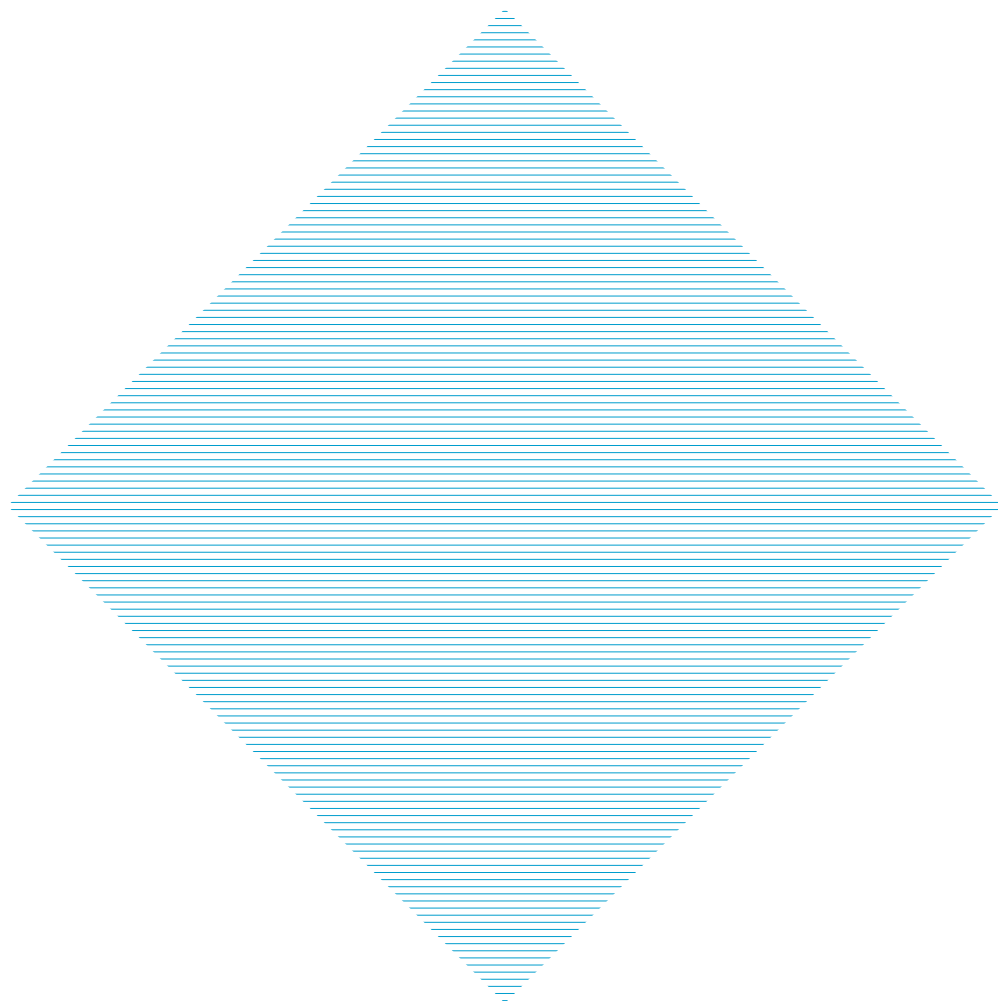
한살림 민주주의를 돌아보도록 제안하는 이 글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을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다. 누군가 이 질문들에 계속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고 논쟁을 촉발하여 한살림에 적합한 민주주의를 찾아가는 여정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실 이 질문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물음은, 생명살림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약간 비약하자면 결국 민주주의 본질을 회복하는 지점은 생명살림, 서로 돕고 협동하는 호혜적 가치의 실현과 상통한다. 그리고 생명살림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데는 대의적 방식보다 구성원들의 성찰과 학습을 전제로 한 숙의적 방식이 더 적합해 보인다.

생명은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한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살림이라는 조직과 한살림 민주주의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등한 참여와 다양성 존중, 소수자에 대한 배려, 갈등을 넘어 학습하는 토론구조의 실현은 개인의 선의와 성찰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으

---

32) 온라인 공론장 개설에 참고하거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빠띠민주주의’는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컨설팅하는 협동조합이다. (홈페이지<https://parti.coop/>) 서울시 의뢰로 개발한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 (<https://democracy.seoul.go.kr/>)은 다양한 주제로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빠띠와 협업하여 ‘녹색오리’(<https://greenduck.kr/home>)라는 녹색전환 공론장을 만드는 등, 온라인 공론장 실험은 점점 확장되고 있다.

로 보장되어야 장기적으로 가능하다. 우리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 슈

산안마을 조류  
‘살처분’을 통해  
던지는 생명에  
대한 물음



- ① [인터뷰] 산안 마을에 가다
- ② 지옥의 기원
- ③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생태 감수성

- 인터뷰 -

# 산안 마을에 가다



2020년 12월 23일, 우리에게 친환경 농법으로 알려진 ‘야마기시즈’의 방법으로 닭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산안 마을에 살처분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인근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산안 마을 주민들과 친환경 농업 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두 달 동안 살처분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해왔으나 2021년 2월 19일,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아들였고, 이후 지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연구소에서는 산안 마을의 지향과 생명운동과의 관계, 그리고 살처분 행정명령 당시 현장에서의 고민 지점에 대해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산안 마을로 향했다. 산안 마을 주민인 윤성열, 유재호 생산자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산안 마을의 이야기와 고민이 전해지기를 바란다면,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셨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두 분께 이번 모심과살림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진행 및 기록: 김진아(모심과살림연구소)



왼쪽부터 유재호 님, 윤성열 님



산안 마을 전경

## 산안 마을, 야마기시즘 실현지

### 산안 공동체 마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유재호:** 저희 마을을 산안 공동체 마을이라고 많이 부르시지만, 정식 명칭은 야마기시즘 실현지입니다. 야마기시즘을 실현하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일본에서 온 말이라 입에 잘 붙지 않아 산안 마을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라는 표현도 사실 저희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동체와는 조금 다르게 ‘일체’ 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공동체라 불리는 것은 표면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어 그런듯 하지만 일체와는 전혀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체 생활과 공동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윤성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자기 가족, 재산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공공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일체는 나는 너이고 너도 나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끼어들지

않고, 서로 배제되지 않은 채 완전히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은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집집이 떨어져서 살면 안 됩니까?’하는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모여서 살아보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는 일체가 불가능하죠. 일체 생활의 기본은 그런 겁니다.

**유재호:** 일체는 ‘한 몸’이라는 뜻이죠. 공동체는 개개인의 모임이고, 일체는 ‘한 몸으로써 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윤성열:** 한살림도 내 생각이나 나의 것을 가지고 계속 고집하고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것을 견제하고, ‘한 몸’이라는 일체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죠. 우리도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런 방향을 가지고 노력해 가고 있어요.

### 야마기시즘<sup>1</sup>은 어떤 의미인가요?

**유재호:** 야마기시즘에 대해서는 살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어요. ‘어느 누구도 불행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실현해 가는 곳일 수도 있고요. 물론 사람이 아닌 존재까지도요. 또 저희 마을을 묘사할 때 ‘돈이 필요 없는 사이 좋고 즐거운 마을’이라고 하기도 해요.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지구 안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야마기시즘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모

---

1) 인터뷰를 진행한 장소에는 행복회 야마기시회 취지가 걸려있다. ‘자연과 인위, 즉 천지인의 조화를 꾀하여, 풍부한 물자와, 건강과, 친애의 정에 그득 찬, 안정되고, 쾌적한 사회를, 인류에 가져오는 것을 취지로 한다.’ (행복회 야마기시회 취지 전문)

여서 하려는 움직임이죠. 경기도 화성에도 있지만,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 20개소 정도에서 이런 실현지를 일구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살처분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많이 부딪혀요. 우리 생각뿐 아니라 누구라도 존중받으며 야마기시즘을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면서도 어느 하나 불행한 사람이 없도록 해보려고 해요.

**윤성열:** 큰 지향인데요. ‘진실한 사회와 삶’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에요. 지금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유관념’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과 사람은 원래 하나로 이어지고 모든 자연과 사람, 생명, 무생물이 전부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그 엉뚱한 ‘소유관념’이라는 거죠. 소유관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이니까, 돈이 필요 없는 마을을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돈 하면서 소유의식을 늘리려 하고 서로가 자기 것만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꾸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요. 사실상 별 문제도 없는데 자꾸 문제를 의식하고 즐겁지 않은, 불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여기 실현지에서는 그런 것들 없이 누구와도 사이 좋고 즐거운 마을을 만들어가자 노력하고 있어요.

##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것

**소유관념을 벗어나 자연과 사람, 생명, 무생물이 이어져 살아간다는 것이 인상깊어요. 그렇다면 이 곳에서 닭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양계 농장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재호:** 실현지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를 일구어 보자는 노력이에요. 우리 사회는 산업이라는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써만 인식하죠. 그런데 그 산업은 (우리가 만들기

에 따라)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하는 장이 될 수도 있고 연결되는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단순히 경제적인 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이좋고 즐겁게 살기 위해 닭을 키워볼까? 이를 통해 일터를 구성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이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나와 닭, 생명을 보면서 어떻게 닭이랑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도 하죠. 저희는 양계 ‘업자’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저희는 동물복지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아요. 동물복지 인증이 생겼고 여러 이유로 동물복지 인증도 취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닭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해요. 결국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거지만 닭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하죠. 여기에 나의 생각, 함께 하는 사람들의 생각, 정부 인증에 대한 생각, 생협에서의 유통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생각들도 서로 존중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양계를 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다른 양계의 관점을 잘 몰라서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질문은 정말 어렵네요(웃음).

**윤성열:** 일반적으로 닭을 기르는 사람들 중에는 닭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랑에 이해관계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닭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닭에서 난 유정란<sup>2</sup>을 먹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사회도 행복해지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각하면서 양계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다를 것 같아요. 닭을 기르는 사람, 그리고 유정란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얼마나 서로를 위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물건으로 생각하고 이를 팔기 위해 좋은 문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

---

2) 처음부터 종란양계방식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으므로 생산한 계란이 수정된 달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나, 모두와 함께 번영한다’는 정신이 들어 있다는 생각에서 유정란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정란(有精卵)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윤성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사람(한 몸)으로 생각하고 또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무생물, 환경에 대해서도 얼마나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내가 성립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마음이 유정란에 담기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죠. 우리도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그런 것을 실현하는 것이 하면 할수록 즐겁고 재미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살림운동의 지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살림운동, 생명운동과 역사적으로 함께 해온 맥락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재호:** 생명운동, 생태운동의 여러 모임에 초청받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야마기시즈미 생명운동, 생태운동에서 조금 더 선두에 서기를 요구받아 온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생각해요(웃음). 또 최근 1~2년 사이에 살처분 저항을 겪고 생명과 생태적 관점에서의 글을 접하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언어로 풀어내고 있구나’하는 것을 보면서 운동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생명운동, 생태운동, 그리고 야마기시즈미 운동이 누구 하나 불행한 존재가 없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운동 안에 사랑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윤성열:** 지금 이곳의 실현지는 세 번째입니다. 앞선 두 군데에서의 시도는 실패했어요. 공동체 협업 농장도 10곳 정도 만들었다가 모두 해산이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배운 것이 많아요. 왜 해산이 되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듯 소유가 중심이 되고 다른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결국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은 1984년도에 시작했는데, 1986년에 무소유 축제를 했어요. 우리가 1년 벌은 것을 그날 모두

나누어 썼죠. 당시 박재일 회장이 사람들을 모시고 이곳에 왔어요. 그 양반을 거기서 처음 본거지(웃음). 그분이 ‘우리도 좀 배워가야겠다’ 그러더라고. 그 때부터 한살림과의 연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집을 짓고 닭을 기르면서 풀어놓고 있었는데, 한살림은 막 쌀 가마니를 짊어지고 운동을 시작할 때였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배다 하는 생각은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을 결집하는 일에는 한살림이 대단하더라고요(웃음).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하나로 연결하는 일부터 시작했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결국 한살림이라는 이름이 됐죠. 지금도 한살림은 다른 생협과 다르게 생산자와 소비자를 잘 이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우리 사회에 소비자들이 위주가 되어 생산자와 부딪히는 관계들이 있지만, 한살림은 그렇지 않거든. 그 관계에 상당히 열심히 집중해 온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생명살림운동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살리고 살려지는 삶인 거지. 죽인다는 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을 살리고, 그쪽은 나를 살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살려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지. 운동이라기보다 그게 당연한, 원래의, 진실한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생명운동은 어떻게 보면 생물과 무생물을 갈라놓을 위험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살림은 그러지 않더라고. 우리는 생물과 무생물을 대립시키면 생명이 없어진다고, 살려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생물과 무생물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일체(한 몸)라는 뜻을 실현하는 것이죠. 전 우주는 한 몸이라는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이 생명운동, 생태운동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분류를 해서 어느 한 분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저기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모두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친환경이 아닌 사람들과 대립하면 안 돼요. 대립 의식이 있으면 친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나와 다른 것과 대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놀랐어요.

## 살처분 행정 명령, 그리고 그 이후

### 살처분 행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어떤 고민이 있으셨나요?

**유재호:** 오리나 철새들이 항상 있는 강 옆, 저희 마을 인근 농가에서 확진이 되어 살처분 명령을 받았어요. 발생지로부터 3km 이내에 들어가면 살처분이 된다는 사실도 그 때 처음 알았어요. 이 법은 2018년 12월에 고시가 바뀌었는데, 그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2019년에는 농장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화제가 되지 않아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2020년 12월 23일에 살처분 명령을 받고 입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일단 반대한다, 행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고, 그 이후 두 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나고, 찾아갈 사람들은 다 찾아갔죠. 두 달이 지나고 2월 19일에는 살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할 것인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닭을 키우는 사람이기도 하고 야마기시즘 실현지 주민으로서 멸종위기에 살아가는 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실현지 안에서도 많은 연찬<sup>3)</sup>이 있었고요. 같이 해주시는 여러 시민 단체들, 행정기관, 화성시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물론 농림부와는 소통이 잘 안 되었지만요. 사실 내부적으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생각이 다 달랐겠지만, 기본적으로 감염되지 않은 살아있는 생물을 살처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또 정책 자체의 불합리함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명령서를 받고나서, 24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3) “어떻게 소유를 넘어서서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공동체에 이를 수 있을까. 여기에 ‘연찬(研鑽)’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제시한다. 어떤 문제를 원점에서 궁구해 나가며 사물의 참된 원리를 찾고, 이에 근거해서 해결해 가는 과정 전체를 연찬이라 이른다. 그런데 이마저도 굉장히 느슨하고 열린 개념이어서 여기에 어떠한 전체건 형식이건 정해짐이란 없다. 일하고 즐거이 노는 것, 홀로 진리를 구하고자 깊이 사고에 몰두하는 것, 그밖에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연찬의 연속인 것이다.” (홍문국. 2001. “누구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자유로운 공동체.” 『생태적 귀농총서』 6, p.15)

보상금이 깎여요. 그리고 48시간, 72시간 지나면 단계적으로 더 깎이는데, 그걸 보고 농가들이 꺾소리 못하고 그냥 다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했어요. 농가 사정들이 다 당장 사료값 내고 빛 갚기 급급하니까 저희라도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마다의 방법대로 닭을 존중하면서 키우는 그런 소규모 농가들 입장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 이 상황은 매년 다가올 위기잖아요. 담당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자.’ 그런데 어떻게 해도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길 밖에 없었죠.

####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유재호:** 쉽지 않았죠. 행정의 압박, 강제 대집행의 위협 등 실제로 그런 액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개 농가가 정부를 상대로 저항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어요. 신경 쓸 것도 많고, 조율할 것도 많고, 농사짓고 살던 사람들이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과정이 어렵긴 했죠. 그런 과정이 어렵긴 했지만 한살림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외롭거나 절절하지는 않았어요. 마음 따뜻한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함께 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들이 모여서 2개월을 견뎠지만, 이후 정부가 강경하게 유지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쉽게 바뀌지 않겠다는 게 명확히 보이면서 경영적 압박도 생기더라고요. 실현지 고용인 분들의 생계도 걸려 있는 상황이었고요.

#### **살처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유재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제대로 들릴 때가 그만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행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처절해지는 상황에서 하는 판단은 우리가 실현지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상대방 의견도 존중하고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아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고, 시청 직원들이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안 들리니까, 그 때가 그만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공무원들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욕도 하고요. 그런데 스스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즐겁지도 않고 스스로 위화감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행정명령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실현지만의 결정은 아니었고, 주위에 함께 해준 지역 시민사회 단체 분들도 생각을 함께 했어요. 닭에게는 안타깝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점으로 삼자고 해서 결국 2월 23일 살처분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끝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토론회를 함께 하고 있고, 법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 살처분 집행 이후의 실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유재호:** 아픔의 정도가 얼마나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아픈 기억이죠. 그래도 이 일을 통해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하나? 그런 어떤 것들이 건드려진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저희도 이번 일에서 배운 것들이 많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상처가 되기 전에 같이 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살처분하기 전에 사실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해 나가는 사람들의 힘으로 같이 보듬으면서 지금 새로 들어온 병아리들을 잘 키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윤성열:** 2014년에 800m 인근에서 발생했을 때에도 실현지의 닭은 살처분을 하지 않았어요. 2018년에 발생했을 때도 1주일에 2회씩 매번 확인했는데 병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때까지도 여간해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살처분 명령을 받았을 때는 ‘문제제기를 하자’, ‘세 번이나 거쳐갔는데 괜찮았다는 것을 보여주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이것이 반복될테니까요. 그러니 일단은 겉으로는 대립으로 보일지 몰라도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가만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칠어지는 마음이 생기겠다 싶은거죠. 그러면 이건 아니다. 거친 마음에서 이것 저것 시행해봤자 거친 결과만 나오고, 그러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문만을 생각하는 싸움판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생겼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행정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있었지만, 우리들 마음은 이정도로 하자, 그러나 이정도 하고 끝이 아니라 다르게 이어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병아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고 그래야지 살처분한 기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 바이러스 사회, 공권력을 대하는 방법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정부나 대중들이 이번 AI 전염병에 대해서도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코로나 시국에 공권력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고민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재호:** 행정은 코로나를 핑계로 ‘과도한 방역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하는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대중들은 관심이 많이 없지 않을까요? 대중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괜히 이것 때문에 방역 이슈가 불거져 욕을 먹는 것을 의식할 수는 있겠죠. 보통의 대중들은 계란 값이 상승해서 언제 떨어질까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이슈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 한층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죠. 보는 눈도, 목소리도 많아져야 행정도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겠죠.

#### **공권력과 대립하는 것에 대한 마을 분들의 입장은 어떠셨나요?**

**윤성열:** 한쪽에서 강요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을 고치려고 무리를 가하면, 그 사람들과 등지게 됩니다. 강하게 주장을 해야겠지만, 끝까지 이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의식으로는 사이좋고 즐겁게 사는 세상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누구 하나 죽고 사는 일이 벌어지기보다는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그 과정을 즐겁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전 운동 방식과는 다르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죠.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운동 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도 되고, 조금 더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요(웃음).

**유재호:** 이런 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시긴 했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20년 넘게 저희 실현지와 화성 지역에서 해왔던 활동들을 느끼면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진 않아도 납득하고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운동과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수궁해 주셨어요. 다른 생각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논의 과정이 풍성해졌어요. 선명하게 더욱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요.

무위당 선생님께서도 대립하고 투쟁하는 싸움의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식으로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극한의 상황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회의 많은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재호:** 한동안 행정심판도 생각했어요.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사회는 우선 누구 하나라도 불행하지 않는 사회, 대립하지 않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소송은 승소와 패소의 개념이 있어요. 이기고 지는 자가 있는 방식은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금 사회는 손해를 끼치면 벌과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유쾌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어요.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도전인 것 같아요.

**윤성열:** 냉정한 의미로는 대립하지 않고 판결을 받기 위해 재판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옳고 좋은 일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 결국 자신만 파괴되거든요. 우리 사회는 잘 살겠다고 싸우는데, 결국 그거는 자신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길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만들고 안 만들고, 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 남겨진 과제, 서로 이어지기

이번 살처분 행정 명령을 거부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어요. 함께 연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재호:** 환경 단체, 먹거리 운동 단체, 동물권 단체 등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연대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 주신 이유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사회 속에서 건드려진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살처분이라는 것이 환경, 생명, 먹거리 모두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명령, 단순한 고시 하나지만 이걸로 파급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결국 우리 사회 농정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죠. 도시와 농촌이 멀어졌고, 부동산 이슈에는 살얼음판 건듯 하지만 농촌 문제는 공청회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행정하는 사람들만 알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다 보면 중요성이 보이고, 그 중요한 것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무게를, 가치를 부여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재호:** 사실 방역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차단하고 막고, 그런 논리로 많이 진행되곤 해요. 표백하고 소독해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계사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단계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방문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지고요. 점점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처분 받기 전 2~3년 동안은 AI가 와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방역시설도 개선했어요. 적극적으로 방문자를 받아서 닭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려고요. 막고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생명을 접하고 땅을 접해서, 사람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장으로 우리 실현지가 쓰여졌으면 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양계를 하는 사람들이 병이 안 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들이 병이 안나야 우리도 살죠. 이렇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도 다른 단체

나 여러 양계들과 이야기하면서 방법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친환경이 아니라고 무조건 대립하는 방식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친환경이나 이상적인 것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잘났다고 할 일도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고개를 더 숙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주어 잘 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윤성열:** 우리도 한살림과 한살림하고 있어요(웃음). 지역을 더 넓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공급량이 목적은 아니고, 이제 한살림과 더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양계 문제가 아니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늘려서 서로 깊이 연결되었으면 해요.

### 인터뷰를 마치며

산안 마을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서 건드려진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닭의 생명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일 수도 있고, 자연 환경을 위한 걱정일 수도 있겠다. 자연을 해치고, 비인간 동물을 해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인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의 사회는 자연을 해치고, 다른 생명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왔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인간은 또 다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 외의 것들은 배제하고 죽이고 있다.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 배제하고 약자를 억압하며 싸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체감하고 있다.

산안 마을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 자연, 생물, 무생물 모두를 존중하는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살처분 행정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일체의 삶과 생명을 중시하는 내재된 힘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산안 마을이 살처분 행정 명령을 거부하며 거리로 나온 두 달 동안 많은 이들이 각자의 고민과 이유로 연결되었다. 나와 다른 존재가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대립되는 구조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다. ‘죽임의 문명에서 살림의 문명으로’의 전환이 구호로만 머무르지 않도록 실천해 나가야 할 때이다.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지로 바꾸어 낼 수 있고, 바꾸어야 한다. 삶으로 연결되어서 말이다.

# 지옥의 기원

채효정(정치학자)



정치학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해고강사, 『오늘의 교육』 편집  
위원장. 강원도 인제에서 농사짓고 공부하며 살고 있다. 함께 사유하  
고 노동하고 운동하며, 서로를 소외시키고 착취하지 않는 생명과 평  
화의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measophia@naver.com

2021년 2월 19일 경기도 화성 산안 농장에서 닭 3만 7천 마리에 대한 살처분 집행이 시작됐다. 가스로 질식사시킨 닭을 포대에 담아 구덩이로 옮겼다. 어쩌면 닭들은 중간에 깨어났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흙에 파묻힌 다음에 깨어났을지도 모른다. 농장 사람들은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키우던 닭들이었다. 차마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살처분’이라고 불리는 이 작업은 우리가 어떤 생지옥에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현장이다. 이곳의 닭들에게 살처분 명령이 내려진 것은 2020년 12

월 23일, 인근의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곳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 산안 농장이 있었다. 진원지로부터 반경 3km 이내의 모든 가금류를 강제 살처분하는 규정은 2018년 12월에 신설됐다. 산안 농장은 살처분을 거부했다. 이 농장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일본의 야마기시 공동체의 사상에 기반한 소규모 공동체 달걀 생산농가로, 기업형 공장식 축산을 거부하고 평사형·개방형 양계장을 운영해왔다. ‘달걀과 고기로 우리와 이어지고 있는 생명을 이렇게 죽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닭도 공동체 구성원이라 여기고 있었다. 실제로 산안 농장은 1984년부터 37년간 단 한 번도 조류독감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 2000년대 이후 조류독감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살처분 명령이 내려진 당시도 그랬다. 농장의 닭들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은 닭들이 감염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감염될지도 모를 가능성 때문에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었다. 농장 측은 건강한 닭 3만 7천 마리를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명령 집행 중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산란 중인 산란계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고 잠복기(3주)도 끝난 상황이므로, 지금 시점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적으로 살처분을 집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 청구는 기각했다. 살처분 집행일 당일 상황은 확산세가 꺾여 방역당국에서도 ‘3km 이내’ 기준을 ‘1km 이내’로 일시 완화한 상태였다. 하지만 완화조치는 산안 농장에 약 두 달 전에 내려진 살처분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살처분 정지 신청을 수용하는 것은 향후 ‘당국의 AI 방역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결국 ‘공권력’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3만 7천 마리의 닭들이 ‘살처분’된 것이다.

## 왜 닭이 죽어야 하는가?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으로 점철된 비극과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을 폭로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희생을 요구하는 집행자가 되는 일 말이다. 이런 모순은 점점 빈번하게 일어난다.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덜 배출한 이들이 먼저 희생자가 되는 것도 같은 이치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집단인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이 위기는 자본에겐 기회인데 노동자에겐 충격이고, 자본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데 노동자에겐 있던 일자리들이 사라진다. 지금도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 탄소를 가장 덜 배출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한다. 동물 살처분도 마찬가지다. 가해자를 구원하기 위해 그동안 희생당해온 약자들에게 다시 희생이 강요된다. 그것도 ‘몰살’이라는 끔찍한 방식으로. 상황과 대상은 달라도 똑같은 문법이 적용되고 있다. 누가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항상 정해져 있다. 정치적 약자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동물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결국 ‘동물화 된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왜 닭들이 죽어야 하는가?”란 질문은 “왜 노동자들이 해고당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연결되며, “왜 여성노동자들이 먼저 잘려야 하는가?”로 이어진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인간’ 및 주변인에 대한 격리 조치는 조류독감에 걸린 닭들에 대한 매몰조치와 원리상 다르지 않다. 집단격리(코호트)와 집단 매몰의 차이는 건물을 폐쇄하는 것과 직접 폐사시키는 것의 차이이다. 인간은 죽일 수 없어 죽도록 내버려두지만, 닭이나 돼지를 집단 도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물론 동물들은 입법에 합의하지도 참여하지도 않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단행하는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전체를 살리기 위해 부

분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전체주의의 논리는 인종주의와 군국주의로 표현되던 구(舊)파시즘에서 능력주의와 기술혁신론으로 무장한 신자유주의 파시즘으로 바뀌었을 뿐 동일한 형식으로 작동한다. 신자유주의는 수많은 쓸모없는 ‘부분’들을 희생시킴으로서 야만적 자본주의라는 ‘전체’ 시스템을 수호한다. 먼저 분쇄당하는 이들은 지배관계의 약한 고리에 놓여있는 집단과 저항하는 집단이다. 쓸모없는 것과 위험한 것부터 처분되는 것이다. 부당한 행정명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시야는 협소해진다. 산안 농장 사건의 핵심은 ‘반경 3km’의 일괄 적용이라는 부당성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발생농가 반경 3km 일괄 적용 기준은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형식적 공정성을 추구한 결과다. 이런 규제의 형식적 ‘공정성’도 물론 문제고, 영혼 없는 행정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경 3km를 반경 1km, 아니면 500m로 줄이면 개선되는 문제일까? 닭의 입장에서선 병으로 죽든, 예방적으로 죽든, ‘신선하게’ 가공되어 치킨이 되든 똑같은 몰살이다. 감염병 예방이나 방역방식을 개선하는 데만 초점을 두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다.

## 대량학살의 기원

우리가 추적해야 할 것은 이 생지옥의 기원이다. 그래야 어떻게 멈출 수 있을 지도 알 수 있을테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가려졌지만 같은 시기 동물을 덮친 감염병도 그 규모와 양상이 심각했다. 돼지에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닭과 오리엔겐 조류독감이 팬데믹이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조류독감 피해규모는 역대 가장 심각했던 2016년을 넘어설 뻔하다가 가까스로 멈췄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

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4개월간 2천 8백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하루 평균 20만 3천 4백마리씩 죽인 꼴이다. 2016년에서 2017년 조류독감 유행 당시 1일 평균 살처분 수는 22만 3천 9백마리였다.<sup>1</sup>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피해 보상액이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자 AI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5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3km 이내 모든 가금류’에서 ‘1km이내 같은 축종 가금류’로 조정했다. 이번 조류독감 유행으로 지난 5월까지 살처분 된 가금류 수는 약 3천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란계 살처분이 1천만 마리를 넘어서자 달걀 한 판 값이 25% 상승했고, 정부는 미국산 신선란 60톤을 수입하는 것으로 대처했다.<sup>2</sup> 늘 살처분 된 숫자 이상으로 더 강조되는 것은 ‘피해 액수’다. 우리는 돈 수천억 원에 대해선 민감하지만 수천만 목숨에 대한 감각은 없다. 화폐의 숫자는 구체적인 가치로 표상되지만 생명의 숫자는 늘 거대한 덩어리로 떠오를 뿐이다. 이번 살처분 집행은 약 3천만 마리를 죽이고 나서야 멈췄다. 달걀 값이 오르면 수입하면 되고, 닭과 오리가 죽어나간 계사는 ‘빠른 시일 내’ 병아리로 채워질 것이다. 정부는 그걸 ‘정상화’라고 부른다. 원활한 수요 공급 조정이 ‘정상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청년들은 이곳을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동물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자신들이 대량학살 당하는 이런 곳을 동물들은 무어라 부를까. ‘살처분’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옥의 풍경도가 눈앞에 펼쳐진다. 지옥보다 더한 지옥, 나는 이 지옥의 기원이 알고 싶어졌다.

‘살처분’이란 말은 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 ‘폐기, 도태, 처분’같은 용어는 끔찍한 죽음으로부터 감정을 삭제하고 우리의 양심을 도피시킨다. 자료를 찾아보니 조류독감이 최초 유행한 때는 2003년이다. 내가 처음 ‘조류독감’이란 말을 들은 것도 2003년이다. 어떤 하루를 기억한다. 이제 막 말을 배워 세상 모든 말이 다

1) 전주영·남건우. 2021. “코로나에 가려진 조류독감…피해규모 역대 2위.” 『동아일보』 2021.2.16.

2) 정윤희. 2021. “산란계 살처분 1천만 마리 넘어서…달걀 한 판 가격 전년대비 25%↑” 『SBS Biz』 2021. 1.24.

궁금하던 아이가 뉴스를 보다가 물었다. ‘조류 독감’이 뭐냐고, 새들이 감기에 걸려 아픈 거라고 말해줬다. 그 다음엔 ‘살처분’이 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이후로 ‘새들의 독감 대유행’은 2,3년을 주기로 계속 반복됐다. 2003년 뉴스에는 ‘100만 마리가 넘었다’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던 기사가 검색된다. 100만에 경악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3,000만 마리를 살처분 해도 고깃값, 달걀값, 주식값을 먼저 걱정한다. 우리는 대량학살에도 익숙해진다.

처음에 조류독감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철새의 이동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철새가 아니라 대규모 공장식 축산이 더 큰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롭 윌러스는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에서 팬데믹의 원인이 신자유주의 체제와 세계화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sup>3)</sup> 닭들이 밀집되어 대량사육 되는 환경에서 병이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 자연적인 면역력도 저항력도 키울 수 없는 단일 종 집단이 순식간에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윌러스에 따르면, 조류독감과 돼지열병이 처음 나타난 곳은 모두 산업화된 도시 주변의 축산공장이다. 1959년 이후 출현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9종 중 2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업화된 농장에서 발생했다. 신종플루의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곳은 세계 최대의 ‘돼지 생산’ 업체인 미국 스미스필드의 자회사였다. 분뇨와 오물을 맘대로 배출하며 대형 환경 오염사고를 일으켰던 스미스필드는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자 규제를 피해 생산기지를 동유럽으로 옮긴 악명 높은 다국적 축산기업이다. 스미스필드는 축산 공장 이전과 동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를 매수했고, 정부와 함께 ‘투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합리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을 속였다. 부자 나라들이 금융 자본과 함께 가난한 나라를 대출로 압박하며 국가를 신자유주의적 경영을 통해 기업화하는 이 전형적인 방식은 지난 20여 년간 ‘굿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신식민주의 기획의 핵

3) 롭 윌러스, 2020.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거대 농축산업과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지정학』, 너머북스

심이었으며, 특히 농업부문의 세계시장 종속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적 대감염의 진짜 원인은 철새의 이동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한 자본의 이동과 노동 및 물류의 세계적 이동이었던 것이다.

인간이 가축을 길러온 오랜 역사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기원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인간과 동물을 적대적 관계에 놓는 것은 마치 ‘인류세’가 ‘자본세’를 은폐하는 것처럼 자본의 탐욕이 저질러온 죄악을 인간 본성에 내재한 잔인성으로 돌려 구원해준다. 인간이 가축을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길러온 것은 아니다. 7-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닭이나 돼지를 기르는 방식을 생각해보라. 앞서 산안 농장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던 ‘달걀과 고기로 우리와 이어진 생명’이라는 인식이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과 정서를 대변한다. 달걀과 고기란 단순히 식량이나 영양소로서의 단백질 공급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이어져 있다’는 말에서 나타나는 연결의 표상이다. 결국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동물을 대하는 잔혹한 태도는 대체 어떤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어릴 때 업보를 믿는 세계에서 자랐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해코지를 하면 반드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은 우리 모두를 만인에 대해 만인이 야수가 되지 않도록 지켜준 금도가 되었다. 자연법과 도덕법이 공유하는 이런 금도는 사회계약에 앞서는 일종의 ‘동물계약론’적 약속이었다. 요즘은 12지신의 동물들도 해가 바뀔 때나 반짝 화제가 될 뿐 ‘신성(神性)’을 잃은 지 오래지만, 예전에는 동물신에 깃들어 있는 신성은 인간이 못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도가 되었다. 12지신은 동물의 수호신이면서 인간의 수호신이기도 했다. 이 관계는 상호적이기도 해서 이를테면 닭의 해에 태어난 사람은 닭이 보살펴주지만 사람 세계에서는 그가 닭을 살피고 지켜야할 책무를 가졌다고 믿어졌다. 토템 속에서 인간은 섬기는 동물과 돌보는 동물, 자신을 대변해줄 동물과 자신이 대변해야 할 동물을 동

시에 가지고 있다. 동물-신은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성질이 변한다.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민도가 좋은 곳에서는 동물들도 선량하지만, 사람들이 흉측해진 곳에선 같이 사는 짐승들도, 마을에 깃들어 살고 있는 혼들도 괴물로 변한다고 말하곤 했다. 철학자들이 심오하게 해석하는 고대 그리스의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도 그런 뜻이다. ‘행복’이나 ‘안녕’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말은 행복의 의미가 ‘웰니스’나 ‘웰빙’ 신드롬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걱정 없이 잘사는 ‘사적 행복’으로 굳어져버린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 원래의 뜻에 다가가기 힘들다. ‘다이몬(daimon, 혼령, 귀신)’이 ‘좋은(eu)’ 상태라니,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앞에 보충설명을 붙여 ‘공동체의 안녕’이라고 번역하지만 그조차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같은 공리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에선 ‘다수의 행복’이나 ‘공동 번영’으로 연상되기 십상이다. 에우다이모니아는 ‘좋은 다이몬과 함께 하는 것’이다. 다이몬은 올림포스 산에 사는 불멸의 신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터에 함께 사는 각종 귀신, 정령들을 뜻한다. 사람이나 동물이 고통과 비참 속에 살다 원한을 품고 죽으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리 없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새장에 갇힌 한 마리 로빈 새는/ 온 하늘을 분노로 떨게 한다/ 주인집 대문 앞에 굶주려 쓰러진 한 마리 개는/ 제국의 멸망을 예고한다”고 노래했는데, 여기 담긴 경고의 의미도 그와 연결된다. 우리는 고통과 불행으로도 연결된 존재이며 타자의 고통 속에서 누구도 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에우다이모니아는 지금 산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영까지 돌보라는 공동체적 세계의 요청이고, 이어져왔고 이어져갈 시간의 공동체에 대한 환기다.

고양이는 왜 키우냐 쥐 잡으라고, 개는 왜 키우냐 도둑 잡으라고, 돼지는 왜 키우냐 잔칫날 쓰려고, 소는 왜 키우냐 공부시켜 시집 장가보내려고, 닭은 왜 키우냐 애들 먹이려고, 나의 할머니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런 세계에서 가족은 가족의 일원이었다. 물론 우리는 가족을 잡아먹기도 했으니 문명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야만

인들이다. 하지만 나는 닭을 잡은 할머니가 정한수를 떠놓고 공손하게 두 손을 모아 기도하던 모습을 기억한다. 네 생명을 가져다 우리를 먹였다. 어쩔 수 없이 죽었지만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비는 천도(天道)의 기도였다. 살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위령과 천도의 예가 따랐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의 현대화된 축산업에서 일어나는 동물에 대한 학대 고문 감금과 ‘예방적 살처분’ 같은 용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3,000마리를 죽이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3,000만 마리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떠도는 원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돈이 생명을 죽인다

인간과 동물, 사회와 자연의 상호의존성과 공존·공생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건 서구 산업문명이 출현하면서부터다. 그러나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전원일기’나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마을공동체나 ‘이웃 사촌’ 관계는 한국 사회에서도 1980년대까지는 존속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가혹했던 독재 시기에도 체제의 하위에서 작동하고 있던 농민과 서민층의 상호부조적 생활세계가 완전히 박살 나고 전 사회가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자도생 모습으로 급속히 변모한 것은 분명 1990년대 이후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IMF 사태로 신자유주의 체제가 폭력적으로 수립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공장식 축산이 도입되어 보편 모델이 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공장식 축산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다. 저항이 있었고, 진압이 있었다. 조류독감 대유행이 처음 발생했던 2003년은 농민운동가인 이경해 열사가 멕시코 칸쿤에서 WTO에 항의하며 반대시위 중 할복자살 했던 해이기도 하다. 나는 그의 이름을 받다나 시바나, 마리아 미즈,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따 같은, 반자본주의·반신자유주의 관

점에서 농업문제와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들의 책에서 계속 발견했다.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고 대통령이 말했던 그 때는, 실은 그렇게 쉽게 시장권력에 투항하지 말았어야 할 그만큼 중요한 세계사적 분기점이었고, 그 속에 한국 농민의 저항이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누가 우리 농민을 죽이는가? Who kills farmers?”였다. 결국 농산물 시장은 개방됐고, 외국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농업에도 선진화와 현대화가 요구됐고, 대규모의 기계화, 시설화, 환금작물의 대단지 단작 재배가 농민의 경쟁력이 되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 이후 축산업은 가내농업에서 공장식 산업으로 급속도로 성격이 변해갔다. 위노나 하우터가 쓴 『푸도폴리』<sup>4</sup>를 보면, 미국에서도 1992년까지 사육 두수 2천마리 이상의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는 1/3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4년이 되자 5마리 중 4마리가 이런 초대형 농장에서 사육되었고, 2007년에는 이 비율이 95%에 달했다. 1997에서 2007년 사이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숫자는 매일 4천 6백마리씩 늘어나 총 6천 2백만 마리 이상이 되었다. 돼지의 수는 늘어났지만 농장의 수는 줄어들었다. 1985년 미주리주에는 소규모 가족 돼지 농장이 2만 3천개 있었지만 2007년에는 87%가 감소하여 3천개의 대형 농장만이 남았다. 사육 두수 2천마리 이상의 대형 농장이 돼지의 95%를 사육하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1985년부터 지금까지 71% 증가했지만,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49% 감소했다. 여기에는 대형육가공 회사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수직통합화와 독점화가 있다. 하우터에 따르면, 1993년에는 거의 모든 돼지(87%)를 농민이 정육가공업체와 협상해서 판매했지만 2006년이 되면 거의 모든 돼지(90%)를 정육업체가 통제했다. 거대 축산기업은 돼지를 직접 소유하거나(20%), 계약생산(70%)으로 돼지 생산을 통제했다. 단기간에 성장한 대기업의 독점화 과정은 곧 단기간에 소규모 독

4) 위노나 하우터, 2020, 『푸도폴리』, 뽕간소금.

립생산자들의 사라지는 과정과 일치한다.

소수의 농기업이 농업 생산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할 수 있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비결은 무엇일까? 자본과 기술이 너무 거대해져 고삐가 풀려버렸기 때문이다. 첫 번째 비결은 인수합병이다. 기업을 상품처럼 사고 팔면서 이윤을 남기는 M&A 시장은 금융자본주의와 금융세계화를 통해 급성장했다. 축산기업은 몸집 불리기와 시장 독점을 통해 소규모 독립적 생산농가와 가공업체들을 먹어치우면서 시장을 잠식해갔다.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수립된 수직계열화다. 수직계열화는 관련 업종 기업들을 합병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farm to table,’ 즉 유전자 통제, 생산, 사육, 도축, 가공, 유통, 소매 단계까지 생산 라인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세 번째는 수직계열화에 생산농가를 종속시키는 착취적 위탁계약이다. 오늘날 독점화한 축산가공기업은 공장식 시스템을 생산자에 강요한다. 사료와 약품 공급, 유통과 판매망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의 생산자는, 불만이 있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생산자는 계약 조건으로 자동화 설비를 갖춘 창고형의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대로 사료 급이와 성장촉진제와 항생제 등을 투여해야 한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생산자의 몫이다. 대기업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자영농민의 토지와 노동력을 차압했다. 수직계열화는 기존의 농민 간 지역 간의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와해시키고 생산농가를 공급과 유통을 장악한 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거대자본은 토지 및 시설관리와 노동비용을 모두 생산자에게 전가하는 경영기술 만이 아니라 병아리를 60일 만에 최대 몸무게로 만들어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공학 기술도 발전시켰다. 그 결과 대형통합 기업은, 유전자 특허, 사료, 닭, 약품, 트럭, 도살장, 브랜드를 소유하고, 위탁 생산 농가는 빛과 축사, 노동력, 공공요금, 폐기물, 분뇨, 동물 사체 및 법적 책임을 떠맡는 불공정 계약서를 소유하는, 극도로 불평등하

게 기울어진 ‘파트너 관계’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위탁계약자가 된 농가와 농민 역시도 ‘생명을 돌보는 이’에서 점점 멀어졌고,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적 사고와 체질로 변형되어 갔다

이 과정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관찰된다. 2003년에는 14만 4천농가에서 약 1억 마리의 닭을 생산하던 것이 2011년에는 3천 3백농가에서 1억 4천만 마리의 닭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자영농은 도태되고 중대 기업농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다. 이런 구조조정 과정은 대기업의 점유율 확대와 시장 독점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하림, 동우, 마니커가 국내 유통 닭고기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가 만들어졌다. 현재 닭 사육농가의 90%, 오리 사육농가의 95%가 대기업과 계약한 위탁 사육으로 닭을 키운다. 대기업과 위탁계약을 맺으면 위탁농가는 닭을 출하할 때만 판매자가 되고 다른 모든 단계에서는 구매자가 된다. 기업은 병아리를 넣어주고 돈을 벌고, 사료를 공급하면서 돈을 벌고, 약제를 판매하면서 돈을 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사료값으로 전체 지불비용 중 90%를 차지한다. 시설관리비나 노동비용은 모두 생산자의 몫이다. 이렇게 앞으로 벌고 뒤로 다 떼이고 나면 남는 것이 있거나 할까? 축산 현장에 노동자로 직접 들어가 경험을 토대로 르포를 쓴 한승태의 『고기로 태어나서』<sup>5)</sup>에는 11만 마리의 닭을 키워 2천만 원의 수입을 남기는 ‘그나마 잘 하고 있는’ 양계농장 사장의 이야기가 나온다. 11만 마리의 닭을 키우는 주인에게 닭이란 무엇일까? 그에게 11만 마리의 닭은 납품할 상품이 아니라, 돌봐주며 키우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다. 육계 농장에서는 자라는 내내 ‘(상품이) 안 될 것 같은’ 닭들을 계속 골라내서 죽인다. 다쳐도 죽이고, 병들어도 죽이고, 덩치가 빨리 커지지 않아도 죽인다. 2020년 통계청 축산물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육계 한 마리 당 순수익은 38원으로 계산된다. 마리 당 총 수입이 2,002원인데 사육비가 1,964원이라는 것이다. 생명을 죽이긴 쉽지 않지만 ‘38원’을 버리기는 쉽

5) 한승태. 2018. 『고기로 태어나서』, 시대의 창.

다. 10만 마리를 키워야 순수익 380만원이 떨어지는 셈이다. 대기업과 생산자 간의 이런 불균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교가 있다. 맨해튼에서 12조각이 든 19달러 짜리 KFC 치킨 한 통을 살 때 사육자에 돌아가는 몫은 25센트에 불과하다.<sup>6</sup> 그야말로 현대판 농노가 따로 없다. 이 기울기가 지금 자본과 노동, 자본과 생명의 극단적 불평등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척도다.

그러니 양계업체에서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규모를 계속 키우는 길 밖에 없다. 하지만 규모를 키우려면 돈이 든다. 계사도 지어야 하고 설비도 더 넣어야 하니까. 위탁생산자는 어디서 이 돈을 구하는가. 이 때 금융서비스가 지원 사격을 한다. 위탁계약은 대출알선까지 패키지로 묶여 있다. 대기업은 신용으로 대출을 알선해준다. 물론 상환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 생산자의 몫이다. 이렇게 부채의 덫에 빠저든 ‘농업경영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거대기업을 먹여 살리고, 금융자본의 배를 불러준다. 서비스 산업에서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자영업자에게 행하는 노동착취의 기법이 농업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규모의 경제로 소득을 키우고 ‘부농 만들기’를 지향하는 정부 농가 금융지원 정책은 소농을 말살시키고 농업을 금융자본주의에 완전히 예속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규모를 키워가면 필연적으로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주의해서 볼 것은 가금류 산업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공급과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으로 해소되어왔다는 것이다. 2003년에는 528만 마리, 2006년에는 280만 마리, 2008년에는 1천 20만 4천 마리, 2010년에는 647만 3천 마리가 살처분 됐는데 그 때마다 포화 상태에 이른 가금류 시장에서 조류독감과 살처분은 시장이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을 처리하는 역할을 했다.<sup>7</sup> 전쟁이 공황

6) 위노아 하우터. 2020. 『푸드폴리』, 뽕간소금, p306.

7) 정웅재. 2014. "조류독감 퍼지는데 하림 주식 가격은 왜 오를까?" 『민중의 소리』 2014.3.31.

을 해소하듯이, 동물들의 전쟁도 과잉생산을 해소했던 것이다. 이런 위기 때마다 자본력이 없어 버티지 못하는 경쟁력 없는 영세 농가는 시장에서 자동 퇴출됐다. 살아남은 업체는 더 대규모화 되어갔고, 하림 같은 기업에게는 재난이 오히려 수익을 높여줄 기회가 되기도 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최악의 조류독감 사태로 대규모 살처분이 일어났을 때도 상황이 종료되자 육계 가격이 폭등했고, 하림의 주식 가격도 정점을 찍었다. 업계에서는 육계 불황이 오면 조류독감이 “한 번 싹 청소해서 정리해줄 때”가 됐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온다. 어차피 살처분도 정부 돈으로 하고, 시가의 80%까지 보상도 해준다. 농가 피해보상액 산정에 들어가는 것은 병아리 대금, 사료 대금, 약제비 등이다. 보상비를 받아도 건질 것이 없는 것은 농가 사정이고, 하림은 병아리 공급부터 다시 시작한다. 결국 살처분은, 계사를 비워 ‘제로(0)’로 만들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채택한 방식이다.

‘병아리 10마리에서 10조원대 자산가로 우뚝 섰다’는 성장신화의 주역, 하림의 성장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림은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해온 육계 수직계열화 사업의 선도 기업이다. 하림홀딩스는 하림그룹 최상위 지주회사로 팬오션, 제일사료, 하림, 팜스코, NS홈쇼핑 등 주요계열사를 포함 국내 55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하림홀딩스의 취급 품목은 투자 및 기업 컨설팅이다. 하림은 닭 팔아서 성장한 게 아니라 투자 컨설팅을 통해 성장한 것이다. 하림은 생산 부문보다 금융 부문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의 금융화 공식에 충실한 경로를 밟아왔다. 2015년 곡물수송 부문 팬오션을 인수하면서 명실상부한 대기업 반열에 들어섰고, 곡물유통에서 해운,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식품제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사슬(food chain)을 완성했다. 2012년 자산 규모 3조원이었던 하림은 2018년 총자산 규모 11조 9천억으로 대기업집단 32위에 올랐다. 팬오션을 인수하며 자산 10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

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포함된다. 지난 20년 간 대기업군(자산규모 10조원 이상)에 진입한 중견 기업은 단 3곳뿐인데, IT기업인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하림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림은 2021년 현재 공시 기준 자산총액이 13조 440억으로 재계순위 31위다. 최근 하림홀딩스는 이스타 항공 인수에도 나서고 있다.

하림의 성장 뒤에는 정부 지원도 있었다. 2012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하림은 농산물 개방에 따른 수입 닭고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정부로부터 2,016억 원을 지원받았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익산의 하림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범 기업’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익산시 의회는 대통령의 식품산업육성 약속을 언급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육성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각종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지원, 입주기업과 연구소의 조세 감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례 조치 등 규제완화와 기업 특례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노동자들이 해고와 실직, 폐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재난 특수’를 톡톡히 누린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농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농산물 수입 개방이나 조류독감 같은 사회적 재난도 하림 같은 기업에겐 성장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생명에 대한 이토록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생산 방식이 출현한 것은 2000년을 전후로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자본주의의 진격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바로 보지 않고서는 인간도 동물도 무가치한 생명의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폭력, 생명에서 이윤을 무자비하게 뽑아내는 착취를 중단시킬 수 없다.

## 지옥을 끝내기 위해

『고기로 태어나서』에서 작가는 병아리 부화장에서 경험한 ‘대량화의 폭력’을 이렇게 설명한다.<sup>8</sup> 병아리가 한 마리일 때는 병아리다. 그 때는 눈도 보이고, 부리도 보이고, 표정도 보인다. 하지만 병아리가 수십 마리가 되면 ‘병아리 떼’가 되고, 수백 마리가 되면 수백 개의 테니스공처럼 보이다가, 수천 마리의 병아리가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밀려오면 ‘폴짝이는 노란 먼지’로 보인다. ‘불량 병아리’를 선별하는 노동자는 처음에는 아우슈비츠로 보낼 희생자 명단을 작성하는 심정이 되어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지만, 엄청난 속도와 강도의 노동에 지치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와 일체화된 속도로 마치 기계의 일부처럼 병아리들을 집어낸다. 그러니까 이런 생산 시스템에서는 어떤 노동자도 약자에 대한 동정심 같은 고귀한 인간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도살장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밀려오는 고깃덩어리는 죽은 생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덮쳐오는 위험과 피로며, 처리해야 할 물량일 뿐이다. 그걸 마쳐야 집에서 기다리는 어린 생명을 한 번이라도 더 안아볼 수 있는.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생명을 죽이는 현장에서 함께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그곳에 세워놓고 이윤을 착취하는 자본이다. 인간 본성의 잔인함만을 부각시키는 건 자본의 잔혹함을 감추기에 좋은 전략일 뿐이다.

상품성 없는 병아리가 쓰레기가 되는 곳에서는 상품성 없는 인간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어느 날 위장취업 작가는 대체 얼마나 많은 수평아리가 폐기되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출하할 닭의 두수는 끝자리 수까지 정확히 셈하지만 폐기되는 닭의 숫자는 아무도 모른다. 그 이유를 코 폰 휴지가 가득 찬

---

8) 한승태, 2018. 위의 책.

쓰레기통을 보면서 알게 된다. 쓰레기의 숫자는 세지 않는다는 것을. 노동자 대량 해고도 마찬가지다. 들어가는 사료값이 농장주의 ‘손실’이듯이, 불필요한 노동자에 들어가는 임금도 사용자의 손실비용으로 계산된다. ‘비용을 줄이는 것’이 닭장과 공장의 공통된 경영 원리다. 대학이 강사를 해고할 때의 이유도 꼭 같았다. 비용 최소화와 수익 최대화의 원리. 사료만 축내는 불량 닭을 골라내듯이 대학은 쓸모없는 강사를 선별하고 해고했다. 대학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이도 ‘쓸모없는 자’에 해당되었다.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을 처음부터 잉여로 만드는 방식도 산란계 부화장의 수평아리 선별과 똑같다. ‘쓸모없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쓸모의 입증을 위한 경쟁은 심해지고, 자신의 상품 가치를 개발하기 위한 자기개발의 전투도 치열해진다. 좁은 닭장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쪼아대며 공격하는 닭처럼 사람들도 포악해져 간다.

그런 점에서 동물학대는 정치적 우경화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같은 사회 전반의 폭력성 증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동물학대가 연쇄살인 같은 사이코패스 범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범죄심리학자들의 말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는, 동물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의 무감각에는 경악하면서 우리가 먹고 있는 동물에 대해 가하는 학대와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적 무감각에 대해선 얼마나 무심한가. 북극곰이나 펭귄, 돌고래 같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절대 출현하지 않을 동물들의 고통에 대해선 깊은 동정심과 연민을 느끼는 사람들도 우리를 먹여 살리는 ‘먹히는 동물’의 고통에 대해선 놀라울 정도로 비정하고 무감각하다. 비프 스테이크가 소이며 후라이드 치킨이 닭이고, 돈가스가 돼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을까? 이런 기이한 감각분리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동물의 삶이 완벽하게 사라졌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식품업계가 만들어낸 ‘푸드 포르노’가 상상적 미각을 극단적

으로 자극하는 동시에 도덕적 감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물과 우리가 연결되지 못하도록 식품광고 같은 이미지의 교란을 통해 이런 감각 분리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대 식품기업의 전략도 개입된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를 보고 불쾌가 아니라 식욕과 즐거운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광고처럼 말이다. 이러한 감각적 분리가 현실부정론을 낳는다. 알면 먹(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먹(이)기 위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지도 모른다.

이런 현실의 구조적 맥락 바깥에서 벌어지는 먹느냐 먹지 않느냐, 채식이냐 육식이냐, 무엇을 먹을 것이냐는 논쟁은 지극히 사변적이고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적게 먹자, 적당히 먹자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세워야 할 동물윤리의 원칙은 식단의 양과 종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것이다. 혹자는 먹고 먹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인간도 동물인 한 자연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자연의 어떤 동물들도 다른 동물에 대해 이렇게 고도의 기술적 방법으로 조작, 학대, 고문, 감금, 학살하는 잔혹한 폭력의 양식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자본주의 문명의 법칙이고 신자유주의적 폭력에 의해 강제된 관계다. 이 지옥을 만든 것은 인간의 잔혹함도, 자연의 법칙도 아닌, 자본의 법칙이다. 그러니 인간이 동물을 먹는 것을 ‘순리’라고 말하지 말자. 전체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방식이 출현한 것이 불과 백 년도 안 된다. 생명을 이렇게 죽여서 먹고 쓰레기로 만드는 곳에선 사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지옥을 끝내려면, 지옥의 기원을 없애야 한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생태 감수성

김산하(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연구자, 작가, 활동가,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구농할라문 국립공원에서 자바 긴팔원숭이를 연구한 국내 최초의 야생 영장류학자이다. 과학 대중화에 관심을 갖고 영국 크랜필드 대학교 디자인센터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생명다양성재단의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비숲』 『김산하의 야생학교』 『숨지주의자』 『살아있다는 건』 역서로는 『무지개를 풀며』 『사회생물학의 승리』 『활생』 등이 있다. [hello@diversityinlife.org](mailto:hello@diversityinlife.org)

부모가 되면 달라진다고 한다. 아이가 없는 필자로서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자신 있게 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를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한 가지가 매우 두드러진다. 그것은 바로 어떤 세계관의 등장이다. 세상의 구조와 원리는 이러저러하고, 따라서 이곳에 사는 우리의 삶도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세상을 읽는 어떤 사고의 틀. 그것을 세계관이라 칭할 수 있다면 말이다.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 전에는 세계관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아무리 평

소에 별 생각 없이 산다고 해도, 또는 파편적인 잡다한 의견들을 정리되지 않은 채로 지니고 있다 해도, 그 모든 의미의 구슬을 하나로 꿰는 어떤 사상이 기저에 자리하고 있기 마련하다. 스스로 자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나름의 일관성과 논리와 적용 원칙을 갖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 특유의 입장이나 행동양식이 발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아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되면서부터, 머리 깊숙한 곳에 파묻힌 이 사상의 틀을 끄집어내야 한다는 점이 달라진다. 그전까지는 무의식적이어도 상관없었다면,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고찰하고 심지어는 좀 더 명료하게 표현하고, 합리적으로 체계화시켜야 한다. 자라나는 아이가 쏟아내는 온갖 질문에 답을 하고, 또 그 여러 답 간의 관계까지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는 부모가 된 순간부터 윤리, 철학, 사회, 정치, 경제, 지리, 역사, 물리, 화학, 생물, 천문 등 수많은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관의 확충과 정비 작업이 시작된다. 다른 누군가가 묻는 것이라면 ‘내가 알게 뭐냐’라고 받아쳐도 된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말이 되게끔 말해야 한다.

가장 난해한 부분은 당위와 모순이다. 그냥 세상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만 잘 묘사해서는 충분치 않다. 사회가 왜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 속에 있는 구성원은 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기본적인 정당성을 확립해야 한다. 어렵사리 당위를 세워놓는 데에 성공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언젠가 찾아오는 모순의 질문에 대비해야 한다. 아이마다 개성은 제각각이라도 앞뒤가 안 맞는 건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재주는 공통된 능력이다.

가령 화초를 키우는 것을 보고 질문한 아이에게 부모는 생명을 소중히 가꾸는 것의 중요성과 그것을 정성 들여 키워 무럭무럭 크는 것을 보는 보람에 대해 얘기

해 준다. 하지만 다음 순간 창문을 통해 날아든 파리에 질색하며 박멸하려는 반응을 보이는 순간, 아이의 머리는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당장이든 나중에든 결국 질문이 고개를 든다. 엄마, 파리도 생명이지 않아?

물론 위생, 생존, 인간 영역 등을 들먹이며 사태를 무마할 순 있다. 하지만 순간을 모면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앞으로 인생에서 당면할 수많은 사건과 현상을 어떻게 보고 또 받아들이л 것인가를 결정짓는 토대를 하나씩 쌓는다는 의미에서 생각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부모와 아이 간의 대화 구도를 언급하는 이유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진실과 가치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대화가 벌어지는 몇 안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것이다. 여기서만큼은 위선과 꼼수 없이 소통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삶과 사회의 밑바탕을 이루는 기본 명제들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여러 유명한 말 중 하나이다. 여기서의 간단함은 단순히 어려운 것을 쉽게 풀이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생각들이 서로 맞닿아 있는지, 어떤 공통분모가 그 생각들을 관통하는지, 그 생각들의 사상적 배치가 너저분하거나 꼬여있는 건 아닌지 등을 명약관화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함이다. 무질서와 애매모호의 베일 뒤에 숨지 않고, 생각하고 믿는 바를 일상 언어로 명료하게 표현하여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소통을 꾀한다는 의지가 ‘간단한 설명’에 내포된다.

세상은 복잡하고 날이 갈수록 그 경향이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이런 간단한 언어로 표현되고 정리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 한다. 적어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내 아이의 순수한 얼굴을 마주 보고 얘기할 때처럼 차분하고 분명하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궤변과 자가당착과 뻔뻔함으로 찢든 현실을 헤쳐 나가는 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적어도 필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질문이다. 단연 생명이다. 생명공학이나 생명산업 따위를 들먹일 때의 생명이 아니다. 생명체, 생명계, 생명현상, 못 생명, 그리고 생명 그 자체. 이런 말을 할 때의 생명이다. 다시 말해 생명을 기능적으로 취하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생명을 본질적으로 보듬는 개념이다.

오늘날이 이미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의 시대라는 것이 아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적어도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며,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생명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확실하다는 뜻이다. 가장 고전적인 개발론자 조차도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생태적’인지를 역설하고, 화석연료 기업도 스스로가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를 선전할 정도로 작금의 대전제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인 기후변화 또한 같은 맥락이다. 뒤로 뭐가 뿔어나 오는지를 보지도 않고 엔진을 돌리던 때에서, 이제는 그것의 누적적 효과가 인간은 물론 지구 전체를 위협한다는 깨달음에 이른 것이다. 우리만 잘 살고자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 생태계의 일원이면 생태계 전체를 살려야만 우리도 산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말이다.

그 깨달음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여전히 겉으로는 생명과 생태를 표방하면서도 속은 전혀 다른 경우가 언행이 일치하는 사례보다 아직도 월등히 우세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디서도 인간을 위해서 자연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식의 단순 논리를 대놓고 펴는 일은 없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속도는 더디지만, 우선 의미계와 상징계는 생명존중 사상을 중심으로 이미

재편성되고 있다. 싫든 좋든 흐름이 발생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이라는 한 종이 차지했던 독보적인 위상은 허상이었고, 그로 인한 폐해를 회복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지상과제라는 것만은 만천하에 선포된 것이다.

이러한 커다란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를 어떤 틀로 보느냐가 문제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지의 이번 이슈인 산안농장의 사례 또한 마찬가지다. 조류독감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그간 37년간 친환경 농법으로 키운 닭들이 살처분 당한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해석될 수 있겠으나 그 무엇보다 생명과 생태적 고려가 우선시되어야 할 사안이다.

생명과 생태의 문제? 그것은 당연하고 다 알고 있는 원칙적인 얘기니 바로 기술적인 논의로 옮겨가야지라는 태도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태도이다. 하지만 이렇게 조급하게 전문적인 분석을 내놓으려는 자세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쉬이 놓친다. 그것은 바로 가장 자주 반복적으로 간과되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 닭이 생명이라는 사실이다.

‘A도 생명이다!’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벌레 씹은 표정으로 고개를 싹 돌리는 이들이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구호만 외치는 열성분자들의 견딜 수 없는 순진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을 되바라진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줄기차게 외면하려는 이 기초적인 명제가 실은 이 문제의 핵심과 가깝다는 것도 사실이다.

왜일까? 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무자비한 대규모 살처분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친환경적으로 키운 깨끗하고 죄 없는 닭들이 희생자였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의 화학적 결합이 일으키는 상승효과로 인해 우리는 다른 많은 사안 중에서도 유독 이 건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살처분을 사회적 필요악으로 간주하는 이상 그 효과는 현격하게 줄어든다.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무엇으로 상정하는 순간 산안농장의 특수성만이 남는다. 그러나 살처분은 괜찮은데 적용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생각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안다. 집단적 ‘살(殺)’을 마치 어떤 일상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처분’인 것처럼 여기는 잔혹함이 닭을 키우되 동물과 인간과 환경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최고의 모범 사례를 내려침으로써 충격의 파장이 배가되는 것이다.

두 가지 사항 모두 핵심은 생명이다. 산안농장이 동물복지농장이라는 점, 그것도 법적 기준보다 훨씬 낮은 밀도로 닭을 키운 모범 동물복지농장이라는 사실은 축산조차 동물의 복지를 신경 쓰고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에 기초한다. 이 당위는 물론 닭이 생명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사실에 의거한다. 닭이 속한 조류라는 분류군 전체가 고등한 인지능력을 소유하고 고통에 대한 감각은 물론 감정을 가진 생명체들의 집단이라는 사실도 이에 합세한다. 그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애초에 이러한 인증 체계는 물론 동물복지라는 개념조차도 무의미했으리라.

어차피 결국 죽일 거면서 무슨 동물복지? 이 또한 매우 유효한 비판적 입장이다. 동물의 복지를 말하는 순간, 그 동물의 생애 전체 범위 중 어느 구간만을 임의대로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축산의 동물복지 고려가 갖는 근본적인 모순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의 복지는 여전히 독립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최소한 고통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언제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고통에 대한 고려는 결국 또 다시 생명에 대한 생각으로 귀결된다. 생명이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 말이다.

살처분도 마찬가지이다. 정말로 우리는 이 엽기적인 단어를 일상어로 인정하

기로 한 것이란 말인가? 수만 마리의 생명을 몰살하고 생매장하는 일이 지금처럼 정상적인 국가행정 행세를 해도 된다면 대체 앞으로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이라는 근거로 비판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집단 학살이 뭔가를 예방하기 위해 할 만한 행동이라는 발상 자체야말로 가장 충격적이다. 그것은 집단 학살보다 훨씬 안 좋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미 최악의 정점이다. 살(殺), 그것도 대규모 살보다 더 피해야 하는 것은 없다.

살처분의 기술적, 기능적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 이 글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논의를 함으로써 일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기술적인 논의를 하는 순간, 어떤 기능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실행해도 좋다는 의미도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기 때문이다. 직관적으로 잘못된 일을 변호하려는 세력이 사안을 최대한 빨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문제로 둔갑시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을 문제적으로 보는 직관의 명징함을 흐리기 위한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세계관으로 돌아가 보자. 그것은 내 아이에게 세상의 이치를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하나는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이다. 제아무리 냉소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거한 세계관을 정립하기란 불가능하다. 자신의 삶을 보호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본능을 발휘하는 한, 그 명제는 유효하다. 살처분, 그것도 오염되지도 않은 공인 동물복지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가장 정면으로 반역한다.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뒤틀린 기형적인 논리는 절대로 단순하고 명징한 형태로 표현되지 못하는 것이다. 내 아이에게 살처분의 정당성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은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명을 존중한다. 이 간단한 문장이 모든 이들의 세계관에 자리하고 있다고 해

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맥을 같이하는 현대적 생명사상이자 생태적 감수성의 소산이다. 여기서 생태적 감수성이란 생명 및 삶의 조건에 관한 앎과 정서와 감의 총체를 말한다. 생명과학과 생태학 전반에 관한 지식과 교양이 ‘앎’이다. 생명현상과 관련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 의미 부여와 가치판단이 ‘정서’이다. 그리고 앎과 정서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미지의 세계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 ‘감’이다. 이 모두가 골고루 갖춰지고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생태적 감수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산안농장의 살처분 사건을 비롯하여 이 시대의 각종 환경·생태 이슈를 직면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복합적 총체인 생태적 감수성이기 때문이다. 우선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문명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가하면서 만들어진 것인지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앎조차 그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크게 의존한다. 그리고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이나 정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생물학이나 생태학 전공자 중에 삶 자체는 조금도 생명과 친화적이지 않은 이들이 수도룩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오히려 자연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생기는 거리감이 생명을 보는 눈을 건조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앎 못지않게 생명현상에 대한 의미 부여와 가치판단, 미학적 접근과 융복합적 인식 및 표현의 능력도 너무나 중요하다. 말 그대로 생태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한 것이다.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현재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것도 그냥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둘러싸는 환경을 인공적으로, 에너지 소모적으로, 반생명적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그것은 양의 되먹임 효과를 낳아 그런 세상을 더욱 익숙하게 느끼고 더욱 요구하는

사람을 빚어낸다. 모든 표면이 포장되어 있고, 모든 풀이 뽑혀 있고, 모든 물자가 가공되어 있는 곳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이 생태적 인식과 감각을 온전하게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오히려 상실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차라리 상실이야말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는 생물다운 모습이다.

하지만 상실의 여파는 크다. 생태적 감수성을 잃을수록 애초의 출발선이 후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기준점 이동 신드롬’이라고 부른다.<sup>1)</sup> 원래는 수산과 학에서 처음 제기된 개념으로 어획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어업을 시작하는 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준점이 되고 그 기준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낮아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 마디로 눈앞에 놓인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눈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 되고 만다.

가지가 무자비하게 잘려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가로수가 늘어선 길을 걸으며 성장한 이에겐 그 만신창이가, 질병 감염을 예방한다며 수만 마리의 멸종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 정례화 된 사회에 속한 이에겐 그 집단학살이 ‘정상’의 자리를 차지한다. 정상이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끝없는 대화와 투쟁 없이는 기준이 어디까지 후퇴할지 아무도 모른다. 약 20년 전 대구모 살처분이 미디어에 처음 오르내릴 때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 이 소식이 평범한 연례행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상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생태적 감수성이다. 모든 사안에 관한 선행 연구나 정보가 충분하게 존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환경·생태 이슈들에 올바르게 대응하려면 전

---

1) Pauly, D. 1995. "Anecdotes and the shifting baseline syndrome of fisheries." *Trends in Ecology & Evolution* 10(10): 430.

문성이 아닌 감수성이 요구된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소위 전문가들이 소환되지만 그들 역시 아주 좁은 학문적 영역에 한해서만 전문가이며 똑같은 불완전한 지식에 의존한다. 누구나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현대의 정보 평등 시대에서는 오히려 일반 시민의 생태적 소양의 수준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편협하고 폐쇄적으로 전개되었던 담론에 신선하고 진실된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어떤 서식지가 개발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멸종위기 종이 있느냐 없느냐에 집중되어 왔다. 마치 멸종 직전에 내몰린 종이 아니고선 고려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긴 세월 동안 이 땅에 존재한 자연에 멸종위기 종의 존재 여부는 정말 미미한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런 한 가지에 매몰된 논의 구도를 보고 뭔가 이상하고, 답답하고, 이건 아니라고 여긴 사람, 그는 생태적 감수성을 갖출 준비가 되어있는 자다.

우리도 생명이기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록 저 새처럼 창공을 가르며 야생의 삶으로 바로 뛰어들 수는 없지만, 대신 우리에게 생명현상과 자연의 섭리를 관찰하고, 이해하고, 음미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출중하게 갖춰져 있다.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로가 아닐까 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에게 자랑스럽게 들려줄 수 있는 나만의 삶의 지혜와 더불어 말이다.



담론 — 연재

생명운동을 보는 다양한 시각



# ‘사회의 자기기술’로서 녹색전환과 한살림선언

# ‘사회의 자기기술’로서 녹색전환과 한살림선언

박순열(이너시티 도시재생연구소)



사회학박사로 오랫동안 생태정치, 생태시티존십, 환경갈등 등을 연구하였다. 최근의 주된 연구관심은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사회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가?: 사회의 가능성과 변화에 대한 관찰", "생명과 자유를 구현하는 새로운 시민", "지속가능성 전환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정책평가(공저)", "정비사업 주민의식 조사연구 - 사회적 관계와 도시재생(공저)"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cosoon@gmail.com

## 1. 사회의 자기기술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파국적인 생태적 위협에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최근의 답변은 녹색전환, 지속가능성전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등을 포함하는 녹색전환들이 주를 이룬다. 이 글에서는 이런 녹색전환들을 생태적 위협에 직면한 사회가 스스로의 대처방안을 서술한 일종의 자기기술(自己記述)로 설명하고자 한다.<sup>1</sup> 생태적 위협에 직면한 사회의 이런 유형의 자기서술은 1989년에 발표된 <한살림선언>에도 해당된다. 한살림선언은 인간소외, 공동체 해체,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야기한 산업문명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그 대안으로 생명세상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이 글은 최근의 녹색전환들과 한살림선언을 사회의 자기기술로 분석하여 그것들을 읽는 또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글을 이끌어가는 핵심 개념인 ‘사회적 자기기술’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의 언제나 타인과 스스로를 구별하고, 그렇게 구별된 스스로를 표현하는 ‘자기기술’ 속에서 살아간다. 자기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사람, 공동체, 국가 등이 스스로를 그것이 아닌 나머지 것과 구별하여 지칭하는 이름이다. 자신을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기술하거나 자신의 구조나 기능을 지시하면 자기기술은 더 복잡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자기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개인의 자기기술, 특히 작가의 문학작품들이다. 가령, 한국전쟁 체험 세대가 말년에 겪게 되는 시대 전환의 경험에 주목하면서 작성한 텍스트는 일종의 ‘문학적 자기기술’이고, 그것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는 독자와 평론가에 의해 탐구될 수 있다.<sup>2</sup> 그런데 독자나 평론가는 작가의 작품 안에서 작가의 ‘실제 경험’과 그 ‘경

---

1) 녹색전환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환경부연구팀. 2020. 『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생태 사회를 위한 가치와 전략』. 한울아카데미.

2) 박완서와 이청준의 ‘말년의 서사’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급격한 시대 전환을 목격하며 한 세대의 일원이자 작가로서 자기의 삶을 반추하는 문학적 자기기술이자, 작가 자신이 계속해서 쓰고자 했던 시대와 사건과 존재가 현재의 시점에서 어떠한 의미와 위상을 가질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임유경. 2020. “한국전쟁과 문학적 자기 기술 - 박완서와 이청준의 ‘말년의 서사’를 중심으로.” 『사이間SAL』 29. pp49-182.)

험에 대한 작가의 기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쉽게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그런 일치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사실 작가 스스로도 자신의 경험을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지만 경험이 가능했던 세계 속에서) 온전히 인식할 수도 기술할 수도 없다. 작가는 자신이 본 것만을 볼 수 있었고, 그가 보지 못한 것은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관찰될 수 있을 뿐이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너와 나의 서울’,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처럼 사회조직의 이름과 해당 조직이 스스로를 기술(記述)한 내용들 역시 자기기술이다. 이렇게 이름들을 포함해, 사람이나 사회가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텍스트들이 자기기술이다.<sup>3</sup> 이에 비해 사람이나 사회가 자기가 아닌 어떤 타자(사람, 사회, 사물 등)에 나머지 것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거나, 그것의 구조나 변동 등을 기술한 것은 ‘타자기술’에 해당된다. 물론 이름과 기술된 내용이 그것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그것이 놓여있는 맥락에 얼마나 적절한 것인가는 또 다른 관찰자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서울을 부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상식적인 오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기기술은 그것의 진위여부가 주된 관심사항이 아니다.

작가의 문학적 자기기술, 국가나 사회조직들의 자기기술에서 우리는 기술하는 자기와 그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에 (일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다. 그러나 ‘근대’와 같은 (전체) ‘사회’의 자기기술에서는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이 상당한 논쟁거리가 된다. ‘근대’는 단일한 지시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어떤 상태를 기술한 것이라서 자기-자기가 아닌 것의 관계와 근대라는 지시 그 자체가 논쟁이 된다. 그래서 ‘근대적’이라는 것은 ① ‘이전’의 반대말로서 현재, ② ‘오래된’의 반대말로서 새로운, ③ ‘영원한’의 반대말로서 일시적이라는 경합하는 의미를 지칭하고 있어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자기가 아닌 것이 다르게 구별된다.<sup>4</sup> 그래서 근대에 관한 논의는 그 의미를 개념 안에서 찾는 것보다 그 개념들을 통해서 포착하고자 했던 사태들은 무엇인지, 누가

3) 루만, 니클라스. 장춘익 역. 2014(1997). 『사회의 사회2』, 새물결. pp1007.

4) 굼브레히트, 한스 올리히. 원석영 역. 2019.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3 근대적/근대성, 근대』. 푸른역사.

또는 무엇이 포착한 것인지, 포착되는 사태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등으로 질문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우리는 근대-근대가 아닌 것, 그 양자를 관찰·기술하는 관찰자인 사회,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세계’, 즉 타자, 타자와 구분되는 자기, 구분의 기준, 타자와 자기를 포함한 세계 등을 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녹색전환이나 한살림선언을 사회의 자기기술로서 분석한다는 것은 그것들에서 자기-자기가 아닌 것들이 구별되고 기술되는 방식, 자기의 존속에 위협을 가하는 생태적 위험이 파악되고 대처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태적 위험의 객관성 여부, 그리고 자기기술 된 것(기술의 내용)과 외부 세계와의 일치여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대신 생태적 위험에 대한 사회의 대처와 관련된 자기기술에 (암묵적으로) 제시된 자기(自己)-비자기(非自己)의 구별과 그에 따른 관찰도식이 중요하다. 이 구별·관찰·기술 도식에 따라 ‘사회’, ‘생태적 위험’ 등을 관찰·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가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2. 향상된 사회의 자기기술의 조건 -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

사회가 직면한 생태적 위험에 대한 사회의 대처는 현대 사회에서는 학문의 분해와 재조합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학문체계는 새로운 인식을 획득하고, 그것을 다른 기능체계들이나 자신의 사회 내의 환경에 성과로서 제출한다.<sup>5</sup> 그런데 학문의 분해와 재조합 능력의 향상은 많은 경우에, 일상 언어로는 포착할 수 없는 사태를 분해하고 재조합하기 위한 고도로 전문화된 개념과 이론에 의존한다. 최근의 코로나 19 사태에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관련된 과학의 대처능력, 즉 과학의 분해와 재조합능력의 향상은 가령,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B1525변종’과 ‘E484K’ 스파이

---

5) 루만, 니클라스, 2019(1992). 『사회의 학문』, 이론출판사, pp425-426.

크 단백질 변이와 같은 개념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과학의 이런 대처능력의 향상은 현대사회가 성취한 고도의 기능분화의 산물이다. 과학의 기능분화는 과학체계가 정치체계, 경제체계, 법체계, 가족체계 등과 작동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과학체계에서는 권력, 화폐, 합법, 사랑 등이 주도적인 작동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실험실에서는 실업, 교육, 태양전지 등이 연구되지 않고, 연구자 간의 친밀성이나 권력, 화폐, 위신 등의 문제는 아주 예외적으로만 의제가 되고, 그것들이 주요 의제가 되면 해당 실험실은 학문체계로서의 작동을 (한동안) 중단할 것이다.

생태적 위험에 대한 사회의 대처능력 향상 역시 상식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의 창안에 의존한다. 1970년대 등장한 환경학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생태적 위험의 원인은 무엇이며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 사회가 경험하는 생태적 위험의 기저에는 ‘인간 예외주의’와 같은 인간-자연, 사회-환경 관계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개념과 이론이 놓여있다. 따라서 생태적 위험에 처한 사회가 그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당시의 지배적인 개념과 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인간-자연, 사회-환경의 방식으로 세계를 구별하는 그 시대의 지배적인 인식을 변화시켜야만 환경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환경사회학, 근본생태론, 생태사회주의, 생태여성주의, 정치생태학, 생태현대화론 등은 모두 생태적 위험을 야기하고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지배적인’ 개념, 이론, 패러다임, 그리고 그것들과 연관된 상식과 일상어를 비판하였다.<sup>6</sup> 그리고 이것은 한살림모임 창립준비위원회가 기존 사회운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한살림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운동, 동학을 포함한 전통사상, 새로운 과학, 철학, 환경, 사회사상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실로 생명운동으로서 ‘한살림선언’을 발표(1989년 10월 29일)한 것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

6) 자세한 논의로는 드라이제크, 존. 정승진 역. 2005. 『지구환경정치학 담론』. 에코리브르.

생태적 위험에 처한 사회와 그 사회의 대처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위험을 야기하고 위험에 대한 사회의 대처능력을 떨어뜨리는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개념과 이론, 그리고 그것과 깊이 연루된 상식과 일상적인 어휘는 언제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다. 특히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이나 사람들의 생각과 일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운동은 그 변화의 대상이자 주체인 사회 또는 사람들과의 일치나 근접성 때문에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개념과 거리두기가 어렵다. 그래서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논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보다 적절한 개념이나 어휘의 도입을 주저하기도 한다. 때로는 사회가 직면한 생태적 위험에 대한 사회의 대처 능력의 향상에 새로운 개념과 이론의 도입과 사용이 필수적일 때조차도 주저된다. 여기서 사회의 대처능력 향상의 출발점으로서 사회가 아닌 것을 사회가 처리하는 양태에 대한 해명은 어떤 명분으로도 지체될 수 없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다른 바이러스와 어떻게 다른지, 인간의 면역체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모든 것을 관찰하는 과학의 이론과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검토해야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의 분해와 재조합 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sup>7)</sup>

그러나 과학에서 이루어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의 신속한 개발은 다른 기능은 다른 사회체계에서 처리되기에 가능하다는, 현대사회의 기능분화가 가져오는 다면적인 효과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학문체계에서 권력, 화폐, 사랑 등이 더 이상 결정적인 기능을 하지 않을 때, 과학은 진리에 특화되어 새로운 인식의 획득을 통한 분해와 재조합능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이 진리에 특화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과학에서 다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

---

7)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약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면역체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의 면역체계의 작동은 그 자체로 투명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적합한 사람의 면역체계의 작동이 규명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면역체계 패러다임 또는 면역체계의 의미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심각한 과학적 논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책을 참조.(토미오, 타다. 황상의 역. 2010. 『면역의 의미론-자기란 무엇인가.』. 한울.)

고, 그 결과는 사회체계들의 파편화, 과학의 의미상실이나 윤리부재라는 대가를 수반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기능을 중심으로 분화된 학문체계가 낭만적이지 않고, 생태적 지향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은 해당 체계가 수행하지 못하는 것, 즉 그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해당 체계의 대안일 수는 없다. 가령,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자들 간의 관계)는 평등, 민주주의, 생태주의 등을 근거로 비판될 수 있지만, 그런 비판의 수용은 연구의 중단이나 교란을 야기하여 과학적 성과의 포기라는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 3. 도달할 수 없는 사회 그리고 환경

기후위기와 같은 생태적 위협에 대한 사회의 자기기술로서 녹색전환은 ‘사회’, 기술되는 것인 ‘사회가 아닌 것’들, 그에 대한 사회의 대처, 그리고 이것들을 포함한 어떤 세계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sup>8</sup> ‘생태적 위협’은 ‘사회-기후위기 도식’에서 사회외부에 존재하면서 사회에 위협을 가하는가(A1), 사회 외부에 존재하지만 그 발생과 경과가 사회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가(A2), 아니면 ‘사회-환경 도식’에서 어떤 사태에 대한 사회 내부의 구성물로서 사회내부에 구성된 것인가(B)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기후위기와 같은 생태적 위협을 바라보는 도식 (가)는 사회-환경, 문화-자연, 인간-자연이라는 전통적인 도식 (나)와 동일한 존재론과 인식론을 공유한다. (가)의 A와 (나)의 a는 모두 실체로서 사회, 문화, 인간, 환경, 자연이 존재하며, 이들이 구분된다고 전제한다. 이 둘의 차이는 사회, 환경, 문화, 자연 등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이나 일방적이나 등에 있다. 또한 실체로서 사회, 문화, 인간, 환경, 자연 등은 특정한 조건들, 가령 합리적·과학적 연구와 추론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진실에 (부분적으로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

8) 여기에서 생태적 위협은 녹색전환의 경우에는 인류세나 기후위기, 한살림선언의 경우에는 전인류와 지구 전 생명의 파멸을 의미할 수 있는 산업문명의 위기를 모두 포함한다.

이라는 인식론도 공유한다.

| (가) 사회-기후위기도식                                                             | (나) 사회-환경 도식                                                      |
|---------------------------------------------------------------------------|-------------------------------------------------------------------|
| A1. 사회 ◀─  ─ 기후위기<br>A2. 사회 ◀─  ─ 기후위기<br>B. 사회(사회 ◀─  ─ 기후위기) ◀─  ─ 사태 × | a. 사회(문화, 사람) ◀─  ─ 환경(자연)<br>b. 사회(사회 ◀─  ─ 환경) ◀─  ─ 환경(사람, 자연) |

이에 비해 (가)의 B와 (나)의 b는 실체로서의 사회나 환경이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사회의 외부에 존재한다.<sup>9)</sup> 이때 사회는 자기준거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작동으로서의 사회이다. 자기준거적인 작동 체계는 스스로의 작동을 통하여 스스로를 나머지와 구분하는 순간 생겨난다. 생명의 작동으로서 유기체, 의식작동으로서 인간의 심리체계, 커뮤니케이션 작동으로서 사회체계가 자기준거적인 체계이다. 이런 체계의 생성으로, 스스로 작동하는 체계와 나머지 환경이 동시에 생겨난다. 따라서 환경은 체계가 생성하기 이전에는 존

9) ‘사회’는 흔히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회’라는 개념은 ‘society’의 번역어로서 20세기 초반에 한글 사용자들에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원어인 ‘society’ 또는 그에 해당하는 프랑스어나 독일어 어휘 역시 현재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유럽에서 근대의 시작과 함께였다. 조선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사회’ 또는 그와 유사한 어휘가 근대의 시작과 함께 현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회’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 이거나 ‘사람들의 집합’과는 다른 어떤 것임을 의미한다. 즉 ‘사회가 지시하는 어떤 것’이 근대의 시작과 함께 생겨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사회를 단순히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나 사람들의 집합으로 보는 것은 사회가 지시하는 어떤 새로운 것을 제대로 탐구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상식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한국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죽어간다면, 한국 사회는 매순간 사람들의 변화만큼 변화를 겪는다. 누군가가 다친다면 그만큼 사회를 다치게 하고, 폭력이나 잔혹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과 거리를 둔다면 사회의 분리를 야기하게 되고, 누군가가 머리를 자른다면 그만큼 사회를 잘라내고, 머리카락을 물들인다면 사회를 그만큼 특정 색깔로 바꾸게 된다는 아주 이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을 우리 곁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어떤 관념적인 주체로 바꾸어도, 가령 ‘사람’을 신체와 무관한 ‘의식’으로 규정해도 난처한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의 의식 역시 생성되고, 병들고, 사라지는 것이기에 사회는 개별 의식의 변동만큼 쉴 새 없이 변동한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의 의식은 본인에게도 불투명한 것이고,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 그러면 제대로 접근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사회만이 우리에게 남게 된다. 따라서 사회를 사람, 또는 신체와 무관한 의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규정하면 ‘사회’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회와 대면하게 된다.

재할 수 없다. 체계는 고유한 환경을 스스로 생성하기에 개별 체계의 외부 환경에 속하는 것들은 체계에 따라 다르게 관찰되고 기술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회체계들이 공유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동일한 환경이나 객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sup>10</sup>

[사회(문화, 인간)] - [환경(자연)]의 도식은 한살림선언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된다. 흥미로운 점은 한살림선언은 (가)의 A-B, (나)의 a-b와 부분적으로 겹치면서 또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문화,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로서의 환경(자연)을 상정하면서도 동시에 사회-환경을 가르는 새로운 분할로서 생명(또는 살림)-죽임을 제시한다. 그러나 한살림선언의 새로운 구별에서는 사실 사회나 사람이 각각 무엇이고, 서로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사회나 인간이 아닌 것들 즉, 환경, 자연, 우주 등은 또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많은 경우 혼용되고 있다.

사회의 자기기술로서 B나 b의 도식에서 생태적 위험이나 환경(자연)은 그 대응물이 사회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사회가 아닌 것들 속에 존재하는 실재의 어떤 것들을 사회내부에서 관찰하고 기술한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객관적 실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태들을 사회가 기후위기로 구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일련의 어떤 사태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사회가 기후위기로 구성한다면, 그렇게 구성된 기후위기의 대응물은 외부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1</sup> 예를 들어, 바닷가 모래 위에 있는 해파리를 보면 서, ‘물이 없으면 해파리는 죽어 버린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현실에 상응하는 옳은 진술이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바깥의 세계는 결코 부정어를 포함하지 않고, 물의 유/무, 처지지 않은/처진 등의 구별은 외부

---

10) 박순열. 2020. “사회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가?: 사회의 가능성과 변화에 대한 관찰.” 『공간과 사회』 73. pp62-98.

11) 이는 한살림선언의 불연기연(不然其然)과 유사하지만, 불연기연에는 여전히 사태-의존과 관찰-의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못하다.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체계 내에 즉 관찰자에 귀속되는 것이다.<sup>12</sup> 따라서 ‘생태적 위험’으로서 기후위기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면, 사회의 외부, 즉 사회가 아닌 것에는 위험, 위기 등이 존재하지 않기에 생태적 ‘위험’이나 기후‘위기’에 상응하는 지시물은 없다. 그것은 언제나 관찰자인 사회가 특정한 구별을 이용하여 사태를 기술한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현재의 기후위기의 ‘위기’를 어떤 시간적 범위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상이한 진술들이 가능해진다. 가령 지난 수 백 년의 기간에서 보자면 현재의 기후변동은 아주 심각한 위기이지만, 지구생성 이후 45억년이나 인류의 출현 이후 약 400만년의 기후변동에서 보자면 현재의 사태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 결국 이 ‘위기’를 어떤 시간 범위에서 볼 것인가는 사회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회에 있고, 사회가 설정한 시간지평에 따라 위기가 되는 사태는 심각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상이한 진술들을 통합하는 보다 우월한, 또는 보다 보편적인 진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류나 지구의 수많은 생명체를 위협하는 해수면 상승이나 이상기후와 같은 생태적 위험도 지구에서 생명체의 출현 이후 지속된 진화의 맥락에서 본다면 다르게 기술된다. 지구에서의 생명체는 거의 언제나 (안정적인) 외부환경에 맞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거나 외부환경의 교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시켜왔기에 출현하고 또 지금의 상태에 이른 것이다. 생명진화의 현상태는 윤리, 규범, 생태주의, 생명중심주의를 구현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냥 진화한 것이다.<sup>13</sup> 따라서 현재의 생명과 환경의 관계를 생태주의, 인간주의 등으로 기술하고, 그것을 지키거나 구현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사회의 자기기술로 본다면, 환경에는 그런 지시의 대응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체의 환경과의 조화, 적응, 교란, 파괴 등이 사회 외부에 즉, 환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들은 언제나 관찰자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어떤 관찰자가, 무엇을 대가로,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게 된다. 물론 이런 논

12) 베르크하우스, 마르코트. 이철 역. 2012. 『쉽게 읽는 루만』. 한울. pp38-39.

13)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마굴리스, 린, 도리언 세이건. 김영 역. 2016. 『생명이란 무엇인가』. 리수.

의가 우리가 경험하는 폭염, 폭설, 한파, 대량멸종의 지시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환경에는 어떤 사태들, 어떤 사태들의 변동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위기나 위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기나 위협으로 기술하거나 개념화하는 것은 관찰자, 즉 사회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녹색전환의 ‘녹색’뿐 아니라 한살림선언의 ‘생명’이나 ‘살림’에도 해당된다.

이처럼 위험이나 위기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의 지시물이 사회외부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특정한 자기기술이 얼마나 외부세계를 잘 재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또는 외부 대상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라는 ‘진리’에 대한 물음은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지금도 어떤 사회이론은 현대사회를 계급사회로 기술하고, 중국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으로 기술했다. 이것들은 해당 사회가 나름의 고유한 구별을 사용하여 무정형의 세계를 절개(切開)함으로써 얻은 자기관찰과 자기기술인 것이다. 물론 이런 사회의 자기기술은 비판될 수 있고, 거부될 수 있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사회의 구조, 사회체계의 분화형식을 적절하게 기술한다면 보다 더 많은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sup>14</sup>

사실 문제가 되는 사태들은 알고자 하는 사람들 누구라도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저기에서 진리의 형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과학적 자세, 非이데올로기적인 태도, 특수한 이해관계 초월 등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미 인정된 과학 지식이나 참된 정보를 토대로 사람들이 충분히 좋은 조건에서 평의(숙의, deliberation)한다면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생태적 합리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sup>15</sup>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유보적이거나 어떤 정책에 적극적이

14) 루만, 니클라스. 이철 역. 2011. 『사회이론입문』, 이론출판. p400.

15) 숙의는 개인들이 함께하는 토의에서 상호경합하는 논변들의 장점을 진지하게 평가하는 과정인데, 참가자들이 합리적 정보에 접근하고, 논변의 찬반에 관한 실질적 균형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입장들이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대표되고, 참가자들이 논변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논변에 대하여 동등하게 고려하는 좋은 조건과 정보(good condition and information)가 갖추어 진다면 숙의의 질은 보장될 것이다(피시킨, 제임스. 박정원 역. 2020(2009). 『숙의민주주의』, 한국문화사. pp77-78).

지 않다는 것이 그들이 반드시 非과학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이거나, 특정한 이해 관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생태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태도나 도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당 사태는 많은 경우 객관적인 사실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에 의한 사태의 절개의 차이, 즉 관찰자가 사용하는 주도적인 구별의 차이인 것이다. 모든 관찰, 인식, 결정은 언제나 다른 무엇인가를 볼 수 없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대가로 성취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능분화된 현대 사회의 작동이고, 그 작동에 대한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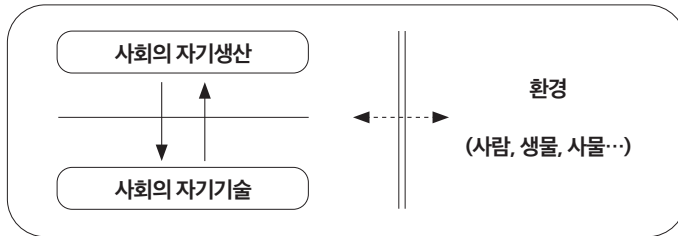
그런데 사회는 사회에 대해서 관찰하고 기술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기 준거적으로 작동하는 커뮤니케이션 체계인 사회에 사회가 도달할 수는 없다. 사회가 스스로를 기술하는 그 순간, 기술되는 체계의 작동이 바뀐다. 바뀐 체계를 기술하는 순간, 그 체계는 다시 다른 체계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녹색전환’,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의 자기기술은 그것이 기술하는 자기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사회체계의 통일성에 대한 상상물이다. 사회의 자기기술은 사회에 대한 기술뿐 아니라 사회가 아닌 것, 즉 환경을 포함하고, 사회와 환경 모두인 세계를 함축하지만, 환경이나 세계가 통일성으로 나타날 수는 없다. 환경은 언제나 미표지의 영역이고, 사회의 자기기술은 언제나 커뮤니케이션이다.

사회적 자기기술의 대상이 되는 생태적 위험은 사람(의 의식체계), 사회(의 체계들)의 환경에서의 생태적 변동이 체계의 작동을 교란시키거나 체계의 존속을 위협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생태적 위험은 리스크와 위험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리스크는 의식체계나(사람), 사회체계(정부, 기업 등)가 불확정적인 미래에 대응해 체계가 내린 결정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체계에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위험은 외부환경이 야기한 손실로서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통제밖에 있는 손실과 연관된다.<sup>16</sup> 그런데 체계가 관찰하고 기술한 생태적 ‘위험’의

---

16) 리스크와 위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박순열, 2020. 위의 글. p80.

평가를 위한 외부의 대상이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그럼에도 사회적 체계들은 법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등은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나름의 합리성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법이나 정치에서 합리성이 경제에서의 합리성과 동일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체계에서도 상이한 자기기술과 상이한 합리성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만약 어떤 자기기술이 체계별로 상이한 복수의 합리성 주장을 거부하고 자신만이 유일한 자기기술이라고 주장하면, 그런 자기기술은 非관용적인 정치적, 종교적 도그마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복수의 사회의 자기기술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낮거나 더 올바른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기술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의 자기기술에 대한 논의는 단일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회의 자기기술이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사회의 환경이 사회가 아닌 모든 것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환경 역시 구체적인 지시물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결코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사회가 한편에 있고, 사회가 아닌 것의 끝없는 지평으로서의 환경이 존재한다. 양편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포착되거나 개념화될 수 없다. 그 양자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초월적인 위치나 관찰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이론은 이 불가능성을 이론적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때로는 은유를 활용하기도 한다. 흔히 은유적 표현은 둘 이상의 대상들 사이의 비교 또는 유사성을 포함하는데, ① 세계는 인간에게 투명하고 진리는 철학적 인식에 의해 파악되기에 은유는 군더더기나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체로서의 은유’, ② 개념으로 확정되지 못한 어떤 사태에 대한 개념 이전의 표현으로서 개념이

확립되면 폐기되는 ‘역사적 잔여물로서의 은유’, 그리고 ③ 인간의식의 한계로 절대로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전체를 표현하는 세계, 신과 같은 ‘절대적 은유’로 나눌 수 있다.<sup>17</sup> 절대적 은유는 현실의 개별적인 사태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의 총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학문들이 아직 혹은 원리적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점유한다. 이 자리는 최초의 출발, 최후의 목적 등과 같이 형이상학이 점유했던 자리이다.<sup>18</sup> 그렇다면 생태적 위험이나 그에 대한 사회의 대처에 대한 은유들, 가령 어머니 지구나 생명의 허파들과 같은 은유는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전히 우리가 그런 은유를 필요로 하는지를 다시 질문해야 한다.

#### 4. 무엇이 어떻게 녹색으로 전환하는가?

녹색전환과 한살림선언을 사회의 자기기술로서 보는 것의 출발점은 기술하는 것, 즉 ‘사회’와 ‘사회가 아닌 것’에 있다. 이 글에서의 사회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와 다르게 커뮤니케이션 체계이다. 그래서 사회는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사회는 자기준거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로서, 분할되지 않은 세계에서 스스로를 환경과 구별하면서 만들어진다. 사회를 자기준거적으로 체계로 보면, 사회는 언제나 스스로 작동하고 스스로 전환한다. 사회는 다른 외부적 힘이나 인간에 의해 조종되지 않는다. 의미를 사용하는 또다른 자기준거적 작동인 사람의 의식이 외부의 힘에 일방적으로 조정되거나 영향받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생태적 위험에 대한 사회의 대처를 논의하는 녹색전환이나 한살림선언에서 전환하는 것 또는 전환되는 것은 무엇인가?

체계로서의 사회 즉, 사회의 기능체계들(정치체계, 경제체계 등)이나 사회조직들(노동조합, 기업 등)은 모두 체계 외부 환경에 종속되어 있다. 사회체계로서의 커

17) 조창오, 2015. “근대와 은유-헤겔과 블루멘베르크의 은유개념.” 『동서철학연구』 76. pp421-447.

18) 최성환, 2008. “블루멘베르크(H. Blumenberg)의 은유의 해석학.” 『철학탐구』 23. pp227-252.

커뮤니케이션의 작동은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최소 두 사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는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환경] → [사람(사람의 유기체 → 신경체계 → 심리체계)] → [사회]라는 형태 속에서 인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외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순전히 체계의 내적 결정이다. 유사한 환경에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고, 그런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 사람과 구별되는 층위에 사회가 작동한다. 심리체계의 의식이나 사회체계의 커뮤니케이션 작동은, 때로는 스스로를 위협에 처하게 하고 결국 파국에 이를지라도, 그것들의 외부환경에 자율적으로, 때로는 외부환경과 무관하게 자기준거적으로 작동한다.

사람의 의식과 사회의 연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의식을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조정할 수 없고, 어떤 개인의 의식변화가 곧바로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회는 언제나 자기준거적 작동이기에, 사회 외부에서 전환시킬 수 없고, 사람들의 의식은 사회의 외부에 존재한다. 녹색전환들이 사회의 전환이라면 사회 스스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녹색전환들이 사회의 생태적 위험과 관련된 어떤 사물들(석탄발전소, 에너지망 등)을 전환시키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자기준거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 사회 등과 같은 외부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전환될 것이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물들, 자기준거적이지 않은 사물들의 전환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적 능력을 사회가 가지고 있는가, 해당 전환에 따른 비용이나 이익을 감당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등이 관건이다. 한살림선언에서 강조하는 생활문화활동, 사회실천활동, 생활수양활동, 생명의 통일활동 역시 마찬가지이다.<sup>19)</sup> 이런 활동을 사람이나 사회가 한다면 언제나 그들 스스로가 자기준거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살림선언에서 그런 활동을 설명하고 강조할지라도 그 활동여부는 결국 사람이나 사회가 자기준거적으로, 외부환경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

19) 한살림모임. 2019. 『한살림선언: 생명의 지평을 바라보면서』. 도서출판한살림. pp97-104.

그러나 석탄발전소의 해체와 같은 사물이나 기계적 체계들의 전환과 그에 대한 결정은 고립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사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물이나 기계적 체계들의 녹색전환은 즉각적으로 사회체계들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됨으로써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가령 석탄발전소의 해체나 기술적 개선과 관련된 과학기술적 조치나 정책적 결정과 같은 일견 단순해 보이는 녹색전환은, 곧바로 해체나 개선에 관계된 법적 적합성과 관련된 법체계의 반응, 그것의 비용에 대한 경제체계의 반응, 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건강피해와 관련된 보건체계의 반응 등으로 사회체계에 나타난다. 사회체계들에서 발견되는 반향, 즉 해당 사안에 대한 개별 체계들의 커뮤니케이션 작동과 그 연쇄는 그것이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체계들의 전환임을 알려준다. 물론 이때 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실체로서의 사물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해당 사회체계의 고유한 의미론적 구성물이다. 이렇게 구성된 것들이 녹색전환과 관련되면, 그때의 녹색전환은 언제나 상이한 사회체계들의 자기준거적인 작동들이고, 그것들 모두를 포괄하는 통일적인 작동이 아니다.

특히 현재 논의되는 대부분의 녹색전환들이 단순한 사물들이나 기계적 체계들의 전환이 아닌 사회(전체)의, 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체계들에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녹색전환은 거의 언제나 자기준거적인 사회체계의 전환이다. 그래서 녹색전환들이 전환하고자, 또는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스스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지 등을 보다 적절하게 기술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만 녹색전환들에서 제기되는 전환과 관련된 많은 쟁점들, 가령 전환의 주체와 대상, 전환의 수준, 규모, (시간적) 범위, 전환의 구조/사건/현상, 전체/부분, 근본적/개량적/현상적, 체계유지/체계이탈적 전환 등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녹색전환들을 사회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전환에 따른 사회(체계들)의 변이/진화/단절-지속을 사회가 어떻게 수용/배제하는가, 전환의 기간이나 변화의 시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전환의 적합성이나 타당성을 어떻게 평

가할 것인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대응하는 외적 지시물이 없는 사회의 전환이라면, 전환을 평가할 수 있는 사실적, 규범적 토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전환 논의들에서 일종의 가치(지향)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생태, 생명, 인간과 자연의 공존 등은 아주 난감한 주제가 된다. 어떤 전환(의 과정, 결과)이 사실의 차원이라면 사회나 사람들은 전환과 관련된 것들을 (사실 차원에서) 학습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이 규범의 차원이라면 사회나 사람들은 해당 규범(가치)을 지키기 위해 사회, 사람, 사태를 바꾸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주 어려운 사안이 된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기능분화된 현대 사회는 사회체계들을 가로질러 공유될 수 있는 규범이나 가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존재하는 규범이나 가치마저도 각각의 사회체계들에 의해서 자기준거적으로 작동되는(해석되는) 것이기에, 전체 사회의 전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규범이나 가치(지향)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특정한 부분체계에서만 나름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회체계를 가로지르는 공통의, 초월적인 가치가 불가능하다는 우리의 통찰은 모든 사회를 관통하는 살림-죽임의 구별이나 ‘한울’을 모시고, 기르고, 체현함(侍天, 養天, 體天)을 강조하는 한살림선언은 어떤 사회체계에서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전체 사회의 측면에서 보자면 생태적 위협에 대한 사회의 대처능력 향상은 규범적 주장이 아닌 그에 대한 사회의 분해능력과 재조합 능력의 향상에 의존한다. 그래서 녹색전환들의 성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명, 환경, 공존 등과 같은 규범적 지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체계로서의 사회가 현대 사회의 기능적 분화의 이점을 유지하면서 생태적 위협이라는 새로운 사태에 적합하게 코드와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회체계들로 적절하게 분화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 5. 관찰하는 사람과 사회에 의존하는 수많은 환경과 자연들

기후위기와 관련된 녹색전환들은 1970년대 이후 논의되어온 일련의 지속가능성 전환들의 연속선에 있다.<sup>20</sup> 이 전환은 주로 사회-기술체계를 중심으로 사회의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인, 생산과 소비양식에서의 변화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근본적인 변화 과정들을 지칭한다. 최근의 녹색전환들은 그것이 논의되는 사회체계들(학문, 사회운동, 정책 등), 가치(지향)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기존 지속가능성 전환의 범위, 폭, 방식 등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주장한다. 녹색전환 논의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의 인용문처럼 표현할 수 있다.

- 녹색전환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문제는...국가의 모든 정책 부문과 시민사회의 전 영역에서 주류화 할 때 해결됨
- 녹색전환은 녹색가치가 주류화되고 내면화된 사회로의 전환
- 녹색전환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사회가 녹색사회
- 녹색가치는 생명가치, 즉 산업적·화폐적 가치가 아닌 인간의 생존을 존중하면서 자연과의 상생관계 속에서 지키고자 하는 생태적 가치
- 녹색가치는 현재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자연·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가치
- 녹색전환은 이런 녹색가치를 전제로 녹색사회를 추동하는 이념이자 전략적 수단<sup>21</sup>

---

20) 지속가능성 전환(sustainability transition)과 그 유사한 개념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김민재·박순열·김지혜·안새롭·구도완. 2018. “지속가능성 전환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정책 평가: ‘공유도시’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ECO』 22(2). pp7-40. /구도완. 2020. “2장 녹색전환 이론과 체계의 전환.” 『녹색전환: 지속가능한 생태 사회를 위한 가치와 전략』. 한울아카데미.

지속가능성 전환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과 이론들은 상당히 논쟁거리인데, 여기에는 사회, 자연, 사회-기술체계, 지속가능성, 정치,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지칭하기도 한다.

21) 환경부 엮음. 2020. 위의 책. p11. 중 필자 일부 수정

이런 녹색전환에서 주요하게 반복되는 어휘는 기후위기, 인류세, 행성적 위기, 지속가능성, 생태적 한계, 미래세대, 생명, 인류, 지속불가능성, 인간-자연관계, 사회-자연관계 등이다. 또한 녹색전환을 실현하는 전략이나 방법 등에서는 환경국가, 녹색국가, 환경공공재, 생태적합리성, 생태민주주의, 그린뉴딜, 사회적 정의, 세대간 정의 등이 강조된다.<sup>22</sup>

한살림선언의 경우에는 20세기 후반의 산업문명이 모든 인류와 생명의 파멸을 의미할 수 있는 위기, 핵위협과 공포, 자연환경의 파괴, 자원고갈과 인구폭발, 문명병의 만연과 정신분열적 사회현상,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악순환, 중앙집권화된 기술관료제에 의한 통제와 지배, 낡은 기계론적 세계관의 위기의 증후로 나타나고 있다. 이 위기의 밑바탕에 있는 세계관, 가치체계, 문화모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평가<sup>23</sup>를 토대로, 우주, 지구생태계, 자연, 인간, 비인간생물과 사물을 관통하는 생명-죽임을 한울(님)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위의 논의들을 생태적 위험에 처한 사회의 자기기술로서 관찰하면, 그 출발점은 자기기술하는 사회, 그리고 사회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자연, 사회-자연 형태로 기술된다. 대부분의 녹색전환들에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과 환경의 차이는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그것들을 존재론적으로 구분되는 실체로 가정하고 있다. 또한 녹색전환에서는 인간, 사회, 국가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로, 또는 사회의 변화가 사람들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가정한다. 그러나 많은 사회과학적 연구는 동일한 국가, 사회, 집단 내에서도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이 상이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개개인의 태도와 행동이 국가, 사회, 집단의 정책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더욱 결정적으로는 ‘사회’를 다루는 녹색전환들에서 사회가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바로 그 녹색전환들 속에서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스스로 녹색전환하는 것

---

22) 녹색전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환경부 엮음(2020) 참조.

23) 한살림모임. 2019. 위의 책. pp18-23.

과 타자를 녹색전환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관되게 규명하거나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 사회, 조직, 사람들이 어떤 때는 스스로 전환할 수 있는 자기준거적인 것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기후운동이나 정치적 결정 등 외부 작용에 의해 타율적으로 전환되는, 전혀 자기준거적이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자기준거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스스로에 의해서만 전환될 수 있고, 기계와 같은 타율적인 체계들은 언제나 외적 요인에 의해서 전환될 수 있다. 국가, 사회, 조직이 스스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외부에서 전환시킬 수 없고, 외부에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라면 국가, 사회, 조직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새로운 생명의 이념과 활동인 한살림”의 이념은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각성,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으로 구체화되고, 활동은 새로운 인식, 가치, 양식을 지향하는 ‘생활문화활동’, 생명의 질서를 실현하는 ‘사회실천활동’, 자기실현을 위한 ‘생활수양활동,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생명의 통일활동’으로 구체화된다.<sup>24</sup> 그렇다면 이념과 활동을 구현하는 것은 사람인가, 사회인가라는 문제가 녹색전환과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다. 자기준거적인 의식을 지닌 사람이나 자기준거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인 사회가 바뀌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언제나 스스로 바뀌지 외부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한살림선언을 포함한 일련의 커뮤니케이션은 의식을 지닌 사람이나 기능분화된 사회체계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한살림선언을 읽는 사람의 반응은 제각각이고, 그에 대한 사회체계의 반응 또한 서로 다를 것이다. 한살림선언은 사람의 의식체계에게는 언제나 외적 환경이고 그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의식체계의 자기준거적 작동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살림선언이 생명(체)의 자율성을 강조함에 불구하고,<sup>25</sup> 그 자율성이 사람의 의식, 사회의 자율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살림선언의 구체적인 제안이 자기준거적인 의식체계를 지닌 사람의 자율적인 작

24) 위의 책. pp91-107.

25) 위의 책. pp46-53.

동이나 자기준거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인 사회체계들의 자율적인 작동에 부합하는 형태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준거적인 체계들의 복합물인 사람, 그리고 자기준거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인 사회에 대한 불명료한 구분은 그것들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자연, 환경과의 구별에서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환경은 그것과 구분해 존재하는 어떤 체계(사람의 경우에는 주체)를 전제하는 개념이기에, 언제나 체계(주체)-의존적 개념이다. 체계-의존적이기에 모든 체계들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환경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하고, 공통의 또는 공유된 환경문제나 그런 문제의 해결은 극도로 제한적이다. 자연 역시 그 기원인 17세기 유럽에서부터 언제나 무엇이 아닌 것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인간이 아닌, 신의 의지를 구현하지 않은, 인위적이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훼손되지 않은, 생명을 파괴하지 않는 등 언제나 ‘무엇이 아닌 것’이었는데, 녹색전환들에서는 대조할 수 있는 지시물이 사라지고 실체화됨으로써 아무것도 지시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대조할 수 있는 지시물이 없는 상태로 실체화된 자연을 실체로서 접근하는 순간 그 실체의 기반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런 실체로서의 자연에 기반한 생태/환경주의(운동), 녹색전환들은 논리적, 이론적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할 수도 없다.

이는 한살림선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환경파괴가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데,<sup>26</sup> 이때 자연은 “생명을 양육하는 모성으로서의 자연”<sup>27</sup>이거나 “환경, 즉 생태계”<sup>28</sup>로 구별되거나 그냥 자연환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모든 생명은 환경과 협동하여 공진화하면서 우주의 궁극적 생명으로 합일되어 나아가는 것”<sup>29</sup>으로 주장되지만, 생명의 ‘협동’, ‘공진화’, ‘합일’은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

26) 위의 책, p85.

27) 위의 책, p36.

28) 위의 책, p41.

29) 위의 책, p46.

관찰하는 관찰자, 즉 한살림선언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은 ‘자연’이 등장하는 맥락에서 자연이 무엇이 아닌 것으로 등장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하고, 그 무엇과 무엇이 아닌 것의 관계가 현재의 맥락에서 어떻게 의미를 갖는지, 또한 동시에 어떤 체계에 의해서 그 지시와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질문해야 한다.

무엇이 아닌 것으로서의 자연이나, 체계-의존적인 환경은 관찰하거나 작동하는 것이 유기체의 생명인가, 심리체계의 의식인가, 아니면 사회체계의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무엇이나에 따라 언제나 달라진다. 생명, 의식, 사회체계들은 어떤 경우에도 나머지 모든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초월적이거나 특권적인 위치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서로에게 언제나 도달할 수 없는 외부이기 때문이다. 결국 무엇이 아닌 것으로서의 자연이나 어떤 것이 아닌 것의 총체로서의 환경은 생명, 의식, 사회체계의 수만큼 많아진다. 그리고 어떤 것도 다른 것의 관찰과 작동에 대해서 우월함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수십억 의식체계들의 자연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회’의 작동과 관찰의 측면에서 녹색전환들을 기술한다면, 그 사회의 환경, 사회의 생태적 위험은 보다 분명해진다. 물론 현대사회는 분화형태에 따라서, 즉 기능적 분화, 위계적 분화, 중심-주변 분화 등에 따라 주도적인 사회체계들, 사회조직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들이 달라진다. 따라서 녹색전환들은 이런 사회체계들, 사회조직들, 사회적 상호작용들에 따라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다시 관찰할 수 있다. 사회의 체계, 조직, 그리고 상호작용이 다른 것들과 독립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나머지 것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작동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녹색전환들은 각각의 고유한 작동양식에 따라서 처리된다.

한살림선언의 ‘생명’의 의식과 실천 역시 관련된 사람들이나 사회체계들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자기준거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사회]-[자연/환경] 관계의 재구성에서 관건은 어떤 일반적, 초월적, 보편적 관찰이나 주장을 찾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인간, 어떤 사회체계가 어떤 맥락에

서 무엇이 아닌 것으로 자연을 개념화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기준거적 작동에 의해서 환경과 스스로를 구분하고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자연은, 환경은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회체계에 동일하면서도 올바르게 과학적인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 나머지 것들과 구별되어 저기 자연이나 환경 속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다. 자연과 환경은 언제나 관찰에 의존하고, 개별(의식/사회) 체계의 관찰들을 아우를 수 있는 초월적, 통합적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인간-자연 관계나 사회-환경관계에 통용될 수 있는 통합적, 일반적 주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사회체계들, 사회조직들, 사회적 상호작용들이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는 것은 그것들 각각이 고유한 방식으로 녹색전환과 관련된 정의, 공정함, 평등, 민주주의 등과 같은 사회적·규범적 가치들을 자기준거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체계에서의 정의나 평등이 정치체계나 교육체계에서의 정의나 평등과 같을 수 없다. 비록 그것들이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더라도 그 어휘들은 언제나 체계 고유의, 그 체계를 다른 체계와 구별시키는 고유한 작동원리에 접합되었기에 다를 수밖에 없다. 가령,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어휘는 언제나 누구의, 어떤 체계의 관찰인가하는 이차관찰에 의해서만 그 ‘정의’의 의미가 분명해진다.<sup>30</sup> (비)노동조합원, 기업, 산별노조, 노동계, 자본주의, 경제체계처럼 어떤 사회조직, 어떤 사회체계에서 무엇을 대가로 한, 누구 또는 무엇과의 정의인가가 언제나 쟁점이 되고, 상이한 모든 체계들에서 수용되는 공통의 정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

30)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홍덕화. 2020. “9장 기후정의와 전환담론의 급진화.” 『생명자유공동체 새로운 시대의 질문』. 도서출판 풀씨.

## 6. 또다른 사람들과 사회체계들의 발견, 그리고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녹색전환이나 한살림선언은 [인간/사회/문화]-[자연/환경/생태]라는 구별도식을 이용하여 현대사회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같은 생태적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그것은 구별의 상호연관과 호혜성을 강조함으로써 일방적인 인간/사회/문화 중심적인 도식을 넘어서고자 한다. 그러나 여전히 구별의 두 면에 대해서, 구별하는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가 아는 어떤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실체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런 실체주의적 접근은 우리의 관심이 되는 ‘사회’의 환경과 사회의 ‘생태학적 조건’을 구별하고, 현대의 사회체계들이 환경에 의존하지만 동시에 자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오늘날의 인류를 가능하게 한 기능분화된 현대사회라는 성취물은 외적환경에 대한 적응이 아니라 외적환경에 대한 작동상 폐쇄와 바로 그 환경으로부터의 이탈, 그리고 폐쇄와 이탈을 통한 체계의 자유증진에 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sup>31)</sup> 따라서 사회에 의한 생태적 위험야기와 그에 대한 대처능력의 향상이라는 모순은 현대사회의 사회체계들이 고유한 기능에 따라 자기준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이다. 과학체계, 경제체계, 정치체계 등의 고유한 작동은 다른 체계들의 작동과 환경을 외적 환경으로 다룬다. 이 때문에 개별 체계들은 언제든지 다른 체계들과 외적 환경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그런 체계들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자기준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고도의 분해능력과 재조합능력의 향상을 통해 위험한 사태에 대처하는 사회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 코로나19 사태(발병, 확산, 통제의 어려움)는 과학, 산업, 정치 등의 사회체계들의 기능분화에 따른 것이

---

31) 루만, 니클라스. 서영조 역. 2014(2008). 『생태적 커뮤니케이션』. 에코리브르, pp161-163.

고, 코로나19 사태의 해결 역시 기능분화된 과학과 산업에서의 대처능력의 향상에 달려있다. 지금처럼 빠른 백신의 개발, 생산, 접종은 과학과 의료산업 등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자기준거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적 위험에 대한 사회와 사람들의 대처는 사람, 사회, 그리고 사람이나 사회의 환경, 수많은 사물들과 비인간 생물종 등을 포함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기술(記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인식과 기술은 사회·인구학적 구별을 넘어서 모든 한국 사람을, 지금 살아있고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을 위한 어떤 보편적인 생명가치를 지향한다고 주장하거나, 그것들 모두에 공통된 생명원리가 있다는 주장과 양립할 수 없다. 사람마다 다른 환경, 사회체계들마다 다른 환경이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그것이 자기준거적인 생명의 작동을 지속하는 한, 각기 고유한 환경을 갖고 그 환경에 맞서 작동한다. 인간 또는 또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자가 나머지 모든 생명체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구현하거나, 그것들 모두를 아우르는 공통의 가치를 주장할 수 없다. 생태적 위험에 처한 사회는 초월적 관찰자로서 보편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찾고 구현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위험하다. 사회는 자기(自己)와 자기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생태적 위험을 다루는 자기(自己)가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체계들임을 관찰하고, 그에 부합하게 기술(記述)해야 한다. 그런 관찰과 기술(記述)만이 생명을, 살림을, 녹색전환을 보다 중요하게 관찰하는 또다른 사회체계들과 사람들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런 연결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이 어찌면 녹색전환과 ‘살림’일 수 있다.





시선 —

코로나 시대를 보는 다른 시선



# ‘바이러스와의 전쟁’

은유의 의미와  
한계

# ‘바이러스와의 전쟁’ 은유의 의미와 한계

김훈기 (홍익대 교양과)

● ●

스스로 ‘과학기술 커뮤니케이터’라고 생각하면서 주로 생물공학계의 성과를 인문사회학과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고민하며 집필하고 있다. 과학저널리즘 분야에서 13년간 활동했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교양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합성생명-창조주가 된 인간과 불확실한 미래』,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바이오해커가 온다』, 『현대과학이 추적해온 인체의 비밀 통로』 등이 있다. wolfkim8@gmail.com

\* 이 글은 필자의 논문(김훈기, 2021. “‘바이러스와의 전쟁’ 은유의 의미와 한계.” 『수사학』 40, pp29-61.)을 요약해 정리한 것임.

## 전쟁 은유의 폐해

“저 따위 군사적인 은유는 전쟁광에게나 돌려줘라.”

국내에서 출간된 『은유로서의 질병』의 저자 손택(1933-2004)이 책 마무리 부분에서 던진 인상적인 한 마디이다.<sup>1</sup> 미국에서 문필가이자 사회운동가로 유명한 그녀는 자신이 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한 경험을 살려 두 권의 책을 집필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질병과 환자에 적용되어 온 ‘전쟁 은유’의 문제에 대한 것이 책의 내용이다. 손택의 주장은 현재 코로나19 환자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 보고된 이래 최근까지 ‘코로나19’라 불리는 중증급성호흡기 질환에 걸린 환자의 수는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질환의 이름을 ‘COVID-19’라 공표했는데, 이는 ‘2019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는 의미였다. 당시 바이러스의 이름은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ICTV)에 의해 ‘SARS-CoV-2’라 정해졌으며, 그 뜻은 2002년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병원체인 코로나바이러스의 두 번째 유형’이었다. 국내 질병관리청은 COVID-19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간단히 ‘코로나19’라 부르기로 정했다.

최근까지 코로나19 사태의 실질적인 해결책으로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과학기술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활발하게 진행돼 왔지만, 한편에서는 바이러스 질병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도출되기 시작했다. 특히 국가나 대중매체가 흔히 ‘전쟁의 은유’를 사용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수사학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바로 손택의 문제의식과 같은 의미에서였다.

---

1) 손택, 수전. 이재원 역. 2002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은유는 인간의 일상이나 학문 분야에서 새롭게 정의하려는 개념(목표영역)을 과거에 이미 정립된 개념(정보영역)과 연결해 표현하는 수사학적 도구이다.<sup>2</sup> 두 영역 각각에 내포된 고유 속성들의 유사성을 통해 사상(mapping)이 이뤄지며, 일반적으로 정보영역은 목표영역에 비해 더욱 구체적으로 실감나는 개념이 자리한다. 가령 ‘논쟁은 전쟁’ 은유는 정보영역(전쟁)의 관점에서 목표영역(논쟁)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한다.

문제는 전쟁의 은유가 과도한 공포감을 조장하면서 국가의 효율적 통제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실현을 위해 부당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가령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 이후 각국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강력한 규제책을 신속하게 시행해 왔다.<sup>3</sup>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군’은 바이러스, 전장의 최전선에 서있는 ‘아군’은 의료계 종사자와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환자, 그리고 전쟁을 지원하는 ‘후방근무자’는 일반 시민으로 설정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구호가 공통으로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정보수집, 공개, 이동제한 등과 같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이슈들은 ‘전시’임을 이유로 좀처럼 사회적 논제가 되기 어려워지며, 은유가 반복될수록 이 같은 상황은 아예 사회규범으로 정착될 수 있다. 전쟁의 은유는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침투’했다거나 중국인이 ‘공격’했다는 식으로 줄곧 주장하면서 자신의 방역실패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sup>4</sup> 그 결과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 의식이 형성되기도 했다.

전쟁의 은유는 특히 환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환자는 자신의 몸속

2) 레이코프, 존슨. 노양진·나익주 역. 2006. 『삶의로서의 은유』. 박이정. pp22-25.

3) Gillis, Matilda. 2020. “Ventilators, Missiles, Doctors, Troops-The Justification of Legislative Responses to COVID-19 through Military Metaphors.” *Law and Humanities* 14.

4) Bates, Benjamin R. 2020. “The (In)Appropriateness of the WAR Metaphor in Response to SARS-CoV-2: A Rapid Analysis of Donald J. Trump’s Rhetoric.” *Frontier in Communication* 3.

으로 침투한 바이러스와 용감하게 싸워 승리해야 한다. 만일 질병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환자는 적에게 패배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여겨지고, 본인은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고립감으로 인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질병으로 심한 물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얻게 된다는 의미이다.

전쟁의 은유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는 논자들은 대체로 앞으로는 평화나 공존의 은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쟁의 은유로 인해 국민이나 환자에게 닥치는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런데 최근까지 전쟁의 은유에 대한 논의 내용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을 포함한 모든 질병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보다는 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춰, 전쟁의 은유가 과연 바이러스 감염의 상황에 적용되기에 타당한 것인지, 즉 어떤 유사성을 바탕으로 은유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바이러스학계에서 그동안 보고되어 온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전쟁 은유의 발생이 바이러스학 자체의 특성에서 도출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코로나19를 비롯해 각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적용되는 전쟁 은유의 의미와 한계를 좀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바이러스 정체는 분자 기생체

바이러스에 적용되고 있는 전쟁의 은유에는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병원체라는 인식이 전제돼 있다. 그런데 병원체가 전쟁의 은유로 묘사된 것은 19세기 무렵 질병의 원인으로 바이러스에 앞서 미생물의 존재가 처음 확인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독일의 피르호와 코흐, 그리고 프랑스의 파스퇴르의 업적에 따라 결핵이나 콜레라 같은 질병은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우리 몸의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서 미생물은 하나의

세포로 이뤄진 박테리아(bacteria)로 불렸는데, 그 단수형인 박테리움(bacterium)은 ‘하나의 생물(single organism)’을 의미한다. 즉 박테리아는 광학현미경으로나 관찰되는 작은 존재이긴 하지만 동물이나 식물처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번식과 대사 작용을 수행하는 생물이다. 박테리아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의학계를 중심으로 질병은 몸의 외부조직이 침략한 결과물이며, 몸은 군사작전처럼 면역적 방어기제를 동원하는 것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이후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질병에 대한 군사용어의 사용은 사회적으로 더욱 빈번해졌다.

그러나 박테리아와 달리 바이러스는 발견 당시부터 생물로 인식되지 않았다.<sup>5</sup> 그 핵심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유전자(DNA 또는 RNA)와 이를 둘러싼 단백질로 구성된다. 숙주 세포 안에서 세포의 대사물질을 이용해 증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전자의 빈번한 돌연변이를 통해 변화(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세포 바깥에서는 아무런 활동이 없어 물질입자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며, “분자 기생체” 정도로 부를 수 있다.<sup>6</sup>

이 같은 특성을 염두에 두고 전쟁의 은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바이러스 질병이 특정 지역에 돌발적으로 발생할 때 ‘아웃브레이크’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는데, 이는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다. 지구에 인간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현재 우리의 몸 속을 비롯해 주변 어디에나 있다. 또한 그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하다.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세포 안으로 들어와 세포의 기능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전쟁의 은유에 따르면, 적군이

5) Lustig, Alice and Arno J. Levine. 1992. “One Hundred Years of Virology.” *Journal of Virology* 66(8): pp4629-4630.

6) Moreira, D. and López-García, P. 2009. “Ten Reasons to Exclude Viruses from the Tree of Life.” *Nature Reviews Microbiology* 7: pp306-307.

아군 진영의 빈틈을 찾아 쳐들어오는 장면이 연상된다. 실제로는 바이러스 표면의 특정 단백질이 세포 표면의 특정 단백질(수용체)과 적절하게 맞물리면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다. 이 유전자는 세포의 대사기구를 이용해 계속 복제되는 한편 껍데기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만들어 증식하면서 세포 밖으로 나간다. 이들 단백질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다면 바이러스는 세포 바깥에서 물질 입자로 존재할 뿐이다. 세포 주변의 많은 바이러스 가운데 세포의 수용체와 맞물려지는 단백질을 가진 바이러스만이 세포를 감염시키는 것이므로, 의도적인 공격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 자체가 임상적 증상이 드러나는 질병의 발생을 곧바로 의미하지 않는다. 가령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할 때는 일부 세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 해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겨울에 체온이 떨어져 면역력이 감소하면 감염 세포의 수가 늘면서 독감 증상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바이러스 보유자, 즉 감염된 세포를 가진 사람의 경우 바이러스는 몸에 ‘잠복’하고 있다가 반드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손택은 서구 사회에서 오랫동안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 자체가 에이즈 발병으로 오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sup>7)</sup> HIV는 인체 면역세포의 일종(T 세포)을 감염시키는데, 임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수의 T세포가 줄어들었는지에 따라 발병 여부를 결정하며 실제로 발병까지의 기간은 10여 년에 달한다. 즉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도 감염세포의 수는 얼마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잠복’한 적군이 마치 동물이나 식물처럼 항상 연속적으로 ‘자란다’ 또는 ‘발달한다’는 식의 은유적 표현이 의학계에서 사용돼 온 탓에 바이러스 보유자는 언젠가 반드시 발병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됐다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종종 우리 몸의 면역작용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흔히 변종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상

---

7) 손택, 수전. 2002. 위의 책. pp155-161.

황에서 쓰이는 표현이다. 하지만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의 변이 현상은 무작위로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sup>8)</sup> 예를 들어 HIV는 유전자로 RNA를 갖고 있으며, 세포 안에서 DNA로 바뀌어 다시 RNA를 만들고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는 매우 많이 발생하는데, ‘잠복기’인 10년 동안을 따져보면 인간이 수백만 년에 걸쳐 겪을 규모의 돌연변이이다. 그 결과 개발된 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단백질을 가진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의미는 적군을 ‘무력화’하거나 ‘사멸’시키는 일이다. 의료계에서 개발해온 백신과 치료제의 기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로 완전히 예방되거나 사라질 수 없다. 먼저 백신은 세포 수용체 단백질과 맞물리는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 부위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바이러스 유전자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 해도, 많은 수의 바이러스는 여전히 세포 주변에 존재한다. 한편 치료제의 역할은 주로 바이러스 유전자가 증식하는데 이용하던 세포 대사기구의 활동을 막는 일이다. 즉 항바이러스제는 감염된 세포를 대상으로 일부 기능의 작동을 방해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바이러스의 ‘사멸’은 바이러스가 존재는 하되 더 이상 증식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킨다.

## 생물처럼 분류하다

바이러스를 동물, 식물, 박테리아 등과 달리 살아있는 존재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은 학계에서 이미 공인된 바였다. 하지만 전쟁의 은유에서처럼 살아있는 존재로 줄곧 묘사돼 온 연원은 학계 자체가 바이러스를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해온 데서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바이러스 학자들은 독자에게 연구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

8) Van Regenmorte, Marc H. V. 2016. “The Metaphor That Viruses Are Living Is Alive and Well, but It Is No More Than A Metaphor.”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s* 59: p122.

의인화된 은유적 표현을 활발히 사용해 왔다. 하지만 좀더 근원적으로는 바이러스를 분류하고 명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생물’ 세계에 적용돼 온 체계를 따르려 했던 시점부터 바이러스가 살아있다는 의미를 이미 상정해버렸다.

19세기 말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숙주에서 많은 질병을 일으킨 바이러스의 종류가 계속 보고되면서 학계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 공통의 체계적인 분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됐다. 그 결과 1966년 옛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9차 국제미생물학회 총회에서 바이러스의 보편적 분류와 명명 체계를 확립해나갈 주체로 국제바이러스명명위원회(ICNV)의 설립이 결정됐다. 당시 학계에서 생물의 분류와 명명은 스웨덴 식물학자 린네의 제안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린네는 생물을 크게 식물계와 동물계로 구분하고, 제각기 유사한 형질을 바탕으로 생물 개체마다 ‘계-문-강-목-과-속-종’의 계통에 맞춰 분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생물을 학술적으로 명명할 때는 속명과 종명 순으로 나열하고, 속명은 대문자, 종명은 소문자로 시작하며 둘 다 라틴어를 사용하고 이탤릭체로 표기하자는 요지의 이명법을 주창했다. 이후 생물학계에서는 지구 생명체 전반의 진화양상을 서로 연관시켜 파악하기 위해 소위 ‘생명의 나무’라는 시각적 은유 개념을 설정하고 그 내에 각종 생물의 종류를 자리매겨 왔다. 최근까지 ‘계’의 상위 개념인 세 가지 ‘영역(domain)’으로 박테리아, 고세균, 진핵생물이 설정돼 왔으며, 모두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기에 당연히 ‘생명의 나무’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ICNV는 기존의 동물, 식물, 박테리아 등과는 다른 바이러스 고유의 분류와 명명 방식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바이러스의 계통체계와 명명의 틀은 린네의 제안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동의했다.<sup>9)</sup> 즉 당시 학계는 ‘생명의 나무’ 체계 자체를 전제로 전체 틀을 먼저 설정한 후 여기에 맞춰 바이러스의 분류와 명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바이러스의 분류특성(목표영역)과 기존 생물의 분류특성(정보영역)을 비교해 검토한 후 그 유사성을 바

---

9) Adams, Michael J. et. al. 2017. “50 Years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Taxonomy of Viruses: Progress and Prospects.” *Archives of Virology* 162: p1442.

탕으로 계통분류의 틀을 정립한 것이 아니었다.

가장 개념설정이 곤란한 상황은 최하위 단계인 ‘종’에서 벌어졌다. 원래 종은 린네 방식의 동물과 식물 구분에 적용된 개념으로, 대체로 ‘교배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비슷한 형질의 무리’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물론 주로 이분법으로 증식하는 박테리아의 경우에도 이 같은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sup>10</sup> 그래서 연구자들은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종을 분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종의 개념은 메타게놈 연구로 인해 한계를 드러냈다. 흔히 메타게놈은 실험실에서 잘 배양되지 않는 박테리아를 분류하기 위해 특정 지역 현장에서 샘플을 한꺼번에 채취해 통째로 분석한 유전체의 총합을 의미한다. 메타게놈 분석이 점차 바이러스에도 적용되면서 바이러스 유전체에 대한 정보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분류기준으로 삼아야 할 염기서열의 종류 역시 급속히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한 해양메타게놈 프로젝트에서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약 5,500 종류의 바이러스 집단이 분류됐는데, 이 가운데 ICTV의 ‘종’에 속하는 종류는 39가지에 불과했다.

한편 종의 이름을 학술적으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즉 학명 표기의 문제에 대해 ICTV는 초창기부터 린네의 이명법 방식을 권장하되 강제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바이러스의 학명은 너무나 제각기 표기되어 와, 급기야 최근에는 표준화된 명명 형식을 뒤늦었지만 정립하자는 제안이 공식적으로 도출되기에 이르렀다. <표 1>에서 나타나듯, 바이러스 ‘종’에 대한 그간의 명명은 표준화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것이었다.

**<표 1> 바이러스 종명의 다양한 형태<sup>11</sup>**

| 종의 학명                     | 명명 형식              |
|---------------------------|--------------------|
| <i>Drosophila X virus</i> | 숙주 속명 + 알파벳 + 바이러스 |

10) Hull, Roger and Bert Rima. 2020. “Virus Taxonomy and Classification: Naming of Virus Species.” *Archives of Virology* 165: p2734.

11) Siddell, Stuart G. et. al. 2020. “Binomial Nomenclature for Virus Species: A Consultation.” *Archives of Virology* 165: p521에 나온 표를 축약 재정리.

|                                                |                           |
|------------------------------------------------|---------------------------|
| <i>Cafeteria roenbergensis virus</i>           | 숙주 종명 + 바이러스              |
| <i>Rhizosolenia setigera RNA virus 01</i>      | 숙주 종명 + 유전자종류 + 바이러스 + 숫자 |
| <i>Rosellinia necatrix quadrivirus 1</i>       | 숙주 종명 + 속명 + 숫자           |
| <i>Alfalfa mosaic virus</i>                    | 숙주 일반명 + 증상 + 바이러스        |
| <i>Potato virus X</i>                          | 숙주 일반명 + 바이러스 + 알파벳       |
| <i>Tomato spotted wilt tospovirus</i>          | 숙주 일반명 + 증상 + 속명          |
| <i>Human mastadenovirus C</i>                  | 숙주 일반명 + 속명 + 알파벳         |
| <i>Alphacoronavirus 1</i>                      | 속명 + 숫자                   |
| <i>Lassa marmarenavirus</i>                    | 발생장소 + 속명                 |
| <i>Senegalvirus marseillevirus</i>             | 발생장소바이러스 + 속명             |
| <i>Sapporo virus</i>                           | 발생장소 + 바이러스               |
| <i>Tomato yellow leaf curl Indonesia virus</i> | 질병명 + 발생장소+ 바이러스          |

## 질병 이름과 바이러스 이름의 분리

일반인의 경우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는 ‘종’의 학명보다 주로 WHO가 제시해온 질병의 명칭을 통해 전달된다. 바이러스 이름은 진단테스트,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의 연구를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주로 유전적 구성을 반영해 정해진다. 이에 비해 질병 이름은 세계적인 대비, 즉 질병의 전염성과 중증도 등을 고려한 예방과 확산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해진다. 따라서 ICTV에 비해 WHO는 질병의 특성과 함께 일반인의 다양한 반응을 고려하며 질병 이름을 선정하려 했고, 그 결과 코로나19의 경우 이전과 달리 질병 이름에 ICTV가 제시한 바이러스 이름을 직접 반영하지 않았다.

ICTV는 2020년 2월 11일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새로운 바이러스의 이름을 ‘SARS-CoV-2’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종의 학명이며, 질병 ‘SARS’를 일으키는 ‘두 번째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뜻이다(<표 2> 참조).

<표 2> ICTV의 ‘종’ 이름과 WHO의 질병 이름 비교

| 종의 학명                                                                      | 질병명                                  | 발생년도      | 질병명의 내용          |
|----------------------------------------------------------------------------|--------------------------------------|-----------|------------------|
| <i>SARS-CoV(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related CoronaVirus)</i>     | SARS                                 | 2002-2003 | 증상               |
| <i>MERS-CoV(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related CoronaVirus)</i>      | MERS                                 | 2012-2013 | 발생장소와 증상         |
| <i>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related CoronaVirus-2)</i> | COVID-19<br>(CoronaVirus Disease-19) | 2019-     | 바이러스 정보와<br>발생년도 |

2002년 11월 중국 광둥 지역에서 특이한 폐렴 증상을 보인 첫 환자가 발견됐다. 심각한 급성 호흡곤란 증세와 함께 폐에서 염증까지 발생했다. 환자의 검체를 확인한 결과 병원체는 코로나 계열의 새로운 바이러스였다. 여기서 ‘코로나’는 표면에 돌출된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습이 왕관(corona)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계통적으로는 코로나비리데 ‘과’로 분류된 바이러스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특징이다. 당시까지 이 ‘과’에 속하는 코로나계열 바이러스는 인간의 경우 4종류가 알려져 있었으며, 모두 코나 목 같은 상기도 세포를 감염시켜 일상적인 가벼운 감기를 일으킬 뿐이었다. 하지만 2002년의 경우 바이러스는 기관지와 폐 부위인 하기도에서도 검출됐고 허파파리에서 염증이 발생했다는 점이 새로웠다. 당시 WHO는 이 같은 증세를 표현한 질병명 SARS를 제시했고, ICTV는 초창기에 2002년 발견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의미에서 2002-nCoV로 임시명을 부여했다가 이후에는 WHO의 질병명에 ‘SARS와 관련된(related) 바이러스’라는 의미와 CoV를 연결해 명명했다.<sup>12</sup>

이후 2012년 또 한 차례의 비슷한 질병이 중동 지역에서 발생했다. 환자들은 급성 호흡곤란과 폐렴 증세뿐 아니라 신부전증과 위장계 이상 증세까지 보였

12) CSG-ICTV. 2020. “The Specie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related Coronavirus: Classifying 2019-nCoV and Naming it SARS-CoV-2.” *Nature Microbiology* 5(4).

다. 발견 초기 당시 ICTV는 원인 바이러스가 코로나계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2012-nCoV'라 부르다가 유전자 염기서열과 세포 수용체 검사를 통해 SARS-CoV 처럼 베타코로나바이러스 '속'에 포함되는 새로운 '종'이라고 분류하고 발생지역 (Middle East) 정보를 담아 MERS-CoV라 학명을 정했다.<sup>13</sup>

WHO는 ICTV의 명칭을 반영해 질병명을 MERS로 공표했다. 하지만 당시 WHO에서는 질병의 이름에 특정 지역을 표현하는 일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 마치 중동 국가의 국민들이 새로운 질병을 일으킨 원인인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전쟁의 은유에 따른다면 중동 거주민들은 각국을 '침투'한 물리쳐야 할 '적군'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WHO는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당장은 ICTV의 명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sup>14</sup>

이후 WHO는 질병 명칭으로 인한 근거 없는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2015년 새로운 질병에 대한 공식 권고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요지는 질병 명칭에 특정 지역, 인간 및 동물, 직업 등의 이름을 포함함으로써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사회적으로 부당한 낙인을 찍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부적절하게 지정된 질병명은 실제로 교역, 여행, 관광, 동물복지 등의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권고안에서 부적절한 지역명이 사용된 예시에는 MERS가 포함돼 있었다.

2020년 2월 11일 WHO가 제시한 COVID-19라는 명칭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당일 ICTV는 원인 바이러스의 이름을 SARS-CoV-2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ICTV는 새로운 질병이 급성 호흡곤란과 폐렴 증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SARS 및 MERS와 유사하지만, 세포 수용체가 ACE2라는 점에서 MERS와 다르고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염기서열에서 일부 돌연변이가 있다는 점 등에서 사스와 약간 다르다고 판단해 명칭을 부여했다. 하지만 WHO는 당일 이 명칭

---

13) De Groot, Raoul J. et. al. 2013.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Announcement of the Coronavirus Study Group." *Journal of Virology* 87(14).

14) WHO. 2013. "Naming of the Novel Coronavirus." [who.int/NamingCoV\\_28May13.pdf](#).

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SARS는 과거 발생 지역인 아시아 국가들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WHO는 ICTV에게 대중과의 소통에서는 COVID-19를 넣은 바이러스 명칭('the Covid-19 virus' 또는 'the virus responsible for COVID-19')을 요청했지만, ICTV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WHO는 ICTV의 '과학적' 접근을 존중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SARS 및 MERS 경우와는 달리 바이러스 이름을 질병명에는 직접 표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그 결과 초창기 세계의 많은 언론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중국 우한 바이러스'라는 명칭은 일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용을 제외하곤 거의 사라지게 됐다.<sup>15</sup>

## 평화와 공존의 은유를 향하여

19세기 말 존재가 처음 확인된 이후 최근까지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독특한 위상의 기생성 병원체로서 늘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돼 왔다. 그 동기의 정치성 여부를 떠나 바이러스가 인류가 물리쳐야 할 '적군'으로 여겨진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 분포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체는 물론 동식물과 박테리아 등의 세포 내에서 증식하며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와는 다른 특성을 끊임없이 갖춰오고 있었고, 지구에서 생물(숙주)이 모두 사멸할 때까지 이 과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쟁의 은유는 마치 적군이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며 갑작스럽게 인류를 습격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일상의 통제가 별다른 사회적 저항 없이 정당화되는 전시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 또한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은 종종 이들에 감염된 인간과의 싸움으로 인식될 수 있

---

15) Prieto-Ramos, Fernando et. al. 2020. "Institutional and News Media Denominations of COVID-19 and Its Causative Virus: Between Naming Policies and Naming Politics." *Discourse & Communication* 14(6).

다. 마치 마약이나 가난과의 전쟁이 결국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과의 전쟁으로 변질되는 것처럼,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감염의 원인을 아무도 알 수 상황인데도 질병에 걸린 사람은 도덕적 비난을 받고, 병에서 회복하지 못하면 패잔병처럼 사회적 눈총을 견뎌야 하며,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해도 후유증을 공개적으로 하소연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라면 병원체가 바이러스든 아니든 질병에 대한 전쟁의 은유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럼에도 병원체의 수나 종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면 그 은유적 표현에서 한계에 다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메타게놈 분석 결과 지구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입자의 수는 무려  $10^{31}$ 개에 달한다고 한다.<sup>16</sup> 이는 전세계 생물의 세포 수의 최소 10배 이상에 해당하고, 무게로는 청고래 7,500만 마리를 합친 2억톤 정도이며, 한 줄로 세우면 은하 65개를 연결한 길이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들은 숙성상 세포 안에서 계속 돌연변이를 거치므로, 그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방대해질 것이다. 이런 대상을 기존의 생물 계통분류 체계에 의존해 분류하고 명명하는 작업은 실현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은유가 인간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령 생명의 위협이 대규모로 긴박하게 진전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야 할 때라면 전쟁의 은유가 사태 해결에 적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사회적으로 만연해온 바이러스와의 전쟁 은유의 부정적 요소와 학계의 연원을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대안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에서는 전쟁의 은유를 평화나 공존의 메시지를 담은 은유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사, 간병인, 환자가족 등을 대상으로 암의 발생과 치료과정에 대해 대화할 때 전쟁의 은유와 여행의 은유를 비교해가며 반응을 확인한 연구가 있었다.<sup>17</sup> 그 결과 전쟁의 은유는 병에서 회복하려는 의지를

---

16) Simmonds, Peter et. al. 2017. "Virus Taxonomy in the Age of Metagenomics." *Nature Reviews Microbiology* 1. p161.

17) Hendricks, Rose K. et. al. 2018. "Emotional Implications of Metaphor: Consequences of Metaphor Framing for Mindset about Cancer." *Metaphor and Symbol* 33(4).

고취시킨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회복되지 못할 경우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비해 여행의 은유는 때때로 고난이 닥치겠지만 죄책감 없이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과 우연히 반갑게 만날 사람이 있어 결과적으로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사실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는 과학적 발견 내용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9세기 말 파스퇴르는 병원체로서 박테리아의 존재를 확인한 후 이들이 세포를 ‘공격’해 질병이 발생한다고 표현했다. 그런데 당시에도 베르나르는 ‘내부환경설’을 내세우며 병원체는 항상 신체 내부에 존재하고 있으며, 몸의 건강 상태에 균형이 깨져 면역능력이 약해지면 병원체가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체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의 수가 조(兆) 규모에 달한다는데, 이들보다 훨씬 많은 수로 존재할 바이러스에 대해 베르나르의 관점을 취한다면 전쟁보다는 평화와 공존의 은유가 좀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 같다.



# 한살림 운동의 정체성 논의에 대해

류하(한알마을)



한살림 조합원이며 무위당 만인회 회원이고 생명평화 결사 등불로 살고 있다. (사)한알마을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사)모심과살림연구회 회원이다. 생명사상과 생명운동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삶의 개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yukim333@hanmail.net

## 1. 다양한 정체성 논의를

『모심과 살림』 15호의 이인우님의 글 「정체성의 시대, 협동조합과 한살림에 대한 몇 가지 견해」에 대해 16호에서 유영희님이 「한살림 정체성 논의를 제안합니다」라는 글로 문제의식과 화두를 제안해 주었다. ‘정체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넌 뭐냐’쯤 되는 이야기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모형이나 모델 중에 어디에 속하냐 하는 이야기도 되고, ‘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쯤 되는 말이기도 하다. 조금 다르게 보면 ‘정체성의 시대’라는 말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기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시대라는 의미로 읽힌다. 이렇게 보면 한살림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느냐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체성 논의’는 거시적인 이야기부터 한살림 내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모두 다루어 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체성 논의는 한살림 운동에 대한 건강한 문제의식을 외현화해서 한살림 운동을 보다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의적으로 읽히는 정체성 논의와 관련해 한살림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일어나는 생각을 몇 가지 이야기 하려한다. 먼저 ‘한살림’과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애초에 한살림 운동은 단순히 하나의 협동조합운동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다. ‘경쟁과 투쟁’보다는 ‘협동’에 기초를 놓고 ‘한살림 운동’을 하자는 이야기였지 협동조합에 운동을 국한하자고 한 적도 없다. 단순히 ‘한살림 운동’이라고 칭할 때 그것이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살림’으로 통칭되는 한살림 생명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한살림 운동 운운’하고 인용하는 언표(言表)의 주인이 누구인가 혹은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한살림 조합원을 비롯해 한살림에 관심 있는 누구나가 한살림 운동에 관해 나름대로 칭하거나 자기소신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말의 내용이나 근거가 한살림의 시작과 관련된 분들의 말씀이거나, 한살림의 권위 있는 기관의 문서이거나, 내부의 논의를 거쳐 다수가 동의한 회의록 등의 공식 사항이 아

나라면 문제제기나 평가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단순히 생각일 뿐이다.

세 번째로는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서의 형식과 내용을 뛰어넘어 누구든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싶다. 한살림 운동이 창조적이기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토론을 통한 창조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 바른 정체성 논의를 위해

‘한살림’ 운동이 시작된 지 30년을 훌쩍 넘겨 40년을 바라보고 있다. 운동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역사 서술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또한 역사 속에서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한다. 정체성은 운동을 바라보는 시선뿐만 아니라 운동에 참여하는 주도세력의 ‘생각’과 ‘활동’의 연속성과도 연동되어 있다. 그것은 사상의 잉태와 구체적 사업의 설계와 문제의식과 논의의 구조를 포함한다. 그런 점에서 1986년 ‘한살림농산’의 창립을 한살림 운동의 시작점으로 보는 시선은 역사 서술의 측면에서도 편중된 시선이지만 한살림 운동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측면에서도 제한적이다. ‘한살림 운동’ 잉태시기의 사상적 맥락에서부터 현재의 운동 상황을 평가하고 궤적을 가늠해보는 내부자 시선의 정체성 인식도 있고, 비슷한 유형의 외부적 사상이나, 주류화 된 운동, 혹은 특정한 이론의 관점으로 대상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외부자 시선의 정체성 인식도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창조적 고유성은 잉태시기의 문제의식과 문제의식의 구현을 위한 방향(vector)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운동 제안그룹의 생각과 문제의식(모순인식)에 의해 주도그룹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한살림 운동’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초기제안그룹의 문제의식과 주도그룹의 의식 형성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문제의식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변화된 상황이 문제의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 한살림 운동 초기의 문제의식

한살림 운동의 정체성과 관련해 이 운동을 시작한 박재일 선생이나 한살림 운동을 뒷받침한 장일순 선생의 문제의식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살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운동은 1986년 ‘한살림 농산’이지만 ‘한살림 운동’과 관련된 포괄적 구상은 1977년 이후라고 두 분 다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한살림 농산의 창립이전에 시범사업으로 원주공동체 소비조합(약칭 원주소협: 현 원주 한살림)을 1985년 창립하고 운영한다. 원주소협은 한살림 이름만 사용하지 않았지 한살림 생협이 구현하고 있는 유기농업과 도농 직거래, 공동체 구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명칭만 달랐지 한살림 운동의 골조는 이때부터 실험되고 있었다. 박재일 선생의 이야기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딱히 생태농업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성에 기초한 전통적인 농업원리에 의거하고, 그 안에 경제가치가 아닌 생태적 가치를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도시와 농촌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 가는 새로운 운동방식을 고민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일본의 생협활동들에서도 많은 생각의 단초를 얻었지요. 도시와 농촌의 연대, 생산과 소비의 협력관계를 고려하면서 농산물 직거래 운동, 유기농 직거래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런 운동을 무어라 칭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어요. 원주에서 시작할 때는 협동조합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협동조합 개념으로는 이상한 양식이지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조합원이라, 조합원의 생활양식이 다른데... 문제는 서울로 갔을 때인데, 원주만 해도 밝음 신협도 있고 작은 지역이라 협동조합을 하기가 쉬웠는데 서울에서는 협동조합 만들기가 워낙 방대한 지역이라 어려운 문제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런 내용을 담아낼 적절한 용어를 고민하던 중에 ‘한살림’이란 용어

가 떠오르더군요. 한살림이 어떠냐고 하니까 장일순 선생과 김지하 시인도 좋다고 하더군요.<sup>1</sup>

한살림 운동은 애초부터 근대적인 협동운동의 틀로 다가선 것이 아니다. 그때 당시까지 한반도 지식인들의 사유의 중심에 있던 서구근대철학과 이에 기반한 민족단일근대국가의 설립, 그리고 성장 및 분배중심의 경제적 근대화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근대산업문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새로운 문제의식에 기초한 것이다. 탈근대적 새로운 문명의 설계 차원에서 한살림 운동을 모색한 것이다.

인간의 심성은 메말라지고, 공동체성이 붕괴되고, 마음은 갈가리 찢어지고, 사람들은 돈·물질·과학기술의 맹신자가 되고, 생태·환경·자연파괴 등 온 세상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이는 물질주의적 산업문명이 이룩한 산업사회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는 한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바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현대산업문명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문명창출이 필요하다고 여기시고 생명운동으로 그 길을 잡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sup>2</sup>

근대적인 협동조합운동과 관련해서, 원주그룹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신용협동조합, 소비조합, 생산협동조합 등 해볼 만한 시도를 다 해본 상황이었다.<sup>3</sup> 단순히 남한의 실험뿐만 아니라 북쪽의 사회주의적 근대화과정도 여러 경로

---

1) 무위당을기리는모임. 2004. “언제나 생명가진 모든 존재와 함께.”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녹색평론사. pp162-183.

2) 위의 글.

3) 김소남. 2017. 『협동조합과 생명운동의 역사』, 소명출판.

를 통해 주시하면서 그 한계를 내다보고 있었다. 한살림 운동의 태동은 근대문명을 넘어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기 위해 기존의 협동 및 협동조합운동의 틀을 넘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 듯’ 새로운 문명은 새로운 협동운동의 가능성을 시도하는 창의적인 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은 사람들의 작품이다. 즉 근대문명과 근대화가 한창 진행 중에 탈근대적 성찰 속에서 새로운 운동이 잉태된 것이다. 다음은 장일순 선생의 목소리다.

본래 유럽으로부터 온 소비조합이나 신용조합, 생산조합이란 압정에 시달림을 받아오던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만, 지금은 대기업의 하청업과 같은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구가 위협해지는 상황에서 ‘신용’도 ‘협동’도 다른 개념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이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무엇이나 그 답이 나와 있는 듯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만, 그것은 환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창조적 진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sup>4</sup>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근대적인 협동조합운동은 근대문명에 포섭되어 끌려가는 측면이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그것은 근대적인 협동조합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였다. 근대적인 협동조합은 근대화의 폐해를 보완하는 근대화를 지향하는 담론일 뿐, 근대문명의 근본적인 문제를 넘어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잉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무위당 선생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사회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나,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사회가 되어야

---

4) 장일순이야기모음. 1997. “풀 한포기도 공경으로.” 『나락 한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독재 때문이나, 그러면 민주화가 되면 해결되느냐, 독재와 관계없이도 사람이나 마을이 다 찢어지는데 그러면 분단 때문이나, 탄압 때문이나, 가난 때문이나, 그런 것들이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사회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었어요. 이진 문명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 아니냐, 그럼 앞으로 이 문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었지요. 기술공학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령 엄청나게 쏟아지는 쓰레기를 기술공학적으로 처리하는 것에도 노력을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결국 쓰레기를 줄이거나 발생시키지 않는 사회와 삶이 도모되지 않고는 세월이 갈수록 인간의 생명도, 생존조건도 더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내는 길은 보다 근원적인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예요. 무위당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이 원시반본(原始返本)인데, 근원적인 데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입장, 모색이라고 생각해요.<sup>5</sup>

요컨대 탈근대 문명이라는 것이 요것이고 요쯤에서 완성된다는 근시안적인 시선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나, 사람의 살림살이와 생각이 어떠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인간 세계에는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겠지만 근대체제는 주체와 객체를 분할하는 이원론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를 나누고, 인간과 자연을 나누고,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나눈다. 농인(農人)과 소비자를 나누고, 민족을 나누고 국가를 나눈다. 이 나뉘는 세계를 넘어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합일의 관계이다. ‘내가 너고 네가 나다’라는 합일의 관계는 우주와의 관계에서 ‘사람이 한울이다’라는 우

---

5) 무위당을기리는모임. 2004. 위의 글.

주적 합일, 한 송이 꽃을 보고 ‘나는 미처 몰랐네 네가 나였다는 것을’이라는 자연과 인간의 합일,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이라는 인간과 인간의 합일을 넘어 생명의 신령성과 합일하는 ‘향아설위(向我設位)’에 이른다. 그것은 한살림 운동이 근대적 관계 의식에서 탈근대적 관계의식으로 전환하는 궁극적 차원의 운동임을 환기시킨다.

근대적 ‘주체’가 개체의 경험과 사유의 존재라는 개인(個人)에 근거(주체성)한다면 탈근대적 ‘주인공’은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적 개체성이자 끊임없이 경험하고 변화하는 과정적 존재(공동체적 주인(主人共)에서 공공성의 주인(主人公)으로 다시 깨달음의 주인(主人空)으로 거듭 변하는 존재)이다. 이것은 근대적 주체의 해체와 종언에 견주어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주체의 다양화나 변이가 아니라 성격이 전혀 다른 ‘한 사람’의 등장을 의미하는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sup>6</sup> 한살림 운동은 근대적 의미의 주체를 넘어 탈근대적 주인공을 기르는 양천주(養天主) 운동이다.<sup>7</sup>

## 과제의 해결을 ‘한살림답게’

한국의 정치나 사회운동은 선진모델을 좋아한다. 그리고 대체로 새로운 모델은 서구에서 찾는다. 이를테면 ‘교육’ 하면 핀란드나 덴마크, ‘유기농업’ 하면 일본이나 독일, ‘협동조합’ 하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하는 식이다. 이러한 모델중심 사유와 정책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인식은 한국의 근대화의 모범답안이 서구라는 생각이다. 공무원들도 톡하면 서구에서 사례를 찾고 선진지를 찾는다. 근대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판도 서구에서 찾는다. 또 한 가지는 근대문명에 대한 성찰을 통해 촉발되고 성장한 민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영역을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제도로 만듦으로써 근대체제에 종속시키거나 의존하게 하는 우를 범한다. 시민사회 운동의 의제들은 대체로 합리적 근대화에 초점이 있지 근대문명을 넘어서 새

6) 주요섭. 2017. “‘한’ 사람 주체성과 ‘나’들의 공동체.” 『모심과살림』 7호, 모심과살림연구소.

7) 백효민. 2021. “장일순에 있어서 동학의 영향에 대한 소고.” 『한국학』 163.

로운 문명으로 가는데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시선은 다분히 서구적인 근대화 시선에 편중되어 있다. 서구적 근대화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대안문명에 대한 우리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대안들은 종종 무시되거나 에너지를 잃기 십상이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탈근대문명의 핵심은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민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가지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자립과 자치(Self-Governance)의 지향이다. 이때 자립과 자치는 자본과 국가에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라 순수하게 민의 공동체적 영역을 의미한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탈근대문명은 한반도를 공간으로 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상적 맥락과 정서에 기반할 때 새로운 문명으로 포월(抱越)할 수 있다. 한살림 운동의 정체성은 『한살림 선언』과 「한살림 운동의 지향」에 담겨 있다.<sup>8</sup>

필자가 보기에 한살림 운동도 탈근대적 지향에 따른 당면의 질문과 과제가 있고 이에 대한 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현실의 과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한살림 운동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살림 운동은 이제 한세대를 넘어가고 있으며, 지구에서는 근대문명의 폐해로 인한 기후위기가 목전에 와 있다. ‘핵’(발전소와 무기 모두)의 위험 역시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농(農)과 건강한 관계 맺기를 통한 탈근대 문명으로의 전환은 농의 고사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분명 근대문명은 종언(終焉)을 향하고 있으나 우리는 대안문명에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를테면 농(農)의 경우 농에 종사하는 인구의 급감과 고령화, 유전자 조작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의 도전, 농지의 사유화에 따른 농지 고유기능의 상실 및 축소 등의 문제와 농지의 오염 및 훼손 등이 증가하고 있다. 한살림이 전개해온 농업살림 밥상살림운동의 성장과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 자체의 모습은 위기다. 이를테면 한살림 운동의 관점에서 탈근대적 ‘농의 희망’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한살림 생협의 성장은 실무자와 활동가의 성장을 가져왔다. 초기 한살림 운

---

8) 1.우리는 우리 안에 모셔진 거룩한 생명을 느끼고 그것을 실현합니다. 2.우리는 우리가 딛고 사는 땅을 내 몸처럼 생각 합니다. 3.우리는 이웃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4.우리는 우주생명의 일원으로서 생태계에 책임지고자 합니다. 5.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나부터 시작합니다.

동은 생산자와 소비자 이자(二者) 중심의 사유였다.<sup>9</sup> 한살림의 실무자들은 한살림의 지향을 구현하는 활동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리고 30여년이 지난 지금 한살림은 ‘생산자’, ‘소비자’에 ‘실무자와 활동가’가 더하여 3자(三者)중심 체계가 되었다. 한살림 내부에는 실무자와 활동가의 구분에서부터 ‘노동’과 ‘활동’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근대적 노동관에서부터 탈근대적 공동체적 노동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노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현실의 제도화된 협동조합 체계속에서 ‘대안적 노동문화’로 재편해 내야 할 과제가 있다. 세 번째로는 근대문명을 넘어 공동체적 문명을 지향한다면 한살림 운동은 한살림 시선의 돌봄 운동을 창안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근대문명 안에서의 돌봄체계는 시장주의적 접근과 정부주도의 복지국가적 접근이 존재해 왔다. 시장 의존적 돌봄은 빈부격차의 문제가 따르고, 국가주도의 돌봄은 민(民)의 자발성이나 자율성을 저하시킨다.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동체적 ‘돌봄 문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한살림답게’ 대안을 만드는 것인가?

## 유연한 협동조합 원칙

협동조합의 정의와 원칙은 단위조합마다 국가마다, 연합기관마다, 협동조합의 종류별로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상황에 따라 늘 변화한다. 국제협동조합 연맹(ICA)이 1995년에 채택한 맨체스터의 정의와 원칙도 그 이전에 있었던 원칙을 수정·보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협동조합 이론가들이나 활동가들은 보완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들을 한다. 이를테면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연표가 누락되었다든가 ‘협동조합과 정치’에 관한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든가

---

9)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살리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한살림 운동 초기 ‘서로살림’ 슬로건에는 실무자나 활동가가 없다. 초기운동에서 이들의 숫자는 작았지만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컸기에 현재의 규모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제는 ‘서로살림’의 범주에 노동문제가 녹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는 이야기다. 몬드라곤 복합체는 1987년부터 몬드라곤 협동조합 10원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ICA의 협동조합의 정의와 원칙이 근대적 협동조합의 경험을 살린 보편적 의미와 가치 면에서 중요하긴 하나 절대적이거나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의 협동조합은 그 나라나 민족의 근대화(산업화)과정에서 나름대로 고유한 민족정서와 지역문화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근대문명의 변화무쌍한 전개 앞에서 변모를 거듭해 온 것이다. 그렇게 보면 자연스레, 한살림 사상과 운동론을 가지고 협동조합활동을 하는 그룹이 따로 한살림 협동조합원칙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한살림에는 이미 『한살림 선언』도 있고, 「한살림 운동의 지향」도 있고 나름 다양한 가치와 원칙들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살림 운동은 근대적인 협동조합운동을 실천했던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실천 활동과 근대문명에 대한 성찰 속에 시작되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근대적인 ‘협동조합운동’ 자체에 중심이 있다기보다는 ‘협동’과 ‘한살림’이라는 ‘생명사상과 공생의 운동’에 방점이 있고,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근대 문명에 대한 대안으로의 다양한 ‘변용’과 ‘가능성(실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협동조합은 다양한 변용이 가능한 유연한 협동운동 형식이 되지 않던가?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기획 | 13,000원

# 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

청소년을 위한 법 설명서

통장의 세뱃돈, 엄마가 써도 되는 건가?

PC방에서 밤 10시 넘었다고 쫓겨났는데, 왜 이런 거야?

열네 살 미만은 형사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게 사실이야?

인스타그램에서 학교 욕을 하면 고소당하나?

청소년 보호법부터 공직선거법까지

청소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의 생활과 권리에 관한 모든 법



#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세상을 모색하는 도서출판한살림



## 도서출판 한살림

한살림 장보기([shop.hansalim.or.kr](http://shop.hansalim.or.kr))와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www.salimstory.net](http://www.salimstory.net) 이메일 [story@hansalim.or.kr](mailto:story@hansalim.or.kr) 전화 02-6931-3612

#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세상을 모색하는 도서출판한살림

## 가난의 서재

탈성장 시대 삶의 전환

성장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빈곤의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 시대에  
더불어 가난을 새로운 삶의 전망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삶의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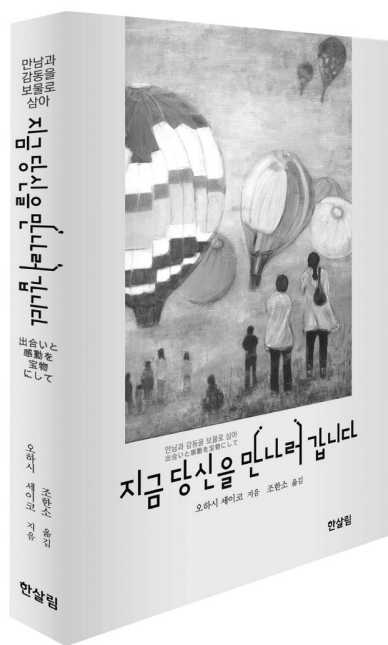
신승철 지음

분류 : 철학에세이  
출간 : 2020년 9월 23일  
판형 : 150 x 225mm  
쪽수 : 268쪽  
값 16,000원

## 지금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만남과 감동을 보물로 삼아

길 위에서의 만남과 연대를 꿈꾸는  
이들에게 '만남·공생·노동·생명'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한 여성활동가의  
놀라운 인생이야기



오하시 세이코 지음 | 조한소 옮김

분류 : 에세이(자서전)  
출간 : 2020년 11월 10일  
판형 : 148 x 225mm  
쪽수 : 304쪽  
값 16,000원

도서출판 한살림

한살림 장보기([shop.hansalim.or.kr](http://shop.hansalim.or.kr))와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www.salimstory.net](http://www.salimstory.net) 이메일 [story@hansalim.or.kr](mailto:story@hansalim.or.kr) 전화 02-6931-3612



재생종이로 만든 책



ISSN 2287-5972



값 8,000원